

#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2021-08

수시연구

A Study on Connected Cooperation (CC)  
among the Ministries Related to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윤 주  
김진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시연구 2021-08

#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Connected Cooperation (CC) among  
the Ministries Related to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윤 주·김진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책임

---

윤 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 연구개요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 최근 지역관광개발의 대상이 되는 관광자원의 영역은 전통적인 역사·문화자원 뿐 아니라 과거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일상생활 공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의 다변화와 타 산업 영역으로 확장 및 융복합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은 정책환경변화에 맞춰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방식이 변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관광과 연계한 융복합 형태로 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 사업에 유사 및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다부처 융합예산’ 을 2020년 4.8조원에서 2021년 6.3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있음
- 지역에서 추진되는 중앙부처 사업들은 정책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가 중복되거나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조성 사업만 추진되는 등 단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 지역관광개발정책의 일관성 있는 방향 설정과 부처간 유사 중복투자의 방지 및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특정 부처의 독자적 지역관광개발 추진보다는 다양한 조직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부처간 연계 협력적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제고 및 관광부분 시너지 창출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첫째, 지역개발정책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지역관광에서 부처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유관부처 지역개발정책 사업 추진사례 및 동향을 분석하여 지역관광개발과 연계가능한 부처별 사업 분야와 연계유형 등을 도출하고자 함
  - 둘째, 지역관광개발사업과 타부처 유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

- 발사례를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연계협력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함
- 셋째,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관 부처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범위 및 방법

### 가.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사업이 추진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고자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함
- 또한, 본 연구에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부처간 연계협력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함
  - 첫째, 부처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타부처 연계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역관광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관광관련 사업으로 확대하여 보고자 함
  - 둘째, 지역에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협력의 경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 사업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지역자율제정인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포함한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보고자함
- 부처간 연계협력 대상이 되는 중앙부처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광범위하게 접근하고자함
  - 중앙부처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지역에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협력 가능한 사업영역과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대상적 범위를 지역주도 및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정책사업 중 지자체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함

### 나.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 타부처 지역관광개발사업 담당자 및 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사례조사,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함

## 2. 지역개발정책 환경변화 및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 분석

### 가. 지역개발정책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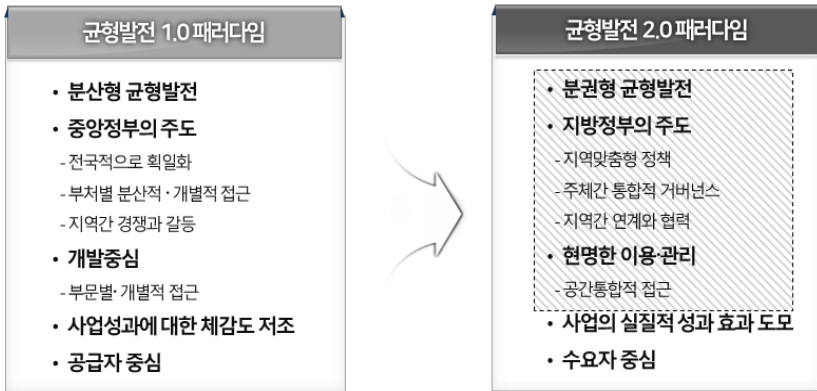
#### 1) 지방분권시대: 지역 중심의 개발정책 지향

- 문재인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제시함
- 2019년에 16개 중앙부처가 맡던 46개 법률 사무 400개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됨
  - 해양수산부(135개), 국토교통부(70개), 여성가족부(51개) 순으로 사무가 이양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이양 사무는 관광자원개발사업,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폐관 신고(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등 이양됨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이양 사업은 7조 7천억 원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어업기반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 지방이양 사업은 7조 5천억 원으로,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 기존 도시활력증진사업(시·군·구),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 사업은 관광자원개발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일부 등으로 대부분 지역밀착형 사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됨
-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균특회계 계속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관광, 식품, 지역 특성화산업, 농어업기반, 하천사업 등의 사업이 모두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한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함 (박진경, 김현호, 2019)

#### 2) 국가균형발전: 지역 주도적 다양한 협력

-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며, 목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 것이며, 추진방향은 ①(지역주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중앙은 지원, ②(사람중심)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우선순위, ③(제도화)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임

[그림 1] 균형발전 패러다임 변화



-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되고 있으며,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수적임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부등은 지역 활성화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해 부처 사업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1〉 유관부처 주요 지역개발사업

정부부처	추진사업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노후·유휴 문화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거나 잠재력 있는 지역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 하드웨어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 산업,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적 전략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투자선도지구	•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도시재생뉴딜	•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쇠퇴한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활성화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 농업유산, 체험목장, 양조장, 농촌체험마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 농촌 고유의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농촌관광협업체 지원
	농촌협약공모사업	•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3) 부처 간 연계협력: 맞춤형 지원

- 최근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고령화, 인구소멸, ESG, 등 많은 정책 이슈들은 본질적으로 정부부처나 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부처 혹은 관련 정부 기관간의 연계·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사업(KTTP)』 문체부를 비롯하여 9개 부처가 연계·협력하여 교통, 숙박, 쇼핑 등의 기반을 보완하여 방한 관광객을 선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종합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부처 간 긴밀한 R&D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다부처공동사업 선정 등을 위해 사업 기획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위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4) 종합 분석

-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등 정책 환경 변화의 시기에 관광분야의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음

〈표 2〉 종합 분석

키워드	환경 변화	흐름
[목적] 지방 분권 "지역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li> <li>→ 관광자원개발사업 이양(7개 사업),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주체 전환</li> <li>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 부여</li> <li>③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 역량 확대</li> <li>④ 민-관 협력 등 다양한 개발 주체 참여 필요성 요구 등</li> </ul>
[방식] 국가균형발전 "다양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목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li> <li>→ 부처간 연계 협력 필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등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li> <li>②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주체)역량 강화</li> <li>③ 지자체의 재원 및 자율성 확보</li> <li>④ 여러 부처와 기관 간 연계·협력</li> </ul>
[내용] 부처간 연계협력 "맞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처나 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부처 혹은 관련 정부 기관간의 연계·협력이 중요</li> <li>→ 범부처 사업패키지 맞춤형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li> <li>② 협동개발사업 촉진</li> <li>③ 성과 보급 확산 및 지원체계 강화</li> <li>④ 다부처 공동사업의 시너지 창출</li> </ul>

## 나.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 분석

### 1) 분석 개요

-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지역관광개발의 패러다임이 중앙집중형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점차 지역 중심의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관광개발 방식도 변화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유관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관광개발 지원범위 파악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함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공모사업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업은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6가지임

〈표 3〉 유관부처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 분석 범위

정부부처	추진사업	추진시기	사업 특징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후지역(성장축진지역) 대상 지원 사업</li> <li>• 하드웨어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 산업,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적 전략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li> </ul>
	투자선도지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li> <li>• 발전축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여 지원</li> </ul>
	도시재생뉴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쇠퇴한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활성화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li> </ul>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국가어항 제외 사업)</li> </ul>
농림축산식품부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유산, 체험목장, 양조장, 농촌체험마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 농촌 고유의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농촌관광협의체 지원</li> </ul>
	농촌협약공모사업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지원</li> </ul>

## 2) 종합 분석

### ① 특징

- 지역자원 활용에 있어 관광자원사업 발굴 요구도 증대
  - 지자체 대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유관 부처의 공모사업들은 최근 지역의 관광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지역역량 및 여건을 고려한 사업기획 등 지역 자율성 부여
  - 지방분권 이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방식은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사업으로 기획이 가능하도록 유형을 통합하고 방향성만 제시하는 등 지역 자율성을 고려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부처 연계협업 사업 추진 기회 제공
  - 지역개발에서 타 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계 가능한 부처별 대상 사업을 제공하는 등 부처 연계사업을 기존계획에 포함하고 있음

### ②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유형도출

- 지역관광개발에서 유관부처 공모사업과 연계가능 한 분야 및 유형을 파악하고자 관광관련 사업을 정책사업 영역으로 두고 있는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연계성을 찾고자 하였음

〈표 4〉 부처간 연계사업 위한 유형 제시(안)

연계 가능 유형(안)	주요 특징	부처간 연계사업
재생기반형 (기반시설 등)	인구유출로 인해 활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필요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국토부)</li> <li>• 투자선도지구 (국토부)</li> <li>• 도시재생뉴딜(국토부)</li> <li>• 어촌뉴딜300 (해수부) 등</li> </ul>
관광활성화형 (콘텐츠, 프로그램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콘텐츠 및 관광상품,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국토부)</li> <li>• 투자선도지구 (국토부)</li> <li>• 마을생태숲 조성 (산림청)</li> <li>•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농림부)</li> </ul>
관광조직형 (인력 및 조직 등)	부처 연계 협력을 위해서 새로운 관광조직체계, 역량이 필요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농림부)</li> <li>• 농촌협약공모사업(농림부)</li> </ul>

### 3. 연계협력 추진사업 사례 및 의견조사

#### 가. 부처 연계사업 사례분석

##### 1) 분석 개요

-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계 사례의 유형은 부처 중심의 연계협력사업 사례와 지자체 중심의 연계협력사업 사례로 구분함
-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처연계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협력사업 대상에 대한 추진 현황 및 개요, 협력 대상 및 협력 사업 내용, 연계협력 사업 추진 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등을 조사함

〈표 5〉 사례 분석 대상

구분	대상	선정 사유
부처 중심 연계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업무 협약 사업</li> <li>■ 디엠지(DMZ) 평화의 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간 협력 방식 및 협력 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청 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간, 사업간 연계협력 사례 조사</li> </ul>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양 대봉산휴양밸리</li> <li>■ 단양다누리센터</li> <li>■ 레인보우 힐링관광지</li> <li>■ 제천 익림지들 자연치유 특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의 예산이 융합되어 지자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관광개발사업 사례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화성 관광자원 육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중심의 부처 예산이 융합되어 지역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례 조사</li> </ul>

##### 2) 종합 분석

##### ① 부처 중심 연계협력사업

- 협약 방식을 통한 부처간 협력사업 추진
  - 부처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 MOU체결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성 및 내용을 문서 등으로 합의하여 진행함
- 통합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부처간 추진사업 분야 및 역할정립

-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부처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추진가능 협력사업을 제시함

②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사업

■ 단위 사업별 부처예산사업 중심의 퍼즐식 맞춤형 협력 사업방식

- 부처별 연계협력을 고려한 관광개발계획수립이 아닌 단위 사업별로 추진되는 부처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유사분야 기존사업(타 부처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

■ 동일 사업 부지 및 사업내용으로 부처간 예산 조달과정에 중복성 문제: 사전기획 추진

- 단지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부처별 조달되는 예산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함

■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별도전담 조직 운영

- 대규모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단일 부서 중심의 부처형 지원사업 발굴 한계가 있음

■ 부처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완성형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 가능

- 단지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단지 내 연결도로, 상·하수도 등 공동 기반시설 설치의 문제가 발생함

〈표 6〉 시사점

구분	분석 주요 내용
부처중심 연계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방식을 통한 부처간 협력사업 추진</li> <li>• 통합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li> <li>• 부처간 추진사업 분야 및 역할정립</li> <li>→ 중앙부처의 정책사업 영역을 고려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필요</li> <li>→ 부처 연계 사업추진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 효과성 또는 지속성 문제</li> </ul>
지자체중심 연계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 사업별 부처예산사업 중심의 퍼즐식 맞춤형 협력사업으로 추진</li> <li>• 동일 사업 부지 및 사업내용으로 부처간 예산 조달과정에 중복성 문제</li> <li>•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별도전담 조직 운영</li> <li>•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개발 연계사업 발굴로 완성형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 가능</li> <li>→ 부처예산 사업을 발굴하여 동일한 사업권역에 퍼즐식으로 다부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대상지 간 연계로 추진되는 수준</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유관부처 연계사업(예산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속적 확장 추진</li> </ul>
▼	▼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양한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수립 필요</li> <li>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지역관광개발사업 발굴 필요</li> <li>③ 부처간 협력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통합운영 등 전담 조직 필요</li> </ul>

## 나. 부처 연계사업 심층분석

### 1) 분석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도의 사업발굴을 지원하는 지자체 공모사업임
- 서천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2019년에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서천군 사업대상자인 장항읍 일원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주요 정부부처의 자원개발사업이 다수 추진 중인 지역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부처 간 연계협력방안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지역임

〈표 7〉 심층분석 방법 및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분석 방법	서천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관계자 자료 협조 요청 및 인터뷰
분석 내용	관련계획 검토 등 사업추진 여건분석 과정 연계방안 검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방식 사업별 연계방안 논의 내용 및 주요 절차 사업계획 내용 조정 및 연계사업

### 2) 종합 분석

#### ① 사업추진 단계별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부처간 연계협력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선정과 동시에 장항읍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과의 통합적인 추진방안 검토를 위해 행정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공간계획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사전 검토)으로 타부처 사업 간 중복문제 해결
  - 서천군은 계획공모형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 지역에서 진행 중인 유관 부처별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성 최소화,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함
  - 현재는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인 부처별 사업을 각각 확보한 이후에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연계협력 보다는 일단 국비확보가 우선되고 있는 실정임

〈표 8〉 사업추진 단계별 한계 도출

<p>예산 확보 위한 사업계획 수립 단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서별로 부처별 국비 확보에 우선한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내 유관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나 형식적 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li> </ul> </li> <li>부처별로 국비공모사업 등 선정 과정에서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한계로 유사 중복사업 다수 지정되는 문제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군은 동일한 장항 구도심 일원에 문화관광 재생형 사업 중복 추진</li> </ul> </li> </ul>
<p>사업 계획 구체화단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 해당 부서 차원에서 용역사에 의존해 사업계획 구체화</li> <li>사업 간 중복성 최소화 및 연계협력방안 마련 위한 협력체계 미흡</li> </ul> </li> <li>서천군의 경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유사 사업 간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파악하거나 실제 지침으로 연결하는 데는 지역내 추진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결정사항을 공식화하고 공동 실행 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li> </ul> </li> </ul>
<p>사업 실행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적인 사업추진체계에 따라 사업 실행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서별로 용역, 민간위탁 등의 방식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업집행</li> <li>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한계로 사업 시너지 제고 등 한계</li> </ul> </li> <li>서천군 전역에 추진 중인 유사사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나, 관광부문 조직은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관광 전담조직 구성 및 지역 내 민간조직 협의회 등 조성 예정</li> </ul> </li> </ul>

## ② 주요 시사점

- 부처간 연계협력형 지역관광자원개발이 가능한 협업모델 발굴 필요
  -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부처 간 연계협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 당시부터 부처 협업 모델을 갖춘 연계협력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공모 혹은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여건에 맞는 지역관광자원개발 추진 및 부처간 중복성 검증이 가능한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필요
  - 지역마다 사업내용과 구성이 다양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대상지 인근에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이 동시다발로 공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전에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사후관리 필요
  -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시점에서부터 지자체는 통합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 지자체 관계자 의견조사

### 1)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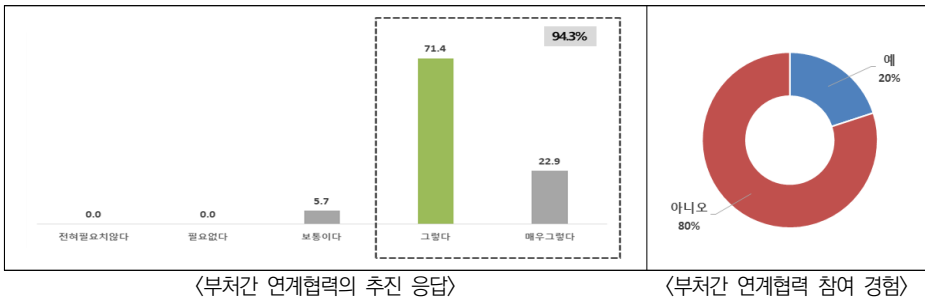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관광개발사업 관련 유관부처 연계협력 추진 현황과 효율적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 조사 대상은 기초자치단체 지역 관광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며 조사 시기는 2021년 10월 11일에 실시하여 10월 22일까지 약 2주 동안(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함
- 본 설문의 주요 문항으로 지방이양 사업과 부처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연계협력에 대한 추진경험과 동기 및 내용, 지방이양사업또는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또는 정책적 요구사항,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업영역(분야)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함

〈표 9〉 설문조사 문항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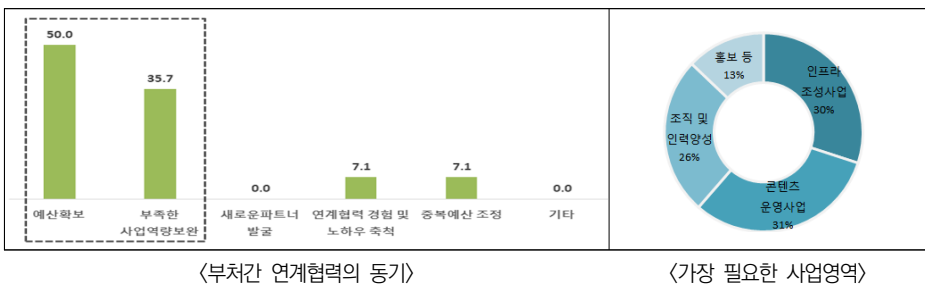
항목		설문 조사 내용	비고
부처간 연계협력 추진 참여 현황		-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필요성 여부	-
		- 추진경험 - 연계협력 사업 추진 동기 - 연계협력 사업 내용 작성	자율기술
부처간 연계협력의 필요성	지방이양사업 (문체부+타부처) 또는 부처 지역 개발사업 연계 협력 견해	- 관광관련 사업 연계협력 필요 -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한계 - 다부처 연계협력사업 확대 추세 - 한정된 지역관광개발사업 예산 활용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 중요 - 중복성 문제와 관련하여 연계협력 추진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	-
부처간 연계협력의 방안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또는 정책적 요구사항	-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가능 지자체내 전담기구 필요 - 부처별 사업추진 절차간소화 및 연속적 추진 필요 - 연계협력을 지원 중앙정부 신규사업 발굴 필요 - 예산절감 및 중복추진 예방 등 인센티브 제공 - 성공 사례 발굴 및 추진방법 등 정보 공유/확산 - 지속적 및 효과적인 관리 운영 위한 사후 관리방안 -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업영역(분야)	-
		자체 수행 계획 의향	-
		향후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제안	자율기술
지방이양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 자율적 관광개발사업 기획 추진 여건 조성 정도 - 예산 확보에 대해 지방이양 이전 용이 정도 -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도 정도 - 향후 지자체 포괄보조금 예산비중 증가 예상	-

## 2)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부처간 연계협력의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 >> 실제 참여 경험은 20%
  - 부처간 연계협력 추진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94.3%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지자체는 20%로 나타남
  -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내 전담기구 설치, 소통, 행정처리 등 사업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남



- 부처간 연계협력의 추진 동기 >> 다양한 사업 유형 필요
  -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 참여 및 추진 동기로는 예산 확보, 부족한 사업역량 보완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콘텐츠, 인프라 조직 및 인력양성 등 유형별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연계협력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업영역 분야는 콘텐츠, 인프라, 조직 및 인력양성 등 큰 차이가 없었으며, 부처간 연계협력의 유형이 한 부문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부문의 유형별 연계방안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계협력의 대한 이해 >>한정된 지역관광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협력이 필요
  -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부처간 연계협력은 한정된 지역관광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서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자체 한계, 관광관련 사업에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부처간 연계협력은 인프라, 콘텐츠, 조직 및 인력 등과 연계하여 사업 중복성을 줄이고, 개별적 추진 방식보다는 사업간 내용 및 공간적 연계를 통한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부처간 연계협력의 연속적 추진 >>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 효율적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요구사항으로 부처별 사업추진 절차간 소화와 연속적 추진 필요, 연계협력 지원 중앙정부 신규사업 발굴 필요, 성공사례 발굴 및 추진방법 등 정보 공유 확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연속적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계협력사업 기반을 마련과 지속적 연계협력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 4. 관광자원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 가. 기본방향

-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 관광부문의 시너지를 위해 다양한 부처간의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지자체 관광자원개발에서도 타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협력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정책추진 현황 및 사례분석, 지자체 관계자 의견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처간 연계협력과 지자체가 타부처 지역개발사업을 연계협력 하는 관점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함

## 1 중앙부처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 부처간 연계협력 기반 마련
-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추진체계 구축
- 부처간 연계협력 지원체계 구축

##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 협약을 통한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관리체계 구축

### 나. 중앙정부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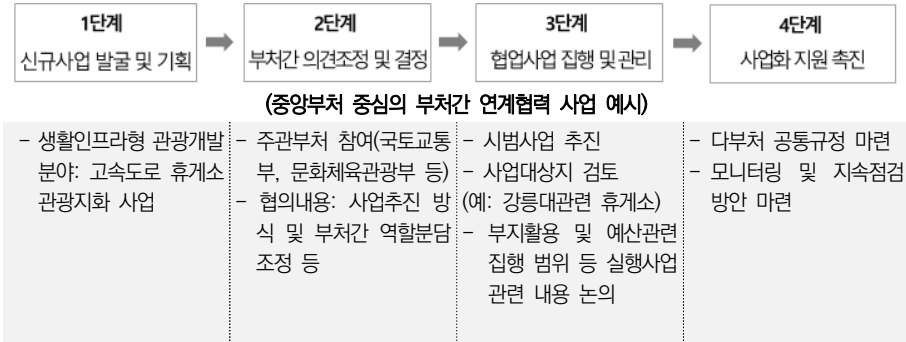
#### ① 부처간 연계협력 기반 마련

- (가칭)범부처 관광협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이 의장이 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담당 국장(당연직 위원), 전문가(위촉직) 등으로 구성함
  - (가칭)범부처 관광협업추진위원회 내 주요 관광개발 정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른 부처 간 소위원회 구성·운영함
- 유사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가칭)관광개발사업 사전검토 추진단 구성·운영
  -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광개발 사업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사업 사전검토제(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사전 검토제는 범부처 관광협업추진위원회 내 관계 부처별 산하 연구원(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개발사업 사전검토 추진단’을 구축하여 중앙·지자체 관광관련 사업 중 예산규모,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요 사업 발굴 및 선정, 사전 기획 과제와 공동 기획 과제 점검 등을 추진

#### ②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추진체계 구축

- 사업추진 단계별 관광개발사업 협력추진 모델
  - 부처별 연구기관 및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한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추진, 관리까지 연계협력 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 연계협력추진모델 발굴
  - (1단계)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획
  - (2단계) 부처간 의견 조정을 통해 세부사항 결정

- (3단계) 협력사업 집행 및 관리
- (4단계) 사업성과 공동 활용 및 사업화 지원 촉진



#### ■ 부처간 연계협력 가능한 사업영역 검토

- 관광개발 분야는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다수의 관광개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브랜드화하여 부처의 대표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환경부(자연생태형 관광자원 개발): 환경과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국립공원 관광개발, 생태관광지 개발, 자연친화환경 관광지 개발 등의 관광개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생활인프라형 관광개발): 지역경관도로 개발사업, 생활SOC 시설을 활용한 관광개발복합화 사업, 빈 건물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 교통시설 등을 활용한 다목적 관광기능화사업,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화 사업 등의 관광개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해양형 관광개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섬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 해안경관 및 해안선을 활용한 개발 사업, 항구 등 해양인프라시설을 활용한 다기능 복합화 사업 등의 관광개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③ 부처간 연계협력 지원체계 구축

##### ■ 부처별 산하기관 간 공동 R&D 활성화

- 부처별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요구되는 조사·연구, 통계, 평가 등을 추진하기 연구기관을 두고 있으며, 부처별 연구기관 및 산하기관 간 관광개발 R&D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관광개발 정책추진단’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가칭)부처협력 관광개발 포럼 정례화
  - 다양한 전문가, 공무원,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가칭)부처협력 관광개발 포럼을 정례화하여 상시적으로 모여 주요 공동 협력 정책을 논의하고 발굴하여 실제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 ① 협약을 통한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 (가칭) 관광자원개발협약사업 추진
  - 지자체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이양 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을 공간개발계획으로 사전에 주도로 수립하도록 지원함
  -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거점형 관광지에 대한 확장(재생) 또는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타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가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 수립 등을 지원함
  - 협약에 따라 지자체는 공간계획에 담은 내용을 추진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계획수립 지원(컨설팅 포함) 및 신규예산으로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비용 지원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함
- 연계사업 구성제안
  -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구성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 가능함. 첫째 관광자원 인프라, 둘째 기반시설, 셋째 관광콘텐츠, 넷째 조직 및 인력구성 등을 포괄하여 구성함
  - 부처 연계사업은 사업대상이 되는 거점공간에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확정되었을 경우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부처사업 간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 가능함

〈표 11〉 관광자원개발공간계획 수립시 연계사업 구성(예시)

사업영역		대상 사업(예)
관광자원 인프라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사업 (시도군 편성사업)	• 관광자원개발사업(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국가여가캠핑장 조성 등 시설 사업)
	• 유관부처 지방이양사업	•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지원 등
	• 부처 공모사업 등	• 해수부 어촌뉴딜 300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포함)
기반시설 (기초 인프라)	• 유관부처 지방이양사업 • 부처 공모사업 등	• 지역개발지원(예: 관광거점지역과의 교통연계를 고려 하여 교량 및 도로시설 정비 추진)
관광콘텐츠 등	• 부처 공모사업 등	• 농림수산축산부 지역수요맞춤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포함)
	• 지자체 예산사업(시도군)	• 지자체 예산 관광사업
조직 및 인력	• 지자체 예산사업(시도군)	• 지자체 예산 관광사업
	• 부처 공모사업 등	• 국토부 도시뉴딜재생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포함)

자료: 연구진 작성

#### ■ 사업추진 유형제안

- (사업유형) 3가지 사업유형(예시)을 토대로 ① 기반시설 중심의 재생기반형 ② 관광활성화형(콘텐츠, 프로그램, 시설 등 유형별 특화), ③ 관광 조직형 등으로 타 부처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음
- ‘기반시설 중심의 재생기반형’: 기존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가능하지 않은 규모이거나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음
- ‘관광활성화형’(콘텐츠, 프로그램, 시설 등 유형별 특화): 지자체의 지역관광개발현황 및 진단을 통해 거점관광지 및 인프라는 잘 되어 있거나 군부지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기초지자체에서 선호함
- ‘관광조직형’(인력 및 조직 등)으로 이는 연계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며 지역내 자체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형을 제시함

#### ②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관리체계 구축

##### ■ 관광개발 통합관리전문기구 설치·운영

- (1단계) 지자체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자

원개발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행조직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각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는 관광관련 사업추진 실행기관인 공사·공단, 협·단체 등과 연합체를 구성, 각 기관별 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사전 연계·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함

- (2단계) 중앙부처에 산재한 지역발전 관련 사무를 발굴, 통합·연계 관리하는 모형으로 향후,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통합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역협약 체결 및 예산지원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조정과 협력을 촉진함

### ③ 부처간 협력사업의 지속적 관리운영 지원

- 부처간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함
- 사업에서의 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는 해당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처간 협력에 신뢰를 형성하게 되며 이에, 사업 특성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과 지표를 설정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함
- 또한, 부처간 협력형 관광개발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사업 추진기간 동안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된 모니터링단 등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니터링과 환류체계를 구축함

## 5. 결론 및 제언

-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등 정책 환경 변화의 시기에 관광분야의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으며, 최근 타부처의 지역개발정책에서 지역발전 수단으로 관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관광분야의 부처간 연계협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부처 간 연계협력은 개별부처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중복 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그러나 관광개발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연계·협력을 필요로 하나 부처간 협력추진을 위한 협력창구 미흡, 협업 의지 부족, 유사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부처간 협력사업 추진은 쉽지 않음
- 부처간 연계협력 추진 모델발굴에 앞서 정책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 등의 성과를 통해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또한 부처간 연계협업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가 명확해야하나 앞서 제시한 협약을 통한 부처간 연계협력사업(가칭, 관광자원개발협약사업)의 경우 제도적 근거가 미비함
  - 농촌협약 공모사업,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의 사례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사업 기획 및 부처간 협력 거버넌스인 관광협업추진위원 구성을 함께 모색하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임

---

# 목차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8
 <b>제2장 지역개발정책 환경변화 및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 분석 .....</b>	 <b>9</b>
제1절 지역개발정책 환경변화	11
1. 지방분권시대: 지역 중심의 개발정책 지향	11
2. 국가균형발전: 지역 주도적 다양한 협력	16
3. 부처 간 연계협력: 맞춤형 지원	20
4. 종합 분석	23
제2절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 분석	24
1. 분석 개요	24
2. 유관부처 지역개발 공모사업	27
3. 종합 분석	42
 <b>제3장 연계협력 추진사업 사례 및 의견 조사 .....</b>	 <b>45</b>
제1절 부처 연계사업 사례 분석	47
1. 분석 개요	47
2. 사례 분석	49
3. 종합분석	65

제2절 부처 연계사업 심층 분석	69
1. 분석 개요	69
2. 심층분석 주요내용	70
3. 종합 분석	81
제3절 지자체 관계자 의견 조사	84
1. 조사 개요	84
2. 분석 결과	86
3. 종합 분석	97
<b>제4장 관광자원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b>	<b>99</b>
제1절 기본 방향	101
제2절 연계협력 추진방안	103
1. 중앙정부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103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109
<b>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b>	<b>117</b>
제1절 요약 및 결론	119
제2절 정책제언	122
 참고문헌 /	125
 ABSTRACT /	129
 부록 /	133

---

## 표 목차

〈표 2-1〉 자치분권 전략 및 과제 (6대전략 및 33개 과제)	12
〈표 2-2〉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지방이양 사무 현황	12
〈표 2-3〉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15
〈표 2-4〉 유관부처 주요 지역개발사업	18
〈표 2-5〉 2021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공모)	19
〈표 2-6〉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함된 기 선정된 다부처 공동사업	21
〈표 2-7〉 종합 분석	23
〈표 2-8〉 유관부처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 분석 범위	25
〈표 2-9〉 유관부처 관광자원개발 사업 분석 기준	26
〈표 2-10〉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 개요	28
〈표 2-11〉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유형 변화 및 선정 규모	30
〈표 2-12〉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개요	31
〈표 2-13〉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33
〈표 2-14〉 어촌뉴딜 300 사업 개요	36
〈표 2-15〉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사업 추진과정	37
〈표 2-16〉 어촌뉴딜 300 사업 주요 내용	38
〈표 2-17〉 농촌관광협의회 공모사업 개요	39
〈표 2-18〉 농촌협약 공모사업 개요	41
〈표 2-19〉 부처간 연계사업 위한 유형 제시(안)	44
〈표 3-1〉 사례 분석 대상	48
〈표 3-2〉 사례 조사 방법과 조사 내용	48
〈표 3-3〉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 개요	49
〈표 3-4〉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 개요	50
〈표 3-5〉 디엠지(DMZ) 평화의 길 사업 개요	51
〈표 3-6〉 디엠지(DMZ) 평화의 길 통합운영체계(안)	52
〈표 3-7〉 주요 부처별 디엠지(DMZ) 평화의 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52
〈표 3-8〉 초정 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 개요	53

〈표 3-9〉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 세부 사업 내용	54
〈표 3-10〉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사업 개요	55
〈표 3-11〉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부처별 사업 내용	56
〈표 3-12〉 단양다누리센터 사업 개요	57
〈표 3-13〉 단양다누리센터 부처별 사업 내용	58
〈표 3-14〉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사업 개요	59
〈표 3-15〉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부처별 사업 내용	60
〈표 3-16〉 제천 의림지돌 자연치유 특구사업 개요	61
〈표 3-17〉 제천 의림지돌 자연치유 특구사업 부처별 사업 내용	62
〈표 3-18〉 수원화성 관광자원 육성사업 개요	63
〈표 3-19〉 수원화성 관광자원 육성사업 세부 사업 내용	64
〈표 3-20〉 종합분석	68
〈표 3-21〉 심층분석 방법 및 주요 내용	70
〈표 3-22〉 장항 활성화 사업 추진 세부 사업 현황	71
〈표 3-23〉 사업조정 절차	73
〈표 3-24〉 서천군 관련사업 추진 현황 검토	74
〈표 3-25〉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77
〈표 3-26〉 시범사업 계획 상 중복사업 조정	79
〈표 3-27〉 이색 스테이 관련 사업 조정 방안	79
〈표 3-28〉 장항 일원 기 운영 중인 관광콘텐츠 연계협력 방안	80
〈표 3-29〉 장항 일원 인프라 연계 콘텐츠 접목 사업	80
〈표 3-30〉 캠페인 및 홍보 사업 연계 방안	81
〈표 3-31〉 설문조사 문항 구성	85
〈표 3-32〉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필요성	86
〈표 3-33〉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동기	87
〈표 3-34〉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사업 내용	88
〈표 3-35〉 지방이양사업 또는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견해	89
〈표 3-36〉 지방이양사업 또는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기타의견	90
〈표 3-37〉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요구사항	91
〈표 3-38〉 효율적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요구사항 기타의견	92
〈표 3-39〉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업영역(분야) (복수응답)	92
〈표 3-40〉 연계협력 종료 후 자체 계속 수행 의향여부	92
〈표 3-41〉 지방이양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93

〈표 3-42〉 지방이양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환경에 대한 추가 의견	94
〈표 3-43〉 연계협력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 및 보완사항	95
〈표 4-1〉 관광자원개발공간계획 수립시 연계사업 구성(예시)	111
〈표 4-2〉 협약에 근거한 부처간 협력사업 모니터링(안)	115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8
[그림 2-1] 부처별 균특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	13
[그림 2-2] 균형발전 패러다임 변화	16
[그림 2-3]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사업구조	35
[그림 2-4]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41
[그림 3-1]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필요성 (단위: %)	86
[그림 3-2]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동기 (단위: %)	87
[그림 3-3]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견해 (단위: %, Top2 값)	99
[그림 3-4]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요구사항 (단위: %, Top2 값)	91
[그림 3-5] 지방이양 관광자원개발 추진 현황 (단위: %, Top2 값)	93
[그림 4-1] 중앙정부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 접근	103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 접근	109
[그림 4-3] 사업추진 유형 제안(안)	112
[그림 4-4]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안)	114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 최근 지역관광개발의 대상이 되는 관광자원의 영역은 전통적인 역사·문화자원 뿐 아니라 과거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일상생활 공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의 다변화와 타 산업 영역으로 확장 및 융복합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 중앙정부 부처들은 국민복지와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관광정책을 각 부처의 고유한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관광영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범주를 넘어 환경부 생태관광, 국토교통부 생활SOC 시설 등 생활관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 및 음식관광,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행정안전부 섬관광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은 지역자원의 가치증대 및 효율적 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관광과 연계한 정책 사업이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역균형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확대라는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소득 창출 수단으로 유관부처에서 관광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방식이 변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관광과 연계한 융복합 형태로 사업추진이 확대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도록 제안 하고, 지원 사업으로 기반시설과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타 부처 연계 가능)를 융합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자연문화자산을 기반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아이টে으로 기획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부처 간사업간 연계로 중복 사업 방지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 사업에 유사 및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다부처 융합예산’ 을 2020년 4.8조원에서 2021년 6.3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있음
  - 협업 과제 중 우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우선 반영, 기존 사업비 증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부처 성과관리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도입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다부처 정책협력사업으로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사업(KTTP)』 선도모형을 개발하고 9개부처 합동으로 관련계획을 공동기획하여 다부처 융합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함
- 지역에서 추진되는 중앙부처 사업들은 정책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가 중복되거나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조성 사업만 추진되는 등 단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사업 효과성에 한계가 있음
  - 지방분권으로 지자체의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동일 부지 또는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 중복성, 유사 사업간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역관광개발정책 방향 설정과 부처간 유사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그리고 특정 부처의 독자적 지역관광개발 추진보다는 다양한 조직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부처간 연계협력적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서천군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인 장항읍 일원에 15개의 타부처 지원사업을 분석하여 기존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임
- 또한, 2020년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들간의 연계 협력적 관광개발 이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이러한 협력적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음

##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제고 및 관광부분 시너지 창출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세부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개발정책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지역관광에서 부처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유관부처 지역개발정책 사업 추진사례 및 동향을 분석하여 지역관광개발과 연계가능 한 부처별 사업 분야와 연계유형 등을 도출하고자 함
  - 둘째, 지역관광개발사업과 타부처 유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례를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연계협력에 있어 선행되어야할 사항을 도출함
  - 셋째,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관부처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공간적 범위

-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사업이 추진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고자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함

#### 나. 시간적 범위

- 본 연구 수행에 있어 각종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며 유관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은 최근 5년 이내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지속 사업으로 한정하고자 함

#### 다. 대상적 범위

- 본 연구에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부처간 연계협력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함
  - 첫째, 부처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타부처 연계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역관광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관광관련 사업으로 확대하여 보고자 함
  - 둘째, 지역에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협력의 경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 사업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지역자율계정인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포함한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보고자함
- 또한, 부처간 연계협력 대상이 되는 중앙부처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

- 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범부처로 확대하여 접근하고자 함
- 그러나 중앙부처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지역에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터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협력 가능한 사업영역의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대상적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였음
  -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주도 및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정책사업 중 지자체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을 유형화 함

## 라. 내용적 범위

- 첫째, 최근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개발정책 환경변화와 유관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을 분석하고 지역관광개발 사업과 연계 가능한 분야를 도출함
- 둘째, 사례분석은 부처 중심 연계협력과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으로 구분하여 추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심층사례분석을 통해 부처간 연계협력과정에서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지역 관광개발 담당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에서 부처간 연계협력 추진 현황과 연계협력 방안 도출 등 시사점을 파악함
- 넷째,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관부처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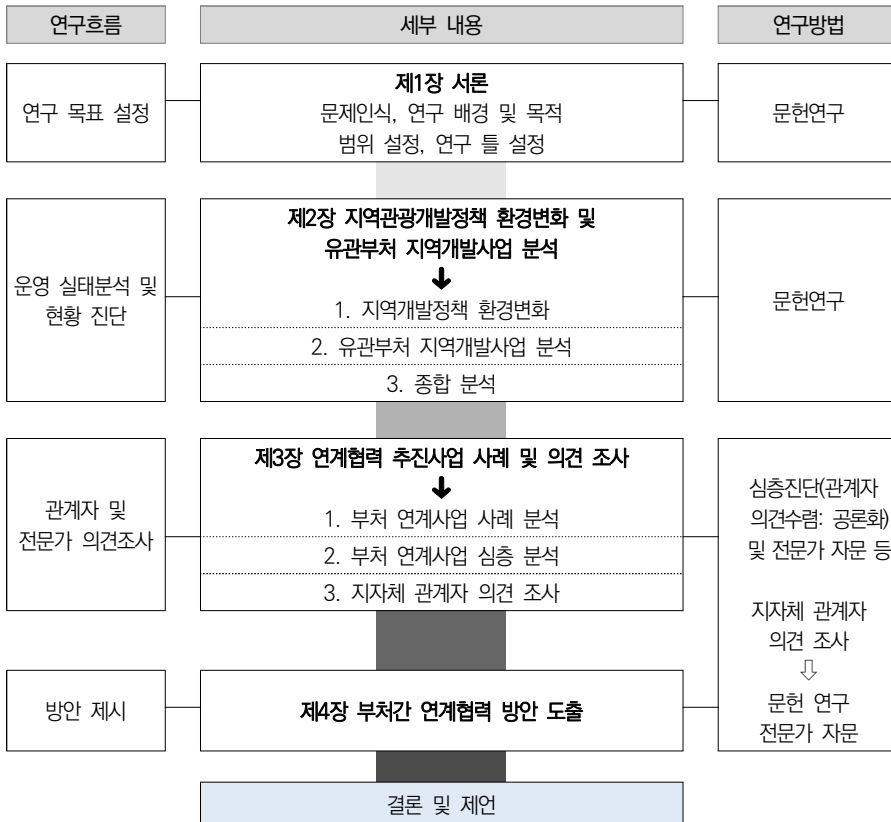
## 2. 연구 방법

- 기존 선행연구 등 문헌연구를 통한 내용 분석을 실시함
  - 지역관광개발정책 변화 분석
  -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문헌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사업 및 계획 자료 분석

- 타부처 지역관광개발사업 담당자 및 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사례조사 실시
  - 부처 간 또는 지역과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사례분석
  - 지자체 관광자원개발 사업담당자 및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지원조직 담당자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 지자체 관광자원개발 사업 연계협력 추진 실태 등 의견조사 실시
- 관광자원 개발정책 기획 및 수립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함

### 3. 연구 수행 체계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제2장

지역개발정책 환경변화 및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 분석



## 제1절 지역개발정책 환경변화

---

### 1. 지방분권시대: 지역 중심의 개발정책 지향

- 지방분권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능 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와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심화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및 사업이 요구됨
  - 지방분권을 통하여 업무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회의 본질적 문제, 지방 소멸의 위기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함
- 문재인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함
  -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함
  - 특히 자치조직권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세 비율의 확대 등을 강하게 주장함
-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제시함
  - 지방분권 전략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함(자치분권위원회, 2018).

〈표 2-1〉 자치분권 전략 및 과제 (6대전략 및 33개 과제)

추진전략	과제명	추진전략	과제명
1 주민주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참여권 보장</li> <li>•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li> <li>•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li> <li>•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li> <li>•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li> <li>•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li> </ul>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li> <li>•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li> <li>•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li> </ul>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li> <li>•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li> <li>•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li> <li>• 대도시 특례 확대</li> <li>•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li> <li>•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li> </ul>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 공개</li> <li>•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li> <li>•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li> <li>•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li> <li>•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li> <li>•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li> <li>•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li> </ul>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li> <li>•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li> <li>•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li> <li>• 국고보조사업 개편</li> <li>•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li> <li>•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li> </ul>	6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li> <li>•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li> </ul>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 2019년에 16개 중앙부처가 맡던 46개 법률 사무 400개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됨
  - 해양수산부(135개), 국토교통부(70개), 여성가족부(51개) 순으로 사무가 이양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이양 사무는 관광자원개발사업,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폐관 신고(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등 이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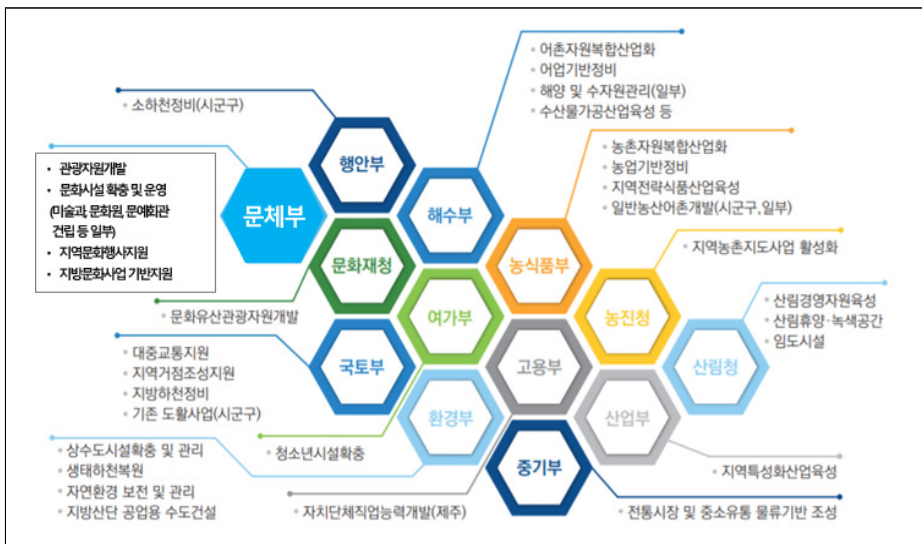
〈표 2-2〉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지방이양 사무 현황

부처	법률	사무수	부처	법률	사무수	부처	법률	사무수
기획재정부	1	4	보건복지부	3	12	농림축산식품부	2	2
교육부	2	15	환경부	2	5	산업통상자원부	4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여성가족부	1	15	소방청	1	1
국방부	1	1	국토교통부	9	70	산림청	2	31
행정안전부	6	20	해양수산부	7	135	-	-	-
문화체육관광부	3	26	식품의약품안전처	1	3	-	-	-

자료: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이양 사업은 7조 7천억 원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어업기반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 지방이양 사업은 7조 5천억 원으로,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 기존 도시활력증진사업(시·군·구),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 사업은 관광자원개발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일부 등으로 대부분 지역밀착형 사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됨
- 또한 지방하천정비사업,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들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으며, 수요자수에 예산이 결정되는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육성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은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현장밀착형 사무, 대규모 SOC 사업이 지방 이양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앙부처의 예산지원방식이 공급자인 중앙부처의 관점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되고 있음

[그림 2-1] 부처별 균특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



출처: 박진경(2019.5),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정책브리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자 재작성

-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군특회계 계속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관광, 식품, 지역특성화산업, 농어업기반, 하천사업 등의 사업이 모두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한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함 (박진경, 김현호, 2019)
  -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계획 및 행정체계, 추진조직, 조례 등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자치분권’으로 농림사업의 지방이양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촌협약’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정책 흐름이 등장하였으며, 자치분권 기조에 따라 중앙부처마다 ‘한국형 계획계약’이라는 틀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지원과 협력관계를 마련하고 있음

#### 지방분권의 흐름과 지방농정

자치분권의 흐름은 어떻게 지방농정과 연결되고 있는가?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현장밀착형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있고, 중앙부처의 예산지원방식이 공급자인 중앙부처의 관점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포괄보조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부처별로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현장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갖는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자체 현장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기존 개별보조금 방식에서 탈피,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현장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게 된다.

‘자치분권’의 확대로 농림사업의 지방이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흐름이 등장했다. 바로 ‘농촌협약’제도의 도입이다. 지방분권에 따라 농정의 지역 자율성과 분권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 간 농정목표 간 조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협약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 기조에 따라 중앙부처마다 ‘한국형 계획계약’이라는 틀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지원과 협력관계를 마련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다.**

‘농촌협약’이 기존 사업추진방식과 다른 점은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최적화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공동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선계획, 후협약’이다.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부처 간 칸막이식 다년간 산발적 사업계획이 아니라, **다년간 다부처 연계사업을 패키지로 하고, 추진할 수 있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부처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세출예산의 용도와 투입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자료: 서정민(2021.1.19.), 성금 다가는 ‘자치분권’, 지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한국농어민신문

- 2020년부터 ‘관광자원개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역자율계정)’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 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신설 2020.2.25.)에 의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은 7개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①관광지개발조성, ②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③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④국가여가캠핑장, ⑤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 ⑥관광안내체계 구축, ⑦탐방로안내체계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명시되어있음(오훈성·김진영, 202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관광자원개발사업(지역자율계정)과 광역관광자원개발사업(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지역자율계정은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함

〈표 2-3〉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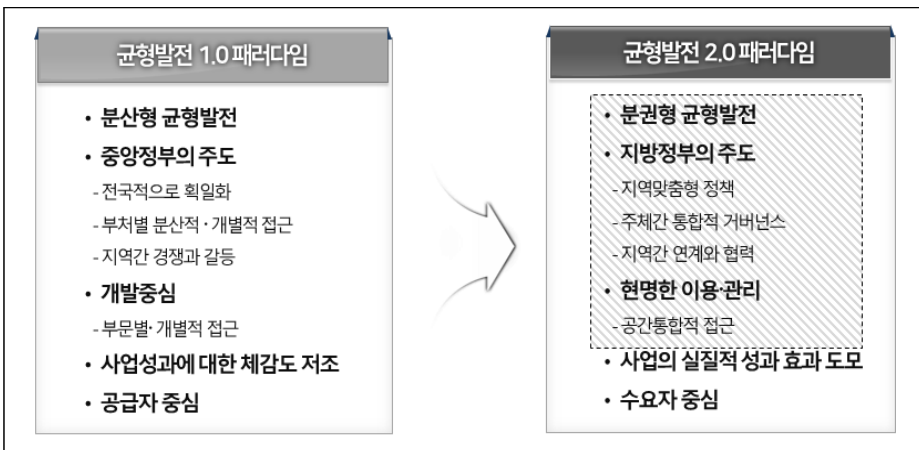
구분	사업내용	지역관광 관련 사업
관광지 개발	• 「관광진흥법」 제 52조에 따라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 공공기반시설(도로, 주차장, 상수도, 오수처리장, 화장실 등)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조성	●
문화관광자원 개발	• 지역의 역사·문화·레저스포츠 지원 등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 친환경 생태 녹색관광 기반조성을 위해 생태계우수지역(갯벌, 철새, 동굴, 습지, 화석 등)의 자연과 관련 문화자원의 관찰, 체험시설 조성	●
국가여가캠핑장 조성	• 야영장 등의 숙영시설과 취사장, 화장실, 운동·놀이시설 등의 공공편의시설 등을 갖춘 쾌적하고 저렴한 가족단위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숙박시설 육성을 위해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조성 *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한정	●
관광안내체계 구축	•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정보제공을 위한 안내소,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제외	●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한 탐방로 노선정비, 안내체계구축, 안내체계구축, 안전 및 편의시설, 탐방로 내 관광자원 정비, 관광자원정비, 쉽게걸는 길(장애인 및 노약자용) 조성	●

자료: 오훈성·김진영(2020),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관광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 국가균형발전: 지역 주도적 다양한 협력

-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며, 목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 것임
- 국가균형발전 추진방향은 ①(지역주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중앙은 지원, ②(사람중심)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우선순위, ③(제도화)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임
-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이 똑같은 기능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 이 서로 다른 기능으로 특화해서 발전하는 것으로 기회의 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 한 향상은 공간상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비로소 실현되는 것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18)
  -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내생적 역량, 특화 발전에 의존하는 전략을 말하며(박진경·이제연, 2018),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지방주도의 지역맞춤형 정책, 주체간 통합적 거버넌스, 지역간 연계협력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림 2-2] 균형발전 패러다임 변화



출처: 차미숙(2017), “분권화시대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 충남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워크숍.

-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되고 있으며,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수적임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부등은 지역 활성화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해 부처 사업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중 관광자원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노후·유헴 문화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잠재력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4년간 국비 6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사업임
  - 계획공모사업으로 인해 매력 있는 지역 특화 콘텐츠와 지역관광 기반시설, 관광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운영 역량을 키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역관광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임

#### ②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계획협약<sup>1)</sup>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연계·협력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계획, 금융, 관광,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음

#### ③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국가통합을 실현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며,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함

1) '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19년 국비 300억 원, 공모 중('18.12.21~19.2.15)

- 문화·관광, 도시계획·항만 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종료 이후까지 사업대상지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④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의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365생활권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21년 7월 기준 농촌협약은 전국123개 일반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농촌 공간 전략계획이 우수한 전국 12개 시군을 협약대상으로 선정함

〈표 2-4〉 유관부처 주요 지역개발사업

정부부처	추진사업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노후·유휴 문화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거나 잠재력 있는 지역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 하드웨어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 산업,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적 전략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투자선도지구	•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도시재생뉴딜	•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쇠퇴한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활성화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 농업유산, 체험목장, 양조장, 농촌체험마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 농촌 고유의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농촌관광협의체 지원
	농촌협약공모사업	•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공모)은 관광정책국에 7개 사업, 관광산업정책관에 9개 사업 등이 있음 <표 2-5 참고>
-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역 자원의 활용으로 지역인프라 확충,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정부의 공모사업 유형은 공모주체(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단체 등), 공모 대상(지자체대상, 기업, 연구소 등), 지원 분야(사업비지원, 서비스지원, 기관 및 시설 지원 등), 지원기간(다·단년도)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주고 있음

<표 2-5> 2021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공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역	지원대상
관광 정책국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지자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	생태관광육성	지자체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산업관광활성화	지자체
	국내관광 역량강화	열린관광 환경조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지원	지자체
관광산업 정책관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자체
	관광자원 기반조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지자체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자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관광두레 조성	광역지자체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자체, 등록 야영장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자체, 등록 야영장
	MICE산업 육성 지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 등록 야영장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지자체
		MICE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지원)	국제회의복합지구가 지정된 지자체
		지역 MICE산업 활성화 지원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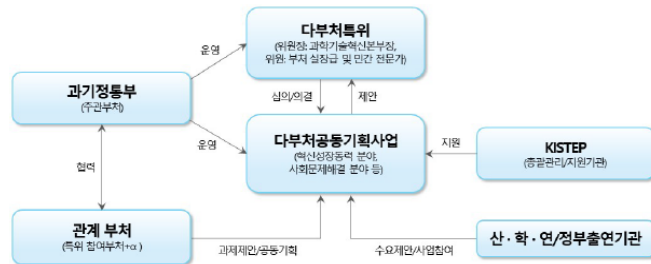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보조사업(공모) 현황

### 3. 부처 간 연계협력: 맞춤형 지원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고령화, 인구소멸, ESG, 등 많은 정책 이슈들은 본질적으로 정부부처나 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부처 혹은 관련 정부 기관간의 연계·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사업(KTTP)』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9개 부처가 연계·협력하여 교통, 숙박, 쇼핑 등의 기반을 보완하여 방한 관광객을 선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기획재정부 생활밀착형 혁신선도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후 관계부처 합동(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으로 KTTP 관련 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마케팅, 교통거점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특화형 도심순환버스 운영·지능형 관광도시(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쇼핑체험·편의 제고, 지역특화 숙박시설 조성, 케이팝(k-pop) 등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및 증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한식체험사업 육성, 지방공항 거점 한식관광 연계지구(클러스터) 조성, 농촌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외교부는 방한관광 외교 연계망 구축 등을 계획함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종합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부처 간 긴밀한 R&D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다부처공동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 기획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위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단독 부처의 수행으로 문제 해결 및 성과 창출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2개 이상의 중앙부처 간 참여하여 공동으로 기획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공동기획지원사업 개요

- 개요: R&D 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중복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기획·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사업 전주기에 걸쳐 공동 추진
- 추진체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에서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 총괄 및 다부처 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를 운영하고, KISTEP은 사업의 총괄관리 등 실무를 지원하며, 다부처특위에서 다부처공동기획 관련 주요 사항 심의



- 지원단계 :수요발굴,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공동기획연구 및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의 총 4단계로 구분
-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2020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경우 산하위원회로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 부처공동기획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동기획, 대상선정 및 사업시행 등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 지침」 제정·고시됨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함된 다부처 공동사업은 아래와 같음

〈표 2-6〉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함된 기 선정된 다부처 공동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플랫폼 제공 기술개발(2017.3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 3D 공간정보(V-world)의 공유·활용을 위한 갭신/고도화 및 재난, 문화콘텐츠, 가상훈련 활용 기술 개발</li> <li>• 국토부(주관), 산업부, 문체부, 안전처</li> <li>• 총 495억원 ('18~'22)</li> </ul>	
지능형재활 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2020.2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재활운동지원을 위해 스마트 운동·치료기기 및 융복합 서비스 개발, 보급</li> <li>• 복지부(주관), 문체부, 과기정통부, 산림청</li> <li>• 총 495억원 ('21~'23)</li> </ul>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2020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 지침」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신규 다부처공동사업의 발굴·시행 등을 위해 수요조사, 공동기획연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다부처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이란 공동기획사업을 거쳐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참여부처**"란 공동기획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
4.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협력부처**"란 참여부처 중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삭제
7. 삭제
8. "**공동기획연구**"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관련 법·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말한다.
9. "개별 연구개발사업"이란 공동사업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0. "통합평가"란 참여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공동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공동사업의 자체성과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 지침

## 4. 종합 분석

- [지방분권]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400개의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며, 그 중 관광개발사업(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예산편성 등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이 대폭 향상 됨
  - 균특회계 전환사업보정계정은 당초는 2022년(20~22년/3년)까지 유효하나 현재 시점에서 2026년까지 보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됨
- [국가균형발전]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타부처 지역개발정책은 지역발전 수단으로 관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산되고 있음
- [부처간 연계협력] 타부처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형태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사업 유사 및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연계·협력이 필요함
- 따라서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부처간 연계협력 등 정책 환경 변화의 시기에 관광분야의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음

〈표 2-7〉 종합 분석

키워드	환경 변화	흐름
[목적] 지방 분권 "지역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li> <li>→ 관광자원개발사업 이양(7개 사업),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li> </ul>	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주체 전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 부여 ③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 역량 확대 ④ 민-관 협력 등 다양한 개발 주체 참여 필요성 요구 등
[방식] 국가균형발전 "다양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목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li> <li>→ 부처간 연계 협력 필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등 추진</li> </ul>	①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 ②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주체)역량 강화 ③ 지자체의 재원 및 자율성 확보 ④ 여러 부처와 기관 간 연계·협력
[내용] 부처간 연계협력 "맞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처나 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부처 혹은 관련 정부 기관간의 연계·협력이 중요</li> <li>→ 범부처 사업패키지 맞춤형지원</li> </ul>	①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 ② 협동개발사업 촉진 ③ 성과 보급 확산 및 지원체계 강화 ④ 다부처 공동사업의 시너지 창출

## 제2절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 분석

---

### 1. 분석 개요

#### 가.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지역관광개발의 패러다임이 중앙집중형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지역 중심의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관광개발 방식도 변화하고 있음
-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방식으로 지역과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는 추세임
  -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중앙부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은 제공된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임(지역주도·지역맞춤형 사업)
  -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은 지자체 간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는 만큼 지역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
- 유관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대상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경우 환경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 지원 등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관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역관광개발 지원범위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함

## 나. 분석 범위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임
- 국토교통부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는 2015년부터 추진한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과 ‘투자선도지구 사업’과 2017년도부터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음
-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대상으로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과 농촌협약공모사업을 추진중임
- 본 연구에서는 유관부처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표 2-8〉 유관부처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 분석 범위

정부부처	추진사업	추진시기	사업 특징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대상 지원 사업</li> <li>• 하드웨어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 산업,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적 전략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li> </ul>
	투자선도지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li> <li>•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여 지원</li> </ul>
	도시재생뉴딜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쇠퇴한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활성화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li> </ul>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국가어항 제외 사업)</li> </ul>
농림축산식품부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유산, 체험목장, 양조장, 농촌체험마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 농촌 고유의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농촌관광 협의체 지원</li> </ul>
	농촌협약공모사업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li> </ul>

## 다. 분석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공모사업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업은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총 6개 사업임
- 개별 공모사업별로 사업 추진시기,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사업의 특징을 검토하고, 공모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 생활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소득 창출(활성화)을 목적으로 다양한 관광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관광 관련 사업내용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함

〈표 2-9〉 유관부처 관광자원개발 사업 분석 기준

추진사업	추진시기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범위	관광 관련 내용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015-지속	일반형 등	성장촉진지역	최대 약 30억 내외(100% 보조)	기반시설 및 지역 특화 콘텐츠 구축 등
		소규모형	지역활성화 지역 한정	3억원 미만 (100% 보조)	-
투자선도지구	2015-지속	발전촉진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지역)	규제특례, 자금지원, 100억원 지원 (성장촉진지역) 등	기반시설 구축, 시설의 관광콘텐츠화
		거점육성형	낙후지역 이외 지역		
도시재생뉴딜	2017-지속	중심시가지형 등 5개 유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가능지역 포함)	국비 50억 ~ 250억 지원	기반시설 구축
어촌뉴딜300	2018- 2024	-	법정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	개소당 평균 100억 원 지원	기반시설, 지역협의체 구성,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등 일자리 지원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2019-지속	-	농촌관광협의체	협의체당 140백만원 지원	농촌관광지원조직 구성, 농촌관광 콘텐츠 확보 등
농촌협약공모사업	2020-지속	-	일반농어촌지역 113개 시·군	최대 300억원 지원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역량강화 등

## 2. 유관부처 지역개발 공모사업

### 가. 국토교통부

#### 1) 정책 방향

-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은 (기존) 대규모 SOC 지원, 관주도·하향식 지원, 개발계획에 기초한 경직적 지원 방식에서 (변경) 소규모 주민 밀착사업 위주, 주민참여형 상향식 지원, 지자체간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의지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제정(2014) 등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지역맞춤형(지역주도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개발지원법(2015.1.1.시행)은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법률임
-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는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투자선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있음
-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문화나 관광과 접목(수단)한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임
- 성장촉진지역 내 ‘지역활성화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체계를 세분화하고, 공모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음

## 2)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2015년~계속사업)

### ① 사업개요

-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임
  - 주거플랫폼 사업이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임
- 이는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지역개발지원법(2015.1.1.시행)’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은 하드웨어(H/W)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 산업,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S/W)적 전략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지원함
- 본 사업 공모에 지원 가능한 지자체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이나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공모 참여 시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낙후 심화 지역 추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표 2-10〉 지역수요맞춤형 공모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총괄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추진배경	• 지역개발 패러다임 전환 및 사업의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성장촉진지역 지원방식 변경 - (기존) 대규모 SOC 지원, 관 주도·하향식 지원, 개발계획에 기초한 경직적 지원 - (변경) 소규모 주민 밀착사업 위주, 주민참여형 상향식 지원, 지자체 자발적 경쟁 유도
사업내용	•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의 인구 유입 도모와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사업목표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관계법령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추진과정	• (2015)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및 사업 대상지 26개 선정 • (2016) 사업 대상지 22개 선정 • (2017) 지역개발연계사업 유형 추가, 19개(일반형 15개, 지역개발연계 4개) 대상지 선정 • (2018) 지역거버넌스형,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 유형 추가 • (2019) 지역거버넌스형과 지역개발연계사업 유형을 일반형으로 통합 • (2020) 일반형(성장촉진지역)과 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지역활성화지역) 유형으로 구분 • (2021) 전 유형을 통합하여 일반형으로만 공모, 11개 사업대상지 선정

구분	내용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li> <li>-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지역</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약 30억 내외의 국비지원(보조율 100%)</li> </ul>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4년</li> </ul>

## ② 추진과정

-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공모사업은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개발지원법(2015.1.1.시행)’ 시행에 따라 추진된 사업임
- 2015년부터 시작된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편의 시설(생활SOC)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지원유형과 지원범위가 변화함
  - 사업 초기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의 효과성, 타 정책과의 연계성 증대 등을 위해 공모 가능한 사업유형을 점차 세분화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공모사업 참여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유형을 통합하는 추세임
- (2015년) 공모를 시작한 첫해인 2015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복합 사업(30억원 이내 지원)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및 지역역량 사업(3억 원 미만 지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 (2016년) 2016년은 30억원 미만으로 지원 가능한 일반사업(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 기타)과 3억 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역역량 증진사업 유형은 제외됨
- (2017년) 2017년도부터는 개별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시·군이 공통의 지역자원을 토대로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개발 연계사업’이 도입됨
- (2018년) 2018년도부터는 단일 시군 일반사업(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과 복수 시군 연계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유형과 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이 추가됨

- (2019년) 2019년도부터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공모방법이 새롭게 개편됨
- (2020년) 2020년은 지역의 관광 수요 증가와 지속적인 지역 인구의 감소 현실을 고려하여 체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2021년) 2021년은 기존의 ‘일반형’과 ‘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지역활성화 지역만 지원 가능)’을 통합하여 일반형만 공모하였으며, 사업당 최대 50억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규모를 변경함

〈표 2-11〉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유형 변화 및 선정 규모

연도 (선정지역)	일반형					소규모	지역개발 연계사업	지역 거버넌스	합계
	지역산업	지역경관	생활복지	관광·체험	기타				
2015	4	5	1	8	-	5/3 <sup>1</sup>	-	-	26
2016	6	5	3	4	1	3 <sup>2</sup>	-	-	22
2017	15					-	4	-	19
2018	7					2 <sup>3</sup>	3	6	18
2019	22 <sup>4</sup>					4	-	-	26
2020	15					5	-	-	20
2021	11					-	-	-	11

주 1: 2015년 소규모 사업유형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사업/ 지역역량 증진 사업대상지 선정 수임

주 2: 2016년 소규모 사업유형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사업’ 대상지임 (2016년도부터 지역역량 증진사업 유형 제외)

주 3: 2018년부터 소규모 지원사업 유형에 포함된 것은 ‘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이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사업은 일반형 내 생활복지 유형으로 통합됨

주 4: 2019년부터는 지역개발연계사업, 지역거버넌스 사업을 일반형 사업(성장촉진지역 전체 대상 사업)으로 통합

자료: 국토교통부(2015.5.14.일자 보도자료). 개발+문화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2016.9.1.일자 보도자료). 지역 맞춤형 국비지원으로 낙후지역 성장 촉진, 국토교통부(2017.8.23.일자 보도자료). 태백·산청·영동 등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19개 선정, 국토교통부(2018.8.17.일자 보도자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사업 18건 선정, 국토교통부(2019.7.3.일자 보도자료).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국토부 4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2020.7.10.일자 보도자료).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국토교통부(2021.8.2.일자 보도자료).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 2) 투자선도지구 (2015년~계속사업)

### ① 사업개요

- 투자선도지구는 ’15.1.1일 신규 시행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것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임

- ①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② 성장잠재력 ③ 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 ④ 파급효과 ⑤ 지역생활권 거점 ⑥ 민간투자 가능성을 갖춘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을 대상으로 함

〈표 2-12〉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총괄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추진배경	•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추진
사업내용	•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여 공모 추진
사업목표	•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관계법령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추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투자선도지구(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4개소 선정</li> <li>• (2016)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 신설, 투자선도지구 5개소 선정</li> <li>• (2017) 투자선도지구 5개소 선정(괴산, 함평, 춘천, 청주, 대전)</li> <li>• (2018) 혁신도시 연계형 신설, KTX지역경제거점형은 일반형으로 통합, 투자선도지구 3개소 선정(고성, 보령, 나주)</li> <li>• (2019)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 투자선도지구 1개소 선정(영천)</li> <li>• (2020) 투자선도지구 1개소 선정(김제)</li> <li>• (2021) 투자선도지구 1개소 선정(함양)</li> </ul>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촉진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및 도서·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중에서 투자·고용창출 규모가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3만㎡ 이상 면적 확보지역</li> <li>• 거점육성형: 낙후지역 외 지역 중에서 투자·고용창출 규모가 5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10만㎡ 이상 면적 확보지역</li> <li>* KTX지역경제거점형 및 혁신도시 연계형은 면적 제한 없음</li> </ul>
지원내용	• 각종 규제특례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기반시설 국고보조(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사업당 100억원 이내의 국가 재정지원(성장촉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자료: 국토교통부(2019.7.8.일자 보도자료),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2020.7.9.일자 보도자료),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 ② 추진과정

- (2015년) '투자선도지구'는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을 대상으로 한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여 공모 추진, 발전촉진형 2개소, 거점육성형 2개소 등 총 4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함

- (2016년) 2016년도부터는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 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을 추가 신설함
- (2018년) 2018년부터 KTX 지역경제 거점형은 일반형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며,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연계형'을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함
  - 혁신도시 연계형은 혁신도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 효과를 인근 지역까지 공유·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2019-2021년) 2019년도부터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은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1개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함

### 3)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7년~계속사업)

#### ① 개요

- 기존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정비사업에 초점을 두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쇠퇴한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활성화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함(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주도(Top-Down)의 대규모 계획 중심 사업이라면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및 주민주도(Bottom-Up)의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해 주거복지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S/W) 사업을 기본으로 함

〈표 2-13〉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수행기관	• 도시재생사업단 _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총괄)
정책목표 (추진전략)	•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가능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부동산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업유형별로 5만㎡~50만㎡ 면적 기준 제시</li> </ul> </li> <li>• 최종 평가 종료 전(시 도 선정사업) 또는 시작 전(중앙정부 선정사업)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는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li> </ul> </li> </ul>
특징	• 연도별 선정사업 수: ('17) 68 → ('18) 100 → ('19) 116 → ('20) 70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유형에 따라 국비 50억 ~ 250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편의시설 설치: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광장 등), 공동이용시설</li> <li>- 공적임대주택공급,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일부)</li> <li>- 주민주도사업: 주민 &amp;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li> <li>- 마을유지관리</li> </ul> </li> <li>•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비 (보조금법, 지특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중복 사업비 제외)</li> <li>• 부지 매입비 (공적임대 건설을 위한 지자체 부지확보 비용)</li> <li>• 부지 임대료 (공적임대,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공급, 현장지원센터 공간 확보 목적)</li> <li>• 전문가 등 수당,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li> </ul>

## ② 사업유형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상 지역 특성,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소규모 '동네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 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임
  - 주거지지원형 사업(주거지역 대상)은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임

- 일반근린형 사업(준주거지역 대상)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중심시가지형 사업(상업지역 대상)은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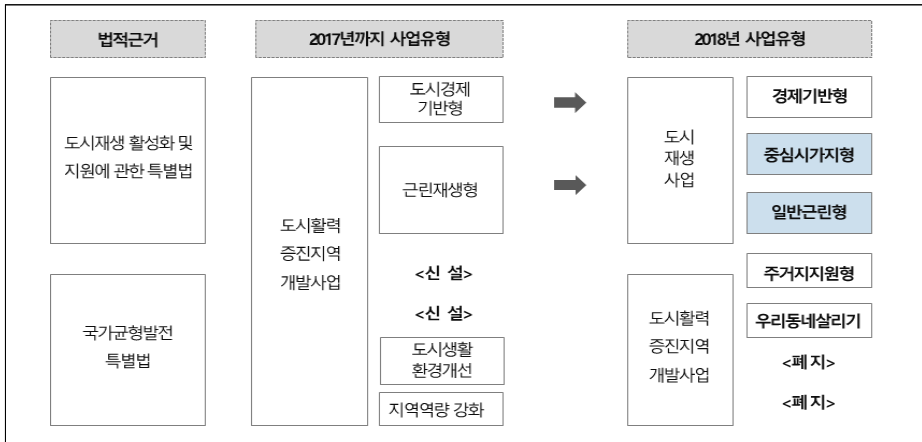
### ③ 사업추진방식 (변화)

-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주도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변화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사업유형이 점차 다양화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사업대상지 선정 시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주민주도 조직 구성 등 사업추진체계 및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임
  - 사업추진효과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게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반 구축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단계, 사업 시행단계를 거침
  - 기반 구축단계에서는 도시재생전담조직(도시재생추진단 및 도시재생행정협의회)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위촉 등 조직 및 인력 구성, 주민협의체 구성, 사업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 2019년도부터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SOC 공급을 확대하고(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혁신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특화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점을 부여함
- (정부부처 협업모델)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재생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가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을 활성화 계획(안)에 포함하는 경우 가점 부여
  - 국토부는 지자체가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17개 부처 77개 중점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제

시함 (참고자료 첨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 대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함(2018.02.23.)

[그림 2-3]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사업구조



출처: 국토교통부(2018.3)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나. 해양수산부

### 1) 어촌뉴딜 300사업 (2018년~2024년)

#### ① 개요

-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도입했으며, 어촌뉴딜 300은 이러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중 하나임
  - 어촌뉴딜 300이란 2022년까지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3.15.)
- 해양수산부는 2018년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전국 어촌·어항 300개를 선정·지원하고 있음

- 사업대상(공모대상)은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에 위치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

〈표 2-14〉 어촌뉴딜 300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총괄	• 해양수산부 혁신성장 일자리기획단 → 어촌어항재생과
사업지원	•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추진배경	• 어촌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콘텐츠 부족 •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어촌뉴딜300 추진계획' 수립('18.6) 및 후속조치 마련('18.12)
추진목적	•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사업목표	• 2022년까지 전국 300개 어촌어항 현대화
법적근거	• 어촌어항법
추진과정	• (2018)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발표 • (2019) 사업대상지 70개소 선정 → (2020) 120개소 선정 → (2021) 60개소 선정 → (2022) 사업대상지 50개소 선정
계획수립 범위	• (공동) 어항시설 정비, 여객선기항지 개선, 안전시설 확충, 어구창고·어구건조장 조성 등 • (특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개선 및 특화사업 • (S/W) 주민역량 강화, 지역협업체 운영, 사무장채용 지원 등 • (협업) 타 부처 연계 협업사업
지원자격	• (공간요건)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에 위치한 어촌마을 대상 • (기능요건) 지역협업체 사전 구성 및 공모신청 사업비 중 지방비 7% 본예산 확보
지원내용	• 개소당 평균 100억 원 투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	• 2020년부터 사업당 사업추진기간 2년 → 3년으로 변경

## ② 사업추진과정

- 어촌뉴딜 300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복합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2019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함(2019년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를 전년도 12월에 발표)
- 그러나 2020년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형화된 사업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유형 분류를 삭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획 마련을 유도함

- 2021년에는 광역자치단체(시·도) 평가점수를 상향하여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함
- 어촌뉴딜사업이 어항시설 현대화 및 지역특화 개발에 기여하였으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정책은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2022년에는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어촌뉴딜300사업의 생활SOC 공급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표 2-15〉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사업 추진과정

구분	내용	신규 사업대상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레저형 9개소, 국민휴양형 18개소, 수산특화형 10개소, 재생기반형 6개소, 복합형 27개소 선정</li> </ul> </li> </ul>	70개소 선정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형화된 사업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유형 분류를 삭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획 마련을 유도</li> <li>•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 강화</li> <li>• 시·군·구별 전년도 사업 추진성과, 어촌계 개방 노력도 등 지자체 및 지역주민 사업추진 의지 반영</li> </ul>	120개소 선정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자치단체(시·도) 평가점수를 상향하여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책임과 권한 강화</li> <li>•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참여도 평가항목과 투자재원 다양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관련 평가항목 추가</li> </ul>	60개소 선정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어촌뉴딜300사업의 생활SOC 공급을 결합하여 추진</li> <li>-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정책 부족에 따라 어촌뉴딜 대상지, 배후지에 주거플랫폼 조성계획 제출 시 가점 부여</li> </ul>	50개소 선정

주: 사업대상지는 전년도 12월 발표, 2022년 사업대상지는 2021.12월 발표 예정

자료: 해양수산부(2018.12.18. 보도자료) 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해양수산부(2019.12.12. 보도자료).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해양수산부(2020.12.9. 보도자료). 3년간 6천억 원 투입하여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해양수산부(2021).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표 2-16〉 어촌뉴딜 300 사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공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안시설 보강(경사식 선착장 정비, 물양장 정비 등)</li> <li>• 안전시설 설치(안전난간·차막이 설치, 구조사다리, CCTV)</li> <li>• 어항구역 경관개선(어구어망 보관창고, 경관조명 설치)</li> <li>• 어항 친수시설 설치(어부림 조성, 정자, 파고라 등 휴식공간)</li> <li>• 여객 편의시설(대합실, 화장실 등)</li> </ul>
SW사업		• 주민·리더 교육, 마을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역협업체 관련 사업
	일자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장)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신규채용</li> <li>* 어촌뉴딜 사업비(S/W사업비)에서 월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li> <li>• (어촌관광) 어촌마을 2개소 해양레포츠(스킨스쿠버, 요트, 낚시 등) 특화학교 운영, 갯벌, 낚시 체험 등을 위한 안전요원 및 관광성수기 임시직 안내요원 채용</li> </ul>
특화사업 (관광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개선: 공원광장, 경관시설, 바둑(포장)</li> <li>• 관광레저: 수산물 가공장, 휴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샤워시설, 세척장, 부지조성, 체험장, 캠핑장, 주차장, 탐방로, 교량, 해수욕장, 전망시설, 종합안내판</li> </ul>
협업사업 (타부처 연계사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지붕·담장 경관개선(행안부, 농림부)</li> <li>• 마을안내판, 이정표 설치(행안부, 농림부)</li> <li>• 마을 생태숲 조성(산림청)</li> <li>• 상징 조형물 설치, 오토캠핑장 조성, 마을 박물관 건립(문체부)</li> <li>• 주차장 조성(국토부)</li> <li>•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노후 상수도 정비(환경부)</li> </ul>

## 다. 농림축산식품부

### 1)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2018 - 지속)

-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농촌관광협업체 지원사업)’은 과거의 정부 주도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농업유산, 체험목장, 양조장, 농촌체험마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 농촌 고유의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농촌관광협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농촌관광협업체란 농촌관광 운영주체와 지원조직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을 의미함
  - 농촌관광 운영주체는 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② 개별경영체(농업유산, 체험목장, 농가맛집, 양조장, 민박,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 ③ 문화관광경영체(고택, 종택, 박물관 등) 등임

- 관련 지원조직은 ①지자체, ②현장활동가(관광두레, 관광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인력,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NGO 등), ③전문가(대학, 학회, 연구기관, 컨설팅 회사, 6차산업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등임

- 농촌관광 협의체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만들어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함
-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8년과 2020년 각 6개의 협의체를 선정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년임 (사업대상지 격년 지정)
- 지원 농촌관광협의체로 선정되면 관광콘텐츠 개발, 시범운영,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140백만 원을 지원함

〈표 2-17〉 농촌관광협의체 공모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사업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목적	• 농촌관광 운영주체와 지자체,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상향식 농촌관광 사업 체계 구축
추진과정	• (2018) 6개 농촌관광 협의체 선정, 협의체 구성, 상품개발 및 시범운영 • (2019) 홍보마케팅 계획수립, 시장조사 및 판로개척, 상품 운영 등 • (2020) 6개 농촌관광 협의체 선정, 협의체 구성, 상품개발 및 시범운영 • (2021) 홍보마케팅 계획수립, 시장조사 및 판로개척, 상품 운영 등
계획수립 범위	• 협의체 구성 내용, 국가중요농업유산, 체험목장, 찾아가는 양조장,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 농업·농촌 고유의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지원자격	• 농촌관광운영주체와 지원조직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 '농촌관광협의체'
지원내용	• 협의체당 2년간 최대 140백만원 지원 (국비 100%) * 1차년도 최대70백만원, 2차년도 최대70(1차년도 사업평가 후 2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주: 2018년 공모사업에서는 2년간 최대 150백만원 지원, 2020년 사업부터는 140백만원으로 변경

## 2) 농촌협약 공모사업 (2020 - 지속)

### ① 개요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제 도입계획을 발표함
-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임
  -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365 생활권 구축<sup>2)</sup>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 협약 체결 시·군이 농촌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 중앙과 시·군이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에 근거해 발전계획 이행에 공동투자하는 순으로 진행됨
-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와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9조, 제38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2019년 농촌협약 사업계획 발표 이후 2020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2개소(시범 9 + 예비3)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농촌협약 대상 시·군 20개소(대상17 + 예비3)를 선정함
- 농촌협약 대상 선정 시·군에 5년간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은 50~70%를 적용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추진 사업과 함께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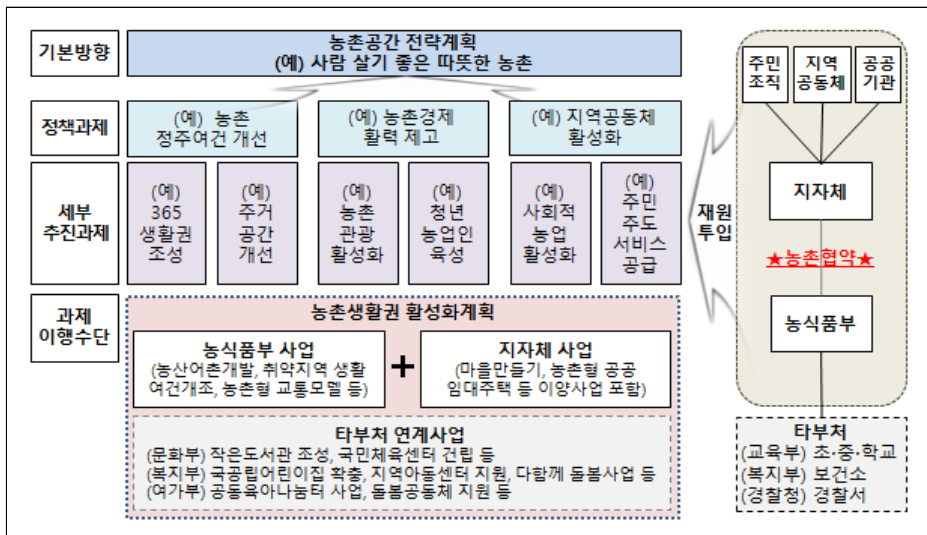
---

2) 365 생활권이란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 공간권역

〈표 2-18〉 농촌협약 공모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추진배경	• 지방분권 시대 효과적 대응 필요성
추진목적	•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통합 패키지 지원
사업목표	• 농촌협약 대상 정책 범주를 확대하고, 농촌 공간계획 제도와 연계 운영하여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 제125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9조, 제38조 등
추진과정	• (2019) 농촌협약 사업 발표 • (2020) 농촌협약 대상 시·군 12개소(시범 9 + 예비3) 선정 • (2021) 농촌협약 대상 시·군 20개소(대상17 + 예비3) 선정
계획수립 범위	•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자격	• 일반농어촌지역 113개 시·군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중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 10개 시·군은 제외
지원내용	• 5년간 최대 300억원 지원 - 지원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50 ~ 70% 적용

[그림 2-4]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6.17.). 2022년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군 선정

### 3. 종합 분석

#### 가.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 주요 특징

##### ① 지역자원 활용에 있어 관광자원사업 발굴 요구도 증대

- 지자체 대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유관 부처의 공모사업들은 최근 지역의 관광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유형에 ‘관광/체험형’으로 구분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유형 중 중심시가지형 사업의 경우 상업 지역의 상권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지원함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은 특화사업에 문화관광시설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어촌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레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부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은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을 넘어 지역주민이 관광사업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함

##### ② 지역역량 및 여건을 고려한 사업기획 등 지역 자율성 부여

- 지방분권 이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방식은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사업으로 기획이 가능하도록 유형을 통합하고 방향성만 제시하는 등 지역 자율성을 고려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부처 정책목적을 고려해야 하나,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소프트웨어간의 융복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은 주민중심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라는 목표에 맞게 지역성을 기반으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

### ③ 타부처 연계협업 사업 추진에 대한 수요증가

- 지역개발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 공모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계 가능한 부처별 대상 사업을 제공하는 등 부처 연계사업을 기존계획에 포함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은 2022년 공모 가이드라인에서 타 부처 관련시설 사업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복합화하거나, 시설물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타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계획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처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명과 주요내용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음(지자체 사업 포함 15개부처 54개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제도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시 타부처 연계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과제별로 연계 가능한 타부처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예: 국토부 도시 재생뉴딜사업,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 나.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가능 한 유형 도출

-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유관부처 공모사업과 연계가능 한 분야 및 유형을 파악하고자 관광관련 사업을 정책사업 영역으로 두고 있는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연계성을 찾고자 하였음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정책적 특징과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지역내 새로운 기반이 필요하거 재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시설 조성 둘째,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시설 활용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육성, 셋째, 기존자원과 연계한 운영·관리체계 정비 및 인력 육성 등임
- 위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예시)은 ① 기반시설 중심의 재생기반형 ②관광활성화형(콘텐츠, 프로그램, 시설 등 유형별 특화), ③ 관광조직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부처간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음
  - 연계협력가능 유형은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 콘텐츠 및 프로그램 중심의 소프트웨어, 조직 및 역량 중심의 오그웨어로 유형화하여 구분함

- 부처간 연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투자선도지구, 도시재생뉴딜), 해양수산부(어촌뉴딜 300), 농림축산식품부(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농촌협약공모사업) 등이 있음

〈표 2-19〉 부처간 연계사업 위한 유형 제시(안)

연계 가능 유형(안)	주요 특징	부처간 연계사업
재생기반형 (기반시설 등)	인구유출로 인해 활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필요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국토부)</li> <li>투자선도지구 (국토부)</li> <li>도시재생뉴딜(국토부)</li> <li>어촌뉴딜300 (해수부) 등</li> </ul>
관광활성화형 (콘텐츠, 프로그램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콘텐츠 및 관광상품,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국토부)</li> <li>투자선도지구 (국토부)</li> <li>마을생태숲 조성 (산림청)</li> <li>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농림부)</li> </ul>
관광조직형 (인력 및 조직 등)	부처 연계 협력을 위해서 새로운 관광조직체계, 역량이 필요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농림부)</li> <li>농촌협약공모사업(농림부)</li> </ul>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제3장

연계협력 추진사업 사례 및 의견조사



## 제1절 부처 연계사업 사례 분석

---

### 1. 분석 개요

#### 가. 대상 선정

-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처연계 사례의 유형은 부처 중심의 연계협력사업 사례와 지자체 중심의 연계협력사업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 부처 중심의 연계협력사업 사례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유관부처와 지역 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의미함
  - 지자체 중심의 연계협력사업 사례는 대규모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조달 측면에서 유관부처의 공모사업 또는 지방이양 사업을 등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의미함
- 부처 중심의 연계협력사업으로는 생태관광, 섬 등 부처 협약 사업과 한반도 평화의 정책 이슈로 추진하고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중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초청 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을 들 수 있음
-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사업으로는 지역의 역점사업으로 다부처 예산이 융합되어 추진하는 사례 중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 사례와 추진 중인 사례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함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 사례는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사업과 단양 다누리센터 사업을 들 수 있으며, 추진 중인 사례로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사업,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자원 육성 사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표 3-1〉 사례 분석 대상

구분	대상	선정 사유
부처 중심 연계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업무 협약 사업</li> <li>• 디엠지(DMZ) 평화의 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간 협력 방식 및 협력 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정 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간, 사업간 연계협력 사례 조사</li> </ul>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양 대봉산휴양밸리</li> <li>• 단양다누리센터</li> <li>• 레인보우 힐링관광지</li> <li>• 제천 의림지들 자연치유 특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의 예산이 융합되어 지자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관광개발사업 사례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화성 관광자원 육성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중심의 부처 예산이 융합되어 지역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례 조사</li> </ul>

자료: 연구자 작성

## 나. 조사 방법과 내용

-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처연계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협력사업 대상에 대한 추진 현황 및 개요, 협력 대상 및 협력 사업 내용,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함
- 이러한 조사 내용에 대한 조사 방법은 우선 뉴스 검색 및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례에 대해 사례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료 협조 요청 및 인터뷰를 통해 세부 현황 및 정책적 이슈 등을 파악함

〈표 3-2〉 사례 조사 방법과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대상 뉴스 검색 및 분석(<a href="https://www.kinds.or.kr/">https://www.kinds.or.kr/</a>)</li> <li>• 개별 사례별 담당자 자료 협조 요청 및 인터뷰</li> </ul>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개요: 사업 추진 배경, 추진 경과, 세부 시설 등</li> <li>• 협력 대상 및 협력 사업 내용: 세부 사업 내용, 예산 조달 방법 등</li> <li>• 연계협력사업 추진 시 주요 이슈 및 시사점</li> </ul>

## 2. 사례 분석

### 1-1. 부처 중심 연계협력사업

#### 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 생태환경의 보전 및 질 높은 여행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0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
- 업무 협약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을 선정(2010.02)하고, 기본계획 수립·예산 지원, 생태관광모델사업 컨설팅 단 구성·운영, 인프라 개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함

〈표 3-3〉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 개요

구분	세부 내용
개념	생태계의 보전과 질 높은 여행 경험의 제공,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관광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생태관광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의
협력사업	① 생태관광 관련 제도 정비 및 통합 지침의 마련 ② 생태관광 세계화 10대 모델 시범사업의 추진 ③ 생태관광 관련 프로그램·콘텐츠의 개발 및 홍보 ④ 생태관광 가이드 등 인력양성 및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 사업 ⑤ 백두대간, DMZ 생태관광 활성화 및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⑥ 자연공원내 친환경 생태휴양 기반시설 확충 ⑦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내 생태·문화공간 조성 ⑧ 생태체험형 레저스포츠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
협력 조직체계	생태관광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및 관련 부서 과장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및 관련 부서 과장
생태관광 10대 모델	(내륙습지) 창녕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협약 (해안습지) 순천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대중관광지 (화석·동굴) 평창: 백룡동굴, 동강 등 (철새도래지) 서산 천수만: 동북아 철새 중간기착지 (해안)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등 (산/강) 소백산 자락길, 진안 고원 마실길·데미샘: 산과 4대강 연계 지역 (서부 DMZ) 파주: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지역 (동부 DMZ) 화천: PLZ 관광개발계획 연계 지역 (섬) 제주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 WCC 유치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09. 02.),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녹색성장 모델 만들기 시동;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0.02.),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 창출을 위한 발걸음을 떼다

## 2) 섬 관광 활성화 사업

-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2019년 2월 섬 주민 소득 향상과 국민 관광수요를 충족을 위해 섬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 협약을 체결함
- 이는 그동안 섬 관광 정책을 관리하는데 있어 부처별 개별적인 관리·추진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4개 부처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 섬 접근성 개선 협력, 볼거리·놀이거리 마련 협력, 미식과 휴식이 있는 섬 조성을 위한 협력,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협력 등 4개 분야 협력 체계를 마련함

〈표 3-4〉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업무 협약 개요

구분	세부 내용
개념	섬 주민 소득 향상과 국민 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섬관광 활성화 부처 공동 업무 협약 체결
참여 부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부처 간 추진 사업 분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제4차 도·시·군 종합개발계획 등 섬 정주여건 개선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연안여객선 현대화, 바다로 등 섬 접근성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섬관광자원개발사업 및 걷기여행 개발 등 관광 콘텐츠 도입
협력분야	1. 섬 접근성 개선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접안시설, 편의시설(대합실, 화장실) 개선 추진</li> <li>② 선박 건조, 육상해상 교통수단 연계 방안 마련</li> <li>③ 마리나 등 섬 간 이동수단 다양화 추진</li> </ul> 2. 볼거리·놀이거리 마련을 위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스노클링, 해안 캠핑 등 해양레저관광 활동 기초시설 확충</li> <li>② 탐방로·전망대 조성,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li> <li>③ 해안누리길·섬 둘레길·걷기길 등 섬 트레킹 코스 조성</li> <li>④ 거점섬을 중심으로 주변 유·무인 도서를 연결하는 권역 단위 섬 연계 관광코스 개발</li> </ul> 3. 미식과 휴식이 있는 섬 조성을 위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섬 특화 수산물 홍보, 무인 판매대 도입 등 먹거리 개선 추진</li> <li>② 노후민박시설 정비 및 인증, 유·휴주택, 폐교 등을 활용한 마을 공동민박 운영 등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li> </ul> 4.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처별로 운영 중인 섬 관련 누리집을 연계하여, 섬 정보·교통·맛집 등 종합 정보 및 숙박·여행상품 예약 서비스 제공 추진</li> <li>② 섬의 날(매년 8.8) 기념행사 개최시 협력</li> <li>③ 섬 관광 특화상품 개발 촉진 및 홍보 및 판로 지원</li> <li>④ 해외 관광객 유치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li> <li>⑤ 섬 관광자원 홍보</li> </ul>
협력 조직체계	섬관광 활성화 협의체 구성·운영 - 각 부처 차관급 공동의장으로 구성 -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9. 02.), 4개 부처 손잡고 섬 관광 활성화 나선다

## 나. 디엠지(DMZ) 평화의 길

### 1) 사업 개요

- 디엠지(DMZ) 평화의 길은 디엠지(DMZ) 남북평화 촉진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 강원에서 강원 고성까지 연결하는 총 524km의 한반도 동서횡단 도보 여행길 조성사업임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등 5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노선 조사, 도보여행길 정비 및 연결, 거점센터 설치, 통합 브랜드(BI) 개발, 10개 테마노선 구축 및 시범사업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표 3-5〉 디엠지(DMZ) 평화의 길 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위치	디엠지(DMZ) 접경지역 10개 지자체: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길이	도보여행길 524km(인천 강화~강원 고성)
사업 기간	2019년~2022년
총 사업비	28,571백만 원(행정안전부 기준: 국비 20,000, 지방비 8,571)
사업 내용	도보여행길 정비 및 연결, 거점센터 설치,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통합 브랜드(BI) 개발, 통합정보체계 구축, 10개 테마 노선 운영 등
추진 경위	<p>2019. 01.~04.: 부처 합동 'DMZ 평화의 길' 조성 추진 협의</p> <p>2019. 04.: DMZ 평화의 길 조성·운영을 위한 5개 부처 MOU 체결</p> <p>2019. 04.06.08: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개방 - 고성(4.27), 철원(6.1), 파주(8.10)</p> <p>* 운영 중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파주, 철원 9.19.~ / 고성 10.1.~)</p> <p>2019. 05.~12.: DMZ 평화의 길 노선조사</p> <p>2020. 05.~06.: DMZ 평화의 길 추가 7개 노선 확정</p> <p>2021. 05.~09.: DMZ 평화의 길(횡단노선, 테마노선) 통합운영체계(안) 마련</p>
노선도	<p>DMZ 인근에 분단의 현장과 뛰어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한반도 동서횡단 도보여행길</p>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21년), 디엠지 평화의 길 통합운영체계(안)

## 2) 협력 대상 및 사업 내용

- 디엠지(DMZ) 평화의 길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5개 부처 간 MOU 체결 및 DMZ 평화의 길 조성·운영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별 업무와 역할을 설정하는 등 통합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DMZ 평화의 길(동서횡단길) 전체의 조성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DMZ 평화의 길 노선 조사와 10개 테마 노선에 대한 운영·홍보의 총괄 역할을 담당함

〈표 3-6〉 디엠지(DMZ) 평화의 길 통합운영체계(안)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체계	DMZ 평화의 길 조성·운영 협의회(5개 부처 차관 참여)
협의회 구성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현장 운영: 한국관광공사, 기초지자체
부처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DMZ 평화의 길 노선 조사, 운영·홍보 총괄 행정안전부: DMZ 동서횡단길 연계, 도로길 조성, 거점센터 조성, 지자체 협조 지원 등 통일부: DMZ 세계평화공원 연계 방안 수립·추진 국방부: DMZ 내 안전관리 환경부: DMZ 생태조사 및 모니터링
지역 주민 참여	지역의 문화유산해설사, DMZ 평화의 길 전문 해설사 양성 등 지역주민 참여방안 마련
기타	지속가능한 통합 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담조직 설립 검토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21년), 디엠지 평화의 길 통합운영체계(안)

〈표 3-7〉 주요 부처별 디엠지(DMZ) 평화의 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구분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	추진 경과 (도로길 조성) 지역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노선조사를 기반으로 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노선안 확정('20.2.) 및 설계(추진 중) (거점센터 조성) 거점센터 10개소('19년 5개소, '20년 5개소) 설계(추진 중) (통합브랜드 BI 개발) 개발용역 진행 중
	향후 계획 (도로길 조성) 도로길 위험구간 등 정비 및 안내표지 설치(~'22.6.) (거점센터 조성) 거점센터 10개소 리모델링 완료(~'21.12.) (민통선 출입관리시설) '21년 예산(23억) 확보, 설계 및 설치공사(~'21.12.) (운영체계 마련) 민통선 내 출입관리 시설 운영, 모바일 앱(두루누리)과 연동된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등(~'22.6.)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경과 (3개 노선 개방)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단계 개방('19년 고성 4.27, 철원 6.1, 파주 8.10)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잠정 중단 (7개 노선 확정) 7개 테마노선안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실시
	향후 계획 (순차 개방) 지자체 준비상황에 따라 10개 테마노선 본격 개방 추진 (개방 확대) 국내 거주 외국인 시범 운영 등 외국인 개방방안 마련('21.9월~)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21년), 디엠지 평화의 길 통합운영체계(안)

## 다. 초정 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

### ① 사업 개요

- 초정 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은 세계 3대 광천 수 중 하나인 초정약수와 세종대왕 한글창제의 기록을 스토리텔링 한 지역 특화관광거점 모델 구축사업으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선정함
  - 전국 11개소의 시범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사업임
- 약 250억 원이 투입되는 초정 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은 초정치유마을, 세종창의 마을, 초정광천수 보전, 산업시설 관광자원화 청주시~증평군 광역연계사업 등 5개의 사업으로 구성,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단위사업별로 진행 중임

〈표 3-8〉 초정 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증평군 율리 일원
면적	부지면적: 31,828㎡, 연면적: 3,500㎡
사업 기간	2019년~2023년 (총사업비 24,950백만 원(국비 9,100, 도비 2,730, 시·군비 13,120))
도입 시설	5개의 테마사업 - 초정치유마을, 세종창의마을, 초정광천수 보전, 산업시설 관광자원화, 청주시~증평군 광역연계
추진 주체	지자체: 청주시·증평군(주관), 충청북도(참여)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주관), 환경부(협조), 국토교통부(협조: 예산)
추진 실적 및 계획	2018. 12.: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2019. 04.: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06.: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충청북도·청주시·증평군) 〈초정치유마을 조성사업〉 2019. 11.: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 2019. 12.: 행정안전부 수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020. 04.: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020. 1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2021. 04.: 초정치유마을 건축설계 공모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1. 10.: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공원조성계획 수립 완료 2022. 01.: 공사 착공, 2023. 12.: 공사 준공 〈초정광천수 보전〉 2020. 06.: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위수탁계약 2020. 07.: 전수조사용역 및 관측망 설치 착수(하수정책과), 2021. 12.: 준공

자료: 청주시 관광정책과 내부자료

## ② 협력 대상 및 사업 내용

-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은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의 특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부처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참여부처로 구성되어 추진 중임
  - 부처별 산발적인 칸막이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종합 패키지 사업 지원을 위해 부처 간 협업 사업으로 추진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관부처로 사업에 대한 감독, 관리, 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는 간사 부처로서 국가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의 역할을, 환경부는 초정광천수 보전과 관련된 지하수 보전 구역 지정 등 관련 법적 사항 협의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상황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에 필요한 의견검토서 행정자치부와 협의, 협약 변경사항 발생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자체 의견 반영하여 협의 등의 세부 역할을 담당함

〈표 3-9〉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 세부 사업 내용

(단위: 백만 원)

단위 사업명	사업비	세부 내용	비고
계	24,950	-	-
초정치유마을	21,180	초정광천수를 이용한 물 체험센터 건립 체류형 치유 관광 프로그램 운영	2023.12. 준공 예정
세종창의마을 (초정행궁 2단계 사업)	850	문화공원 연목을 행궁과 조화롭게 정비(분수대, 다리, 과학 기구 설치) 한글창제 원리, 과학기구 등을 설치,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2021.10. 준공 예정
초정광천수 보전	620	지하수 전수 정밀조사 및 보조관측망 설치 용역 - 전수조사 실시를 통한 수위 변화 등 데이터 수집 및 관측 망 설치 -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등 대책 수립	2021.12. 준공 예정
산업시설 관광자원화	100	초정 등 산업관광 여건 분석 및 신규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	2021.08.준공
청주시~증평군 광역연계	2,200	증평 좌구산~초정리 연결 이음길 조성사업(준공) 지역 공동 마케팅 - 초정홍보대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이효재(한복 디자이너 검 보자기 아티스트) - 초정 BI 개발 용역 - 초정광천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보조금 교부	2020.12. 준공 마케팅 추진 중

자료: 청주시 관광정책과 내부자료 재구성

## 2-2.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사업

### 가.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 ① 사업 개요

-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사업은 청정 함양 산양삼을 산악관광과 접목시켜 산촌지역의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모델로 개발한 휴양치유 복합관광지구임

〈표 3-10〉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22번지, 원산리 산1번지 일원
면적	273ha
사업 기간	2012년~2021년
개장일	2021년 3월
총 사업비	852억 원(국비 304, 도비 292.6, 군비 255.4)
도입 시설	광평지구(6개소): 치유의 숲, 대봉산 자연휴양림, 대봉힐링관, 대봉산림욕장, 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거함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원산지구(2개소): 산림레포츠단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추진 경위	2013. 03.: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선정 2019.: 대봉산휴양밸리, 거함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 대봉힐링관 등 준공 2020.: 산림레포츠단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준공 2021. 04.: 대봉산휴양밸리 전면 개장
조감도	

자료: 함양군 휴양밸리과 내부자료

- 광평지구(대봉스카이랜드), 원산지구(대봉캠핑랜드) 등 2개의 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치유의 숲, 대봉산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단지 등 8개의 개별사업으로 조성됨  
- 2021년 9월에 개최된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의 제2행사장으로도 활용 중임

## ② 협력 대상 및 사업 내용

-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사업은 초기 함양 산삼휴양밸리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사업이 경상남도의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함
-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산림청의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를 중심으로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대봉힐링관), 문화체육관광부의 거함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사업 등이 결합되어 복합관광지구를 완성함
  - 거함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내륙권발전 선도사업에 포함되어 초기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신규 사업 불허 방침에 따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추진함

〈표 3-11〉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부처별 사업 내용

(단위: 억 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재원 조달	시설 내용	준공 여부
광평 지구	치유의 숲	50	산림청 (지특)	대봉치유관(소회의실, 농특산물 판매장, 치유의 방), 요리체험장, 치유산책로(L=547m), 모험놀이숲(총 2개 코스, 장애물 27종)	준공
	대봉산 자연휴양림	50	산림청 (지특)	휴양관(1동), 숲속의 집(6동), 관리사무소, 해피쿠킹장, 야영장(데크 18면), 캠핑지원센터, 웰니스하우스(펜션형 1동)	준공
	대봉힐링관	70	환경부	대봉힐링관(식당, 건강배움터, 건강체험존, 기초검진실, 다목적강당), 숙소(4인 7실, 10인 3실)	준공
	대봉산림욕장	4	산림청 (지특)	산책로(1.7km), 등산로(0.9km), 자연관찰원(얼음분수 45m, 돌탑정원), 유아숲체험원(4,000㎡), 목교 2개소, 야외쉼터	준공
	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250	도비 (모자이크 사업)	모노레일 L=3.933km(차량 8인승 10대), 상부승강장(전망대, 화장실), 하부승강장(매표소, 탑승대기실, 통제실)	준공
	거함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	98	문화체육 관광부	대봉휴양밸리관, 탐방로(1.3km), 주차장, 광장바닥분수	준공
원산 지구	산림레포츠단지	60	산림청 (지특)	대봉캠핑지원관, MTB초급코스(1.41km), MTB체험장, 대봉짚라인(3.27km, 광평지구), 자기발전모노레일(100m)	준공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270	산림청 (지특)	캠핑지원센터, 대봉먹거리관, 대봉사나래관(4인실 20개), 숲속의 집(4인실 15동), 야영장(데크 14면), 주차장(269대)	공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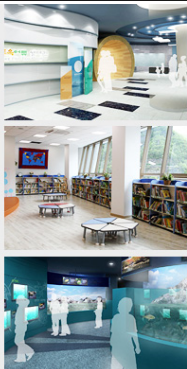
자료: 함양군 휴양밸리과 내부자료 재구성

## 나. 단양다누리센터

### ① 사업 개요

- 단양다누리센터는 단양관광의 랜드마크 시설로서 민물아쿠아리움, 관광정보관, 도서관, 4D 체험관, 낚시박물관,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연인원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종합문화관광 복합시설임
- 2006년 6월 충청북도로부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양다누리센터라는 명칭으로 시설을 조성하게 됨

〈표 3-12〉 단양다누리센터 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별곡리 569번지)
면적	부지면적: 9,596㎡, 연면적: 14,397㎡ / 지하 2층, 지상 4층
사업 기간	2008년~2012년
총 사업비 (초기)	본 사업비: 291억 원(국비 66, 도비 105, 군비 120) 부대 사업비: 19억 원(국비 1, 군비 18)
도입 시설	아쿠아리움: 150개 수조, 234종, 23,000여마리 도서관: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독서실 등 낚시 박물관, 관광홍보관, 4D 체험관, 스카이라운지, 공용버스터미널, 농특산물판매장, 지하주차장 쓰가리 조형물, 옥외·옥상 휴게공간
추진 경위	2006. 06.: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계획 승인 2007. 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지 선정, 해양수산부 토속어류생태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2008. 04.: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 등 추진 2009. 04.: 착공 2012. 05.: 개관
이미지	 

자료: 단양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내부자료 ; 단양다누리센터 홈페이지(<https://www.danyang.go.kr/danuri/1384>)

## ② 협력 대상 및 사업 내용

- 단양다누리센터(단양관광종합타운)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단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인허가를 추진하였으며, 사업 재원은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171억 원)과 농림수산식품부의 토속어류생태관조성사업(10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20억 원)을 통해 조달하게 됨
  - 이외 디지털 홍보관, 낚시전시관, 농특산물 판매장, 쏘가리 조형물 등 센터 내부 부대사업은 대부분 군비를 통해 조달함
-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예산은 단양다누리센터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골조, 외부 공간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세부 시설 운영사업인 다누리아쿠아리움과 다누리도서관은 해당 부처의 예산사업을 통해 내부 전시 및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
- 이러한 자원 조달 체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사업과 동일한 사업 모델의 성격을 띄고 있음
- 한편 단양군은 단양다누리센터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 충북도 3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을 통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별을 테마로 한 ‘별별스토리관’을 추가적으로 조성함

〈표 3-13〉 단양다누리센터 부처별 사업 내용

(단위: 억 원)

사업명	사업비	재원 조달	시설 내용	비고
1차	다누리센터 전체	171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다누리센터 기반시설, 공용버스터미널, 지하 주차장, 옥외·옥상 휴게공간 등
	다누리아쿠아리움	100	농림수산식품부 토속어류생태관 조성사업	면적: 3,864㎡, 지하 2층, 지상 1층 수조: 전시수조 118개, 순치수조 32개, 약 1,200톤 전시생물: 234종 23,000마리 7개 전시실, 기획전시실, 야외전시관 등
	다누리도서관	2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건립 지원사업	면적: 1,508㎡, 지상 2층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키즈라이브러리, 디지털자료실, 문화강좌실, 다문화자료실 등
보완	별별스토리관	21	충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면적: 400㎡ 지하 1층 감성존, 지상 3층 체험존 별과 우주를 테마로 한 3D 영상, 사운드, 미디어아트

자료: 단양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내부자료 재구성

## 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 ① 사업 개요

-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는 영동군 미래 100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계획된 과일·와인, 문화·예술, 휴식·휴양 등을 테마로 한 힐링관광지임
- 2003년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2009년 늘머니 과일랜드 관광지 지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몇 차례의 민자유치 실패 이후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 민선 6기 들어 공공사업 중심의 레인보우 힐링타운(공공시설 사업부지 통칭) 사업이 추진되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됨

〈표 3-14〉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익리 일원
면적	부지면적: 1,749,477㎡(공공부지 784,070, 민자부지 965,407)
사업 기간	2010년~2023년
총 사업비	2,693억 원(공공 1,418, 민자 1,275) - 공공: 국비 465, 도비 302, 군비 651 / 전액 확보
도입 시설	공공: 과일나라테마공원, 와인연구소, 와인터널, 복합문화예술회관, 웰니스단지, 복합문화마당(광장), 힐링센터, 민간: 골프장(18홀), 호텔, 골프빌리지, 힐링연수원,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 상업판매거리, 승마장
추진 경위	2003. 05.: 행정자치부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2005. 07.: 제3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변경 승인(문화관광부) 2009. 05.: 늘머니과일랜드 관광지 지정(충청북도 고시 제2009-149호) 2010. 10.: 늘머니과일랜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충청북도 고시 제2010-17호) 2013. 05.: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사업 착공 2013. 06.: 와인연구소 조성공사 착공 2016. 02.: 와인터널개발사업 공사 착공 2016. 03.: 복합문화예술회관 공사 착공 2016. 08.: 국토교통부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 선정 2017. 03.: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공사 착공 2017. 04.: 과일나라테마공원 개장 2017. 08.: 관광지 지정변경 고시(늘머니 과일랜드 →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2018. 10.: 와인터널 개장 2019. 04.: 복합문화예술회관 개관 2020. 03.: 민간개발사업자 선정 공모 2020. 05.: 민간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20. 07.: 민간개발사업(골프장, 호텔, 골프 빌리지) 실시협약 체결 2021. 08.: 민간개발사업 착공

자료: 영동군 힐링사업소 내부자료

## ② 협력 대상 및 사업 내용

- 민선 3기부터 추진해오던 ‘선 민간개발, 후 공공개발’ 방식을 민선 6기 들어 ‘선 공공개발,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관광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함
- 관광지 총괄계획 수립 후 와인터널, 복합문화예술회관, 웰니스단지 등 기 확정된 예산사업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의 공공사업을 완성하게 됨
- 이러한 공공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0년 7월 750억 원 규모의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8월 착공에 들어감

〈표 3-15〉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부처별 사업 내용

(단위: 억 원)

사업명		사업비	재원 조달	시설 내용	준공 여부
과일나라테마공원		12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복합사업 지원	면적: 66,682㎡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과일가공체험실, 소회의실 (50명), 대회의실(120명), 과수재배단지 등	준공
와인연구소		58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신설사업	면적: 41,829㎡ 연구동, 와인제조실, 저온저장고, 시험포장	준공
와인터널		135	충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면적: 11,024㎡ 길이 420m, 폭 4~12m, 높이 4~8m, 10개 테마관, 레스토랑, 와인판매장, 이벤트를, 잔디 광장, 주차장	준공
복합문화예술회관		2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연면적: 4,594㎡(지하 1층, 지상 2층) 대공연장(441석), 다목적 강단, 전시실, 유아 놀이방, 무대조정실, 분장실 등	준공
웰니스단지		180	산림청 충북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	면적: 65,282㎡ 숙박동(10동 20실), 산악초 자원센터, 숲 체험관, 관리동, 주차장 등	준공 예정 (‘21.10)
힐링센터		197	충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연면적 4,041㎡(지하 1층, 지상 3층) 테라피관, 상상놀이터, 내부 둘레길 등	공사 중
기반 시설 조성	투자선도지구	100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내부순환로(1.5km), 주차장(242대), 인공폭포 조성	공사 중
	광장 조성	137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면적: 32,235㎡ 광장(W:80m), 바닥분수, 회랑 등	공사 중
	테마공원 연결도로	46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L=1.0km, B=12m)	공사 중

자료: 영동군 힐링사업소 내부자료 재구성

## 라. 제천 의림지들 자연치유 특구

### ① 사업 개요

- 제천 의림지들 자연치유 특구는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국가명승 제20호)의 농경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 공간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천시 핵심사업 임
- 의림지들의 고유한 역사자원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융합한 자연치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친환경농업단지, 다양한 치유자원을 활용한 자연치유단지 조성 등 2개의 특화사업과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함

〈표 3-16〉 제천 의림지들 자연치유 특구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
면적	부지면적: 1,954,440㎡(친환경 농업단지 1,483,248, 자연치유단지 471,152)
사업 기간	2018년~2026년 (총사업비: 사업비1,600억 원)
도입 시설	2개 특화사업(친환경농업단지, 자연치유단지), 10개 세부사업 구성
추진 경위	2018. 07.: 핵심공약사업 추진 결정 및 드림팜랜드 TF팀 신설 2019. 01.: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 조직 개편 2019. 11.: 한방테마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모 선정 2020. 0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모사업 선정 / 술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선정 2021. 02.: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 선정 2021. 04.: 제천 의림지들 자연치유 특구 지정
배치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제천 의림지들 자연치유 특구 (면적: 1,954,400㎡)</b></p> <p>[1] 친환경 농업단지 (면적: 1,483,248㎡)</p> <p>[2] 자연치유단지 (면적: 471,152㎡)</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자연치유단지 (면적: 471,152㎡)</b></p> <p>① 한방테마 지방정원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면적: 104,740㎡)</p> <p>② 술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면적: 65,922㎡)</p> <p>③ 의림지들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면적: 90,500㎡)</p> <p>④ 자연치유단지 지역균형발전사업 (면적: 105,328㎡)</p> <p>⑤ 자연치유단지 관광자원개발사업 (면적: 81,788㎡)</p> <p>⑥ 신규사업 발굴·예정 (면적: 22,874㎡)</p> </div> </div>

자료: 제천시 관광미식과 내부자료

## ② 협력 대상 및 사업 내용

- 제천 의림지둘 자연치유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6개의 단위사업 672억 원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6년간 총 1,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임
- 사업비의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제천시 각 유관 부서별(산림공원과, 자연환경과, 관광미식과)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였으며, 충북도 등 관련 기관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예산을 확보함
  - 지방 이양된 산림청의 지방정원 및 목재문화체험장사업, 환경부의 도시생태휴식공간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과 함께 공모사업인 충북도 제4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 청정사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임

〈표 3-17〉제천 의림지둘 자연치유 특구사업 부처별 사업 내용

(단위: 억 원)

사업명	사업비	재원 조달	시설 내용	사업기간
한방테마 지방정원 조성사업	60	산림청 지방정원 (지방 이양)	면적: 104,740㎡ 지방정원, 목재문화체험장	19~2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52	산림청 목재문화체험장 (지방 이양)		20~24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30	환경부 도시생태휴식공간 (지방 이양)	면적: 65,922㎡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20~24
의림지둘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130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 청정사업 (기금)	면적: 65,922㎡ 의림지 물길 재현, 농경문화체험장, 신기한 자연박물관, 자연치유센터	21~24
자연치유단지 지역균형발전사업	220	충북도 제4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면적: 105,328㎡ 농업마루뜰 조성 및 도시(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치유누리뜰 조성 및 복합치유콘텐츠 사업, 라온놀이뜰 조성 및 문화예술치유 활성화 사업 등	22~26
자연치유단지 관광자원개발사업	18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 (지방 이양)	면적: 104,740㎡ 안내·편의, 전시시설, 체험시설(테마관광 열차), 휴양시설(캠핑장)	22~26
신규사업 발굴 예정	-	미정	면적: 22,874㎡ 산들산들뜰판(경관농업), 전통체험마을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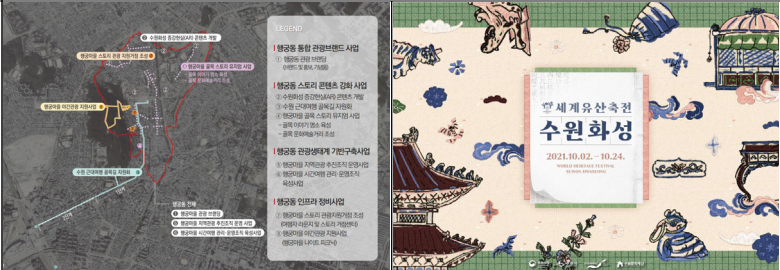
자료: 제천시 관광미식과 내부자료 재구성

## 마. 수원화성 관광자원 육성사업

### ① 사업 개요

- 기존 문화재 보전·관리·활용 및 세계유산 활용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수원 화성 육성 정책에서 관광객을 위한 이용 편의 및 다양한 관광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과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한 관광자원 육성사업을 추진함
  - 수원화성 관광자원 육성사업은 정식 명칭은 아니며, 2020년~2021년 수원시 관광과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을 포괄하여 명명함
- 이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부처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기반 조성사업, 관광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을 추진 중임
- 이 기간 동안 수원시 관광과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열린관광지 사업,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등 총 5개 사업임

〈표 3-18〉 수원화성 관광자원 육성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
자원 특징	조선 22대 정조대왕이 정헌세자에 대한 효심으로 부친의 원침을 수원 화산으로 옮긴 후 1796년 9월 완공된 성 사적 제3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총 사업비	25,075백만원
도입 사업	5개 공모사업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열린관광지 사업, 세계유산축전사업,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추진 경위	2020. 03.: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 2020. 05.: 2020년 예비 열린 관광지 선정 2020. 10.: 2021년 세계유산축전 사업 선정 2020. 10.: 2021년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 선정 2021. 06.: 2021년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이미지	

자료: 수원시(2021), 수원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 ② 협력 대상 및 사업 내용

- 수원화성 관광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관광기반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열린 관광지 사업을 통해 조달하고, 스마트 관광 안내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은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조달하는 등 통합적인 로드맵 기반에 공모사업을 추진함
- 공모사업 간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 수원문화재단 관광팀을 참여시켰으며, 공모사업으로 구축된 관광기반을 연계 활용토록 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기 계획된 관광 안내 체계 및 홍보 채널 사업은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이후 제외시킴
  -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구축된 관광 플랫폼의 기능 개선 및 콘텐츠 강화를 위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내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사업을 반영함

〈표 3-19〉 수원화성 관광자원 육성사업 세부 사업 내용

(단위: 백만 원)

공모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비	세부 내용
계		25,075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2,000	대상: 행궁동 일원 및 화성행궁~수원역 기간: 2020~2024년(5년간) 사업: 행궁마을 관광 브랜딩, 수원화성 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 수원 근대여행 골목길 자원화, 행궁마을 골목 스토리 뮤지엄, 행궁마을 지역관광 추진조직 운영, 행궁마을 시간여행 관리·운영조직 육성, 행궁마을 스토리 관광 지원거점 조성, 행궁마을 야간관광 지원
열린관광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875	대상: 수원화성 연무대와 장안문, 화성행궁 일대 사업: 휠체어 접근성 개선, 무장애 동선 정비, 촉지/음성 관광안내판 설치, 성곽 위 보행로 정비, 장애인 문화해설 콘텐츠 개발 등
세계유산축전 사업	문화재청	2,200	주제: 의궤는 살아있다 기간: 2021년 10월 2일~10월 24일 사업: 정조, 효를 행하다(온라인 공연), 상상의 정원(설치 조형물), 축성의 의궤 인형극(온라인 공연) 등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	문화재청	2,000	주제: 만천명월 - 정조의 꿈, 빛이 되다 기간: 2021년 9월 24일~10월 24일 사업: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미디어파사드&라이트쇼, 미디어 퍼포먼스, 행행산책로, 성안마을 미디어아트전, 생생실감-디지털 헤리티지, 수원화성 랜선 미디어아트쇼)
스마트 관광도시	문화체육관광부	7,000	수원화성 미개방·미복원 유적지 가상·증강현실 체험형 콘텐츠, 위치 기반 관광정보 제공 및 증강현실 길 안내, 교통정보 통합 제공 및 실시간 주차장 안내 등

자료: 수원시(2021), 수원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 3. 종합분석

#### 가. 부처중심 연계협력사업

##### ① 협약 방식을 통한 부처간 협력사업 추진

- 부처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함
  - 다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함
- MOU체결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성 및 내용을 문서 등으로 합의하여 진행함
  - '섬 관광활성화 사업'의 경우 섬 주민 소득 향상과 섬관광 활성화라는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업무협약을 체결함

##### ② 통합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참여구성원은 각 부처 차관급을 공동의장으로 구성하고 실무진으로는 관련한 담당사업 부서 과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함
- 그러나 이러한 협의체는 지속성 없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완료 이후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음

##### ③ 부처간 추진사업 분야 및 역할정립

-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부처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추진가능 협력사업을 제시함
-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를 선정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디엠지(DMZ) 평화의 길 사업은 부처별로 메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 제시로 책임성을 강화함

-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부처간 연계가능한 사업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나. 지자체중심 연계협력사업

### ① 단위 사업별 부처예산사업 중심의 퍼즐식 맞춤형 협력 사업방식

- 부처별 연계협력을 고려한 관광개발계획수립이 아닌 단위 사업별로 추진되는 부처 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유사분야 기존사업(타 부처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수준임
  -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부처예산사업으로 조달 가능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단위 사업별 특성에 맞는 부처 예산 사업을 발굴하여 전체 사업을 완성함
- 따라서 기존의 부처 연계형 사업은 부처예산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내용이 조정되고, 기존사업 방향과 맞지 않거나 관광자원으로써의 차별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음
  - 기존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과 연계하여 타부처 유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처 사업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형식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 ② 동일 사업 부지 및 사업내용으로 부처간 예산 조달과정에 중복성 문제: 성공사례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기획 추진

- 단지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부처별 조달되는 예산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함
  - 동일 부지 또는 동일 사업 내 부처 간 예산 투입 시 중복성 여부에 대한 지적 또는 문제 제기 등의 사례가 발생함
  - 기존의 성공사례들은 단위 사업별로 중복되지 않게 공간(부지)을 구획하고, 개별적인 사업 명칭을 통해 예산 조달 및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부처별 예산 중복성을 방지함

#### 부처별 예산사업 중 중복성 사례

- 상주시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과 2009년 사이 환경부로부터 72억 원(국비 53억 원, 도비 22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9년에도 이 사업과 같은 부지에 사업내용도 유사한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7억 원(국비 145억 원, 도비 22억 원)을 또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남(상주문경로결신문, 2013.9.26.)

③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별도전담 조직 운영

- 대규모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단일 부서 중심의 부처형 지원사업 발굴 한계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단지형 사업 추진 시 단일 부서 중심의 지특회계(지역 발전특별회계)사업만으로는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대규모 단지형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부서간 협력을 통해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단지를 완성함
- 단지형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통일성 결여 문제
  - 지자체 여러 부서가 부처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동일 단지 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별적인 설계 및 공사 발주 시 단지의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음
  -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초기 예산 발굴 및 기본설계, 인허가 등은 부서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시점에는 효율적인 사업 실행 및 사업의 통일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함

전담조직 추진 사례

-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기획감사실 힐링타운 T/F팀에서 계획을 총괄하고, 국악문화체육과, 산림과 등에서 개별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인 힐링사업소를 설립운영하여 체계적인 사업 집행 및 향후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제천시(관광마식): 드림팜랜드를 중심으로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후 조직 개편을 통해 현재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사업을 통합하여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 추진예정

④ 부처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완성형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 가능

- 단지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단지 내 연결도로, 상·하수도 등 공동 기반시설 설치의 문제가 발생함
  - 대규모 단지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단위 사업 중심의 부처별 예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위 사업을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와 기반시설 예산을 부처별 예산으로 조달하기 쉽지 않은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경우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와 같은 별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함
- 단일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다부처 콘텐츠형 공모사업을 통해 관광기반 완성
  -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콘텐츠형 공모사업의 특성 상 단일 공모사업을 통해서

는 제대로 된 관광기반 확충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단일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유치 가능한 부처별 콘텐츠형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공모를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기반을 확보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함
- 수원시의 경우 문화재청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및 축제, 프로그램 운영 중심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목적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최근 2년간 (2020~2021년) 유관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 관광자원 육성사업을 추진함

#### 다. 시사점

- 앞서 검토한 부처 연계협력 사례는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추진해온 부처간 연계협력과 지자체에서 기존에 추진해온 단일사업 중심의 부처 연계사업 사업 중 성공적으로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보았음
- 이를 통해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인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여 제시함

〈표 3-20〉 종합분석

구분	분석 주요 내용
부처중심 연계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방식을 통한 부처간 협력사업 추진</li> <li>• 통합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li> <li>• 부처간 추진사업 분야 및 역할정립</li> <li>→ 중앙부처의 정책사업 영역을 고려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필요</li> <li>→ 부처 연계 사업추진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 효과성 또는 지속성 문제</li> </ul>
지자체중심 연계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 사업별 부처예산사업 중심의 퍼즐식 맞춤형 협력사업으로 추진</li> <li>• 동일 사업 부지 및 사업내용으로 부처간 예산 조달과정에 중복성 문제</li> <li>•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별도전담 조직 운영</li> <li>•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개발 연계사업 발굴로 완성형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 가능</li> <li>→ 부처예산 사업을 발굴하여 동일한 사업권역에 퍼즐식으로 다부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대상지 간 연계로 추진되는 수준</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유관부처 연계사업(예산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속적 확장 추진</li> </ul>
▼	▼
시사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양한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수립 필요</li> <li>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지역관광개발사업 발굴 필요</li> <li>③ 부처간 협력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통합운영 등 전담 조직 필요</li> </ol>

## 제2절 부처 연계사업 심층분석

### 1. 분석 개요

#### 가. 대상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도의 사업발굴을 지원하는 지자체 공모사업임
  -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5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5개년 사업임
- 지역수요맞춤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서천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2019년에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서천군 사업대상지인 장항읍 일원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주요 정부부처의 자원개발사업이 다수 추진 중인 지역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부처 간 연계협력방안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지역임

#### 다. 분석내용 및 조사방법

- 서천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2019년 5월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은 2020년 12월에 완료되었음
  - 이에 따라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사업대상지내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현황분석 및 중복사업 검토, 이를 위한 유관부처와 연계방안 검토를 위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 사업별 연계방안 논의, 사업계획 조정을 통합 구체화 등의 과정을 사업추진 흐름별로 분석하고자 함

- 이러한 분석내용에 대한 조사 방법은 서천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관계자 자료 협조 요청 및 인터뷰를 통해 분석함

〈표 3-21〉 심층분석 방법 및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분석 방법	서천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관계자 자료 협조 요청 및 인터뷰
분석 내용	관련계획 검토 등 사업추진 여건분석 과정 연계방안 검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방식 사업별 연계방안 논의 내용 및 주요 절차 사업계획 내용 조정 및 연계사업

## 2. 심층분석 주요내용

### 1) 사업 개요

- 서천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으로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도의 사업발굴 및 추진 위해 2019년부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서천군 및 합천군 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후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
- 서천군은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서천군 장항읍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 장항읍은 장항제련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근대산업의 중심지로 주력산업 쇠퇴 이후 도시재생 사업 등이 다수 추진 중인 지역임
  - 서천군은 장항읍 구도심과 장항제련소 운영으로 인한 토지오염 정화사업이 진행 중인 송림 일원을 핵심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계획 수립

## 2) 관련사업 추진현황

- 2020년 기준 서천군 장항읍 일원에서 추진 중인 활성화 사업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광활성화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등 3개 유형에 걸쳐 총 31개 사업으로 나타남
  -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장항읍 구도심 일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생형 사업이 다수 포함
  - 관광활성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와 프로그램 운영형 사업이 포함
  - 인프라 구축은 장항읍과 주변지역 간 동방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이 포함
- 장항읍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부처예산 및 사업 성격에 따라 기획감사실, 투자유치과, 관광축제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등 다수 부서가 분담하여 추진 중
- 추진 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사업 등 다양한 국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2〉 장항 활성화 사업 추진 세부 사업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연번	구분	담당부서	사업명	사업현황(단위: 백만 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 31개 사업	643,767	497,709	37,996	95,957	9,372
1	중심지 활성화 사업 (8건)	기획감사실	장항화물역 철도부지 활용 복합문화 테마지구 조성	11,000	5,500	2,750	2,750	-
2		관광축제과	장항6080 맛나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500	250	-	250	-
3		문화체육과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	1,489	1,489	-	-	-
4		문화체육과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7,300	-	3,270	4,030	-
5		문화체육과	장항 6080 골목길 프로젝트/도선장 가는 길	3,910	990	1,917	1,003	-
6		지역경제과	장항 전통시장 특성화	2,300	1,150	-	1,150	-
7		도시건축과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4,333	1,873	-	2,460	-
8		도시건축과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000	5,600	560	1,840	-
9	관광 활성화	기획감사실	브라운필드 환경테마지구 조성	418,330	377,200	15,765	25,365	-

연번	구분	담당부서	사업명	사업현황(단위: 백만 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10	사업 (10)	관광축제과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5,525	1,807	1,218 (충남405)	2,458 (서천583)	42
11		관광축제과	생활관광활성화사업/서천어 디가?장항6080뉴트로여행	100	50	-	50	-
12		관광축제과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21,900	10,950	-	10,950	-
13		관광축제과	생태원-도시탐험역-자원관 연결 궤도형 전기차 설치	25,600	12,800	-	12,800	-
14		관광축제과	구)장항제련소~송림산림욕 장 그룹형 곤돌라 설치	9,000	-	-	-	9,000
15		관광축제과	장항 아간경관조명 설치사업	1,430	700	-	730	-
16		문화체육과	장항 선셋 페스티벌	750	-	375	375	-
17		산림축산과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5,000	2,500	750	1,750	-
18		공공시설 사업소	장항 스카이워크 활성화 사업	605	-	-	605	-
19	인프라 구축 사업 (13건)	기획감사실	동백대교 개통 대응	-	-	-	-	-
20		투자유치과	서천 해양수산 폴리텍대학 건립사업	31,538	22,170	-	9,368	-
21		투자유치과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24,000	10,000	7,000	7,000	-
22		투자유치과	장항국가산단 100% 분양, 1조원 투자유치	-	-	-	-	-
23	인프라 구축 사업 (13건)	투자유치과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20,000	20,000	-	-	-
24		해양수산물	서천-군산 공동조업수역 설정	-	-	-	-	-
25		해양수산물	장항항 항만 재개발 사업	미정	-	-	-	-
26		해양수산물	여항, 포구 개발 (송림항, 원수포구)	4,000	-	1,200	2,800	-
27		해양수산물	송림항 어촌뉴딜 300	13,157	9,210	1,184	2,763	-
28		건설과	유부도 바다진입로(돌제) 개량사업	1,200	1,200	-	-	-
29		도시건축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5,800	-	2,400	3,400	-
30		도시건축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장항 성주지구)	12,000	9,000	-	3,000	-
31		도시건축과	성원그린나래 도시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000	3,270	420	980	330

자료: 서천군 내부자료, 2020년 기준

### 3)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연계방안 검토 추진

- 서천군은 지역주도의 관광개발추진이라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장항읍 일원에 추진 중인 유사 관련사업과의 중복 최소화 및 연계협력 방안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계획 조정 실시함
-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도출하고, 세부적인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함

#### ① 사업연계방안 검토절차

- 서천군의 사업연계방안 마련 절차 중 특이한 점은 유관사업을 추진 중인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한 점으로 고려됨

〈표 3-23〉 사업조정 절차

<p><b>관련계획 검토 등 사업추진여건 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읍 일원 주요 관광자원 운영현황 분석</li> <li>• 장항읍 일원에 추진 중인 관련계획 현황 분석</li> <li>• 기타 사업추진환경 분석 및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li> </ul>
<p><b>연계방안 검토 위한 추진체계 구축 (행정협의회 구성·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한 핵심 사업 도출</li> <li>• 서천군 내에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부서와의 긴밀한 논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li> </ul>
<p><b>사업별 연계방안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협의회 중심으로 주요 사업 추진현황 세부 검토</li> <li>• 중복계획 최소화, 사업 간 연계방안 마련 위한 세부 방안 논의</li> <li>• 주요 단계별 의견수렴 절차 이행</li> </ul>
<p><b>사업계획 조정 및 구체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여건 및 주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li> </ul>

#### ② 세부 추진과정별 주요 검토 내용

- 장항읍 일원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성 최소화 및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각 부서가 추진 중인 주요 관련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 부서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장항읍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관련계획을 **완료단계**, **추진단계**, **추진준비단계**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1차적으로 분류함
  - **(완료단계 사업)** 완료 이후 세부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여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의 연계관광 코스 및 상품 구성 방안, 시설 활성화 위한 지원 사항 파악함
  - **(추진단계 사업)**은 대부분 용역 등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로 계획 중인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사업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추진 준비단계 사업)**은 사업추진 준비정도 및 예산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성, 사업반영 필요성 등을 검토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현황 및 주요 사업점은 다음과 같음

〈표 3-24〉 서천군 관련사업 추진 현황 검토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주요 도입시설	콘텐츠 및 인력양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시사점
기획 감사실	장항화물역 철도부지 활용 복합문화 테마지구조성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철도역사전시관</li> <li>• 리커넥트브릿지</li> <li>• 플랫폼갤러리 (전시, 카페)</li> <li>• 커뮤니티광장 이음길</li> <li>• 전차대테마공간</li> <li>• 주차장</li> <li>• 안내소</li> <li>• 편의시설</li> <li>• 소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li> <li>• 시민 자원봉사자 도슨트 프로그램</li> <li>• 연계 골목길 활성화 파일럿 프로그램</li> <li>• 홍보·마케팅</li> <li>• 선물 및 먹거리 개발, 플리마켓 등</li> <li>• 청년 철도역사 문화 기획자 양성</li> <li>• 장항 실버스토리 텔러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 구도심의 핵심 대상지를 입지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송림-장항 구도심 연계활성화를 위해 연계협력 필요한 사업</li> <li>• 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 준비 중인 실행계획 수립 전으로 지속적으로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한 사업</li> </ul>
	브라운필드 환경테마지구 조성 (추진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생태원2(생태체험관, 생태놀이터, 방문자센터 등), 생태습지, 장항아트 프로젝트 등</li> <li>• 환경 관련 공공기관 유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화지구인 송림 일원의 통합 계획 수립하기 위한 사업</li> <li>•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내 핵심 지구로 연계검토 필수</li> </ul>
문화진흥과	장항 6080 골목길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문화관</li> <li>• 도선장 테마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리텔링 개발</li> <li>• 프로모션 기획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 구도심의 스토리텔링 및 인프라 확충이 복합</li> </ul>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주요 도입시설	콘텐츠 및 인력양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시사점
	도선장 가는 길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창작공간 (리모델링)</li> <li>- 청춘다방, 야외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역량강화</li> <li>6080 골목길 주민협 의체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된 사업으로 연계 필요</li> <li>(구)장항출장소 부지 활용 한 서천문화원 건립예정</li> </ul>
	장항 선셋 페스티벌 (완료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셋 미술제 및 선셋 뮤직 페스타, 연극·영화예술제, 부대행사(홍보 부스, 먹거리 등)</li> <li>선셋 페스티벌 추진 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군 차원에서 운영되었던 축제를 도비를 지원 받아 2021년까지 추진 예정</li> <li>장항일원의 핵심 브랜드화 통해 이색 문화축제로 육성하는 방안 마련 필요</li> </ul>
관광축제과 관광축제과	서천갯벌 세계유산 관리센터 건립 (추진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유산관리센터</li> <li>실외 탐조대</li> <li>갯벌 관찰장</li> <li>주차장</li> <li>방문자센터 및 관리동</li> <li>연구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해수부 예산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송림 일원의 체계적 개발위한 검토 필수</li> </ul>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서천어디가? 장항6080 뉴트로여행 (추진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어 상품 개발 및 운영</li> <li>홍보·마케팅(서천 문화관광 SNS,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등)</li> <li>지역관광 아카데미 역량강화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체부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li> <li>국립생태원, 펜션 방문객 대상 홍보하여 운영 예정으로 생활관광 지원 완료 이후에도 지속 추진방안 마련 필요</li> </ul>
	생태원-도시 탐험역-자원관 연결 궤도형 전기차 설치 (추진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크 산책로 및 수목식재</li> <li>테마터널 및 포토존</li> <li>궤도형 전기차</li> <li>승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승칸 프로그램</li> <li>홍보·마케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검토단계로 향후 송림~장항 구도심의 교통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검토</li> </ul>
	장항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항제련소 굴뚝 &amp; 전망산 경관조명 설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항제련소와 굴뚝은 사유재산으로 직접적인 활용이 어려우나 랜드마크 특성을 살린 연계사업 필요</li> </ul>
	장항 6080 맛나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거리 조성</li> <li>맛나로 조형물, 벽화 (완료)</li> <li>맛나로 로고책터(완료)</li> <li>맛나로 홍보관광 안내판(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맛나로 팸투어 및 온라인 광고 운영</li> <li>장항 미국 창고 버스킹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li> <li>장항 6080 뉴트로 여행 "만깁" 개최</li> <li>2019 철새여행 축제 연계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li> <li>맛나로 브로셔 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화거리 조성이 완료되어 생활관광 및 골목관광을 통해 지속 홍보마케팅과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중</li> <li>지역민 주도의 자생적인 프로그램 운영 위한 역량 강화, 지속 운영기반 마련 위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의 연계방안 검토 필요</li> </ul>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주요 도입시설	콘텐츠 및 인력양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메뉴 개발, 음식 골목 스토리텔링</li> <li>• 주민 역량강화 교육</li> <li>• 맛나로 추진위원회 운영</li> </ul>	
해양수산과	송림항 어촌뉴딜 300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갯골사이로, 생태조망대, 생태정원, 수목식재 등</li> <li>• 갯골안내센터(매표소, 수산물 직매장, 레스토랑, 카페, 조망대)</li> <li>• 주민커뮤니티 복합센터(커뮤니티 공간, 건강센터 주차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갯골탐사선 프로그램</li> <li>• 갯골특화음식(갯골밥상)</li> <li>• 지역역량강화(워크숍, 교육 등)</li> <li>• 갯골안내해설사</li> <li>• 어촌뉴딜협의체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사업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송림항 일원의 중복성 최소화 위한 사업 조정 필요</li> <li>•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과 거의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지속 협의 필요</li> </ul>
공공시설 사업소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행정동)</li> <li>• 숙박시설, 캠핑장, 스포츠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숲해설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림 내 연구건물 설치 불가</li> <li>• 계획공모형 사업에서 프로그램사업 가능</li> <li>• 주차장 공유 제안</li> </ul>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이야기 뮤지엄</li> <li>• 도시탐험전망대</li> <li>• 자전거대여소</li> <li>• 어린이라운지</li> <li>• 도시탐험카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공간 전시제작 설치 및 콘텐츠 구축(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으로 완료된 도시탐험역을 활용한 구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계협력 필요</li> </ul>
도시건축과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읍집(역사문화연구회 전시실, 카페 등)</li> <li>• 테마가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보코스 개발 및 시범 운영</li> <li>• 음식체험</li> <li>• 야시장(광장)</li> <li>• 주민 역량강화(세미나, 포럼)</li> <li>• 역사문화연구회</li> <li>• 해설사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드웨어 사업 완료,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중</li> <li>• 2019년까지 세미나, 포럼 형식으로 운영. 2020년에는 실습 위주의 사업 추진</li> <li>• 예산지원 완료 후,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추진 가능</li> <li>• 사업 연속성 확보 중요(기존조직 활용, 기추진된 사업을 묶어줄 수 있는 사업 등)</li> </ul>
환경보호과	장항 송림 어울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놀이터(2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은 낮으나, 놀이공간 개발 시 차별화 필요</li> </ul>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주요 도입시설	콘텐츠 및 인력양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시사점
지역경제과	장항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리한 지불·결제</li> <li>• 가격 원산지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투어코스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li> <li>• 시장대표상품 (PB 상품)개발</li> <li>• 홍보·마케팅</li> <li>• 상인조직 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형 전통시장 운영 목표로 운영 중으로 지역 역량강화, 상품 개발 등의 사업이 다수 포함</li> <li>• 구도심 활성화 위한 연계 방안 마련 필요</li> </ul>

자료: 서천군(2020), 「서천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 ②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서천군은 2019년 시범사업 선정 이후, 장항읍 일원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함
- 행정협의회는 장항읍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관련부서 팀장급 10명 내외로 구성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주무부서인 관광축제과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투자유치과, 문화체육과,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등이 포함

〈표 3-25〉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담당부서		관련 사업	담당부서	관련 사업
관광 축제과	관광개발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문화체육과	선셋 페스티벌, 복합문화시설 등
	관광기획팀	세계유산센터 건립, 6080골목길 프로젝트	산림축산과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기획감사실		브라운필드, 골림, 야간관광, 장항화물역 복합문화테마지구	환경보호과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사회복지실		서천청소년수련관	해양수산과	송림항 어촌뉴딜 300
투자유치과		서천폴리텍대학 건립사업	도시건축과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자료: 서천군 내부자료

- 행정협의회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된 2020년 5월부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함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속 참여 및 장기회의 및 수시 협의회 개최 통해 지속 의견 교류 등
- 행정협의회 구성 이후, 서천군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로 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속 의견을 수렴함

#### 4) 사업 간 연계협력방안 주요 내용

##### ① 연계협력 필요사업 도출

- 아래 그림과 같이 붉은 색으로 표시된 사업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사업과 프로그램형 사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중복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임
-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업은 향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시설 간 연계방안, 프로그램 운영 협력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장항읍 일원 유관사업 검토 결과]

## ② 중복사업 조정

- 장항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행정협의회의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중복추진이 우려되는 사업을 제외함

〈표 3-26〉 시범사업 계획 상 중복사업 조정

시범사업 계획(안)	시설 조정방안(연계협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어드벤처 놀이시설 및 숲속 놀이터</li> <li>• 자연체험학습시설 정비 및 복원, 해안둘레길 조성</li> <li>• 친환경 생태계 보전 프로그램 교육</li> <li>• 생태계 복원과 치유의 과정 스토리텔링 및 트레킹 코스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둘레길 및 트레킹코스 개발 등의 사업은 송림향 어촌뉴딜 300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제외</li> <li>• 친환경 어드벤처 놀이시설 및 숲속 놀이터, 친환경 생태계 보전 프로그램 교육 등의 사업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재구성하여 반영</li> </ul>

- 이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장항 구도심과의 연계 및 체류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신규로 장항 내 이색 스테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가 검토하였으나, 계획 수립 중에 유사 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은 제외하고, 연계방안을 마련함

〈표 3-27〉 이색 스테이 관련 사업 조정 방안

추가 검토사업	시설 조정방안 (연계협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림과 장항 구도심의 연계 활성화 및 체류기반 활성화 위해 ‘이색 스테이 조정 및 활성화’ 사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Z 세대 유인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등의 스테이 시설 확충</li> <li>- 마을호텔 시스템 도입과 연계한 지역민 주도 사업 전개 방향 검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원사업’에 ‘아우름 스테이 허브 조성사업’이 선정</li> <li>• 이색 스테이 조성 관련 사업은 중복사업으로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 제외</li> <li>• 단, 일부 홍보마케팅 및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반영</li> </ul>

## ③ 콘텐츠 사업 연계

- 콘텐츠 사업 연계는 장항 일원에서 기 추진되어 온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계사업과 장항 일원에 기 구성되어 있는 시설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연계사업으로 분류됨
- 그 중 장항 일원에서 기 추진되어 온 콘텐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은 주로

지역주도의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함

〈표 3-28〉 장항 일원 기 운영 중인 관광콘텐츠 연계협력 방안

사업 현황	사실 조정방안 (연계협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 구도심과 송림 일원에서 '선셋 페스티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셋 페스티벌은 문화예술형 이벤트로 예술가와 지역민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운영</li> </ul> </li> <li>•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육성된 구도심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코스 개발, 해설사 양성 등의 사업 추진</li> <li>- 2020년 시범사업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운영 한계 보유</li> </ul> </li> <li>•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개년간 지원이 가능한 사업</li> <li>- 2020년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사업 모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충남도청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민 역량강화 사업과 병행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 중</li> <li>• 다만, 각 사업마다 추진 부서가 상이하고, 외부관광객 유입 확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사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li> <li>• 이에 따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 관련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역량 강화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 제공, 관광상품으로서의 매력 강화 방안 마련, 지속 추진기반 마련 등 추진</li> </ul> </li> </ul>

- 장항 구도심 일원에 기 구성되어 있는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탐험역, 장항의 집, 미곡창고 등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운영방안을 마련함

〈표 3-29〉 장항 일원 인프라 연계 콘텐츠 접목 사업

사업 현황	사실 조정방안 (연계협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 구도심 일원에 문화재생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다수의 인프라 조성 운영 중</li> <li>• 장항 도시탐험역, 미곡창고, 기발도 영화관 등은 조성 완료되어 운영 중이나, 관광객 유입 등의 파급 효과는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 도시탐험역은 장항 구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공간이나 해당 공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화 체험거리 부재</li> <li>- 미곡창고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 진행 중으로 영업 중지 상태</li> <li>- 복합 미디어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및 영화 상영관 등의 역할 운영 중</li> </ul> </li> <li>•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장항의 집은 시설 완료 이후, 운영 준비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 도시탐험역, 장항의 집 등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 개발 및 운영방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 구도심 일원에 부족한 특화 먹거리 개발과 연계하여 이색 체험 및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li> <li>- 체험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역민 역량강화 등을 병행하여 사업실행력 제고 방안 마련</li> </ul> </li> <li>• 미곡창고는 선셋 페스티벌 상설화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및 자원사업 연계</li> <li>• 복합 미디어센터는 장항 화물역 철도부지 활용 복합문화 테마지구 내에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 제외</li> </ul>

④ 홍보 및 캠페인 사업 연계

- 서천군은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치와 세계자연유산 지정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음
- 이러한 생태도시로서의 지역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부문까지 연결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내에 서천군의 핵심 관광집객시설인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의 홍보 연계사업을 반영함
  -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협력하여 생태 및 공정여행 관련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 내 환경쓰레기 최소화 및 생태도시 브랜딩에 걸맞은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사업을 반영함

〈표 3-30〉 캠페인 및 홍보 사업 연계 방안

사업 현황	시설 조정방안 (연계협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군의 핵심 관광자원인 국립생태원과의 연계 협력방안 모색 필수</li> <li>•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서천군 시티투어 상의 코스 연계 외에 연계협력 사업 추진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생태원 및 국립 환경생물자원관이 입지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반영</li> <li>• ‘착한 생태여행도시 기반 구축’을 목표로 볼런투어리즘 활성화, 친환경 및 안전관광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볼런투어리즘 상품 개발 및 운영</li> <li>- 친환경 관광기반 구축 등</li> </ul> </li> </ul>

### 3. 종합 분석

#### 가. 사업추진 단계별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 ①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부처간 연계협력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선정과 동시에 장항읍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과의 통합적인 추진방안 검토를 위해 행정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과의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사업계획 검토 및 유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진행함

② 공간계획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사전 검토)으로 타부처 사업 간 중복문제 해결

- 서천군은 계획공모형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 지역에서 진행 중인 유관 부처별 지역 개발사업과의 중복성 최소화,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함
  - 이러한 과정에서 타부처에서 추진한 시설에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사업을 연계 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임

③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및 한계 도출

<p>예산 확보 위한 사업계획 수립 단계</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별로 부처별 국비 확보에 우선한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내 유관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나 형식적 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li> </ul> </li> <li>• 부처별로 국비공모사업 등 선정 과정에서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한계로 유사 중복사업 다수 지정되는 문제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군은 동일한 장항 구도심 일원에 문화관광 재생형 사업 중복 추진</li> </ul> </li> </ul>
<p>사업 계획 구체화단계</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해당 부서 차원에서 용역사에 의존해 사업계획 구체화</li> <li>- 사업 간 중복성 최소화 및 연계협력방안 마련 위한 협력체계 미흡</li> </ul> </li> <li>• 서천군의 경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유사 사업 간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파악하거나 실제 지침으로 연결하는 데는 지역 내 추진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결정사항을 공식화하고 공동 실행 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li> </ul> </li> </ul>
<p>사업 실행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인 사업추진체계에 따라 사업 실행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별로 용역, 민간위탁 등의 방식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업집행</li> <li>-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한계로 사업 시너지 제고 등 한계</li> </ul> </li> <li>• 서천군 전역에 추진 중인 유사사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나, 관광부문 조직은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관광 전담조직 구성 및 지역 내 민간조직 협의회 등 조성 예정</li> </ul> </li> </ul>

- 현재는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인 부처별 사업을 각각 확보한 이후에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연계협력 보다는 일단 국비확보가 우선 되고 있는 실정임
- 각 부처가 공모사업 선정 시 유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공모사업 선정 시, 유사 사업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성 및 실천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침 및 기준, 선정 절차 및 과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고려됨

## 나. 주요 시사점

- ① 부처간 연계협력형 지역관광자원개발이 가능한 협업모델 발굴 필요
  -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부처 간 연계협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 당시부터 부처 협업 모델을 갖춘 연계협력 사업 중심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② 지자체 여건에 맞는 지역관광자원개발 추진 및 부처간 사업 중복성 검증이 가능한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필요
  - 지역마다 사업내용과 구성이 다양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대상지 인근에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되므로 공간계획 추진시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전에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③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사후관리 필요
  -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시점에서부터 지자체는 통합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행정협의회 및 지역관광협의회, 사업실행 전담조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역민, 사업전담조직 등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중복사업 최소화 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제3절 지자체 관계자 의견조사

---

### 1. 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 관련 유관부처 연계협력 추진 현황과 효율적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 조사 대상은 기초자치단체 지역 관광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며, 조사 시기는 2021년 10월 11일에 실시하여 10월 22일까지 약 2주 동안(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함
  - 조사분석은 최종 응답한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기초지자체는 지역별로 강원도 삼척시, 경상남도 남해군, 사천시, 합천군,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북도 남원시, 진안,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충청남도 단양군과 제천시임

####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 본 설문조사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부처간 연계 협력 현황과 방안 제시를 위한 내용으로 크게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음
- 첫째, 부처간 연계협력의 현황 및 필요성의 세부 내용으로는 연계협력의 필요성, 지방이양 사업과 부처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연계협력에 대한 추진경험과 동기 및 내용, 지방이양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추진환경 변화 정도 등을 중심으로 설계함
- 둘째,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을 위한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이양사업 또는 부처 지역

개발사업 연계협력,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또는 정책적 요구사항,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업영역(분야), 자체 수행계획 의향, 향후 개선·보완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계함

〈표 3-31〉 설문조사 문항 구성

항목		설문 조사 내용	비고
부처간 연계협력 추진 참여 현황		-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필요성 여부	-
		- 추진경험	자율기술
		- 연계협력 사업 추진 동기 - 연계협력 사업 내용 작성	
부처간 연계협력의 필요성	지역관광개발사업(지방이양사업포함) 또는 부처 지역 개발사업 연계 협력 견해	- 관광관련 사업 연계협력 필요 -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한계 - 다부처 연계협력사업 확대 추세 - 한정된 지역관광개발사업 예산 활용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 중요 - 중복성 문제와 관련하여 연계협력 추진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	-
부처간 연계협력의 방안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또는 정책적 요구사항	-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가능 지자체내 전담기구 필요 - 부처별 사업추진 절차간소화 및 연속적 추진 필요 - 연계협력을 지원 중앙정부 신규사업 발굴 필요 - 예산절감 및 중복추진 예방 등 인센티브 제공 - 성공 사례 발굴 및 추진방법 등 정보 공유/확산 - 지속적 및 효과적인 관리 운영 위한 사후 관리방안 -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업영역(분야)	-
		자체 수행 계획 의향	-
		향후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제안	자율기술
지방이양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 자율적 관광개발사업 기획 추진 여건 조성 정도 - 예산 확보에 대해 지방이양 이전 용이 정도 -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도 정도 - 향후 지자체 포괄보조금 예산비중 증가 예상	-

##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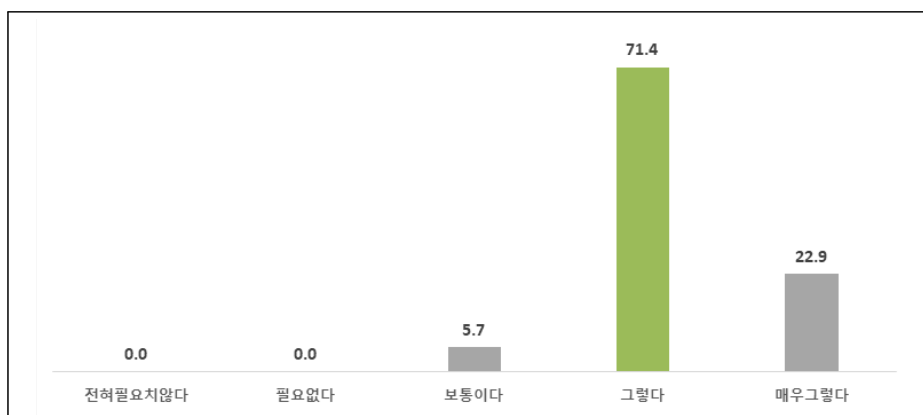
- 지자체에서 지역관광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 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는 ‘필요하다’라고 응답 하였으며, 그 비율은 94.3%로 높게 나타남

〈표 3-32〉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필요성

(단위: %, 점)

문항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Top2	Bot2	평균
부처 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필요성	0.0	0.0	5.7	71.4	22.9	94.3	0.0	4.2

[그림 3-1]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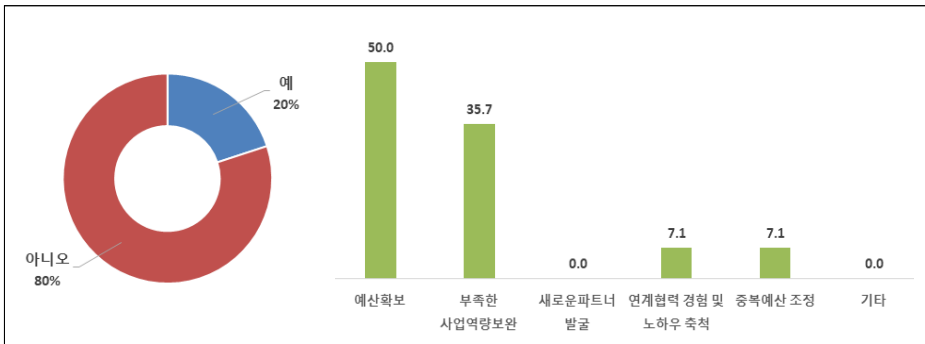


- 지자체에서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시 타부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협력한 경험에 대해 ‘아니오’가 80%, ‘예’의 응답이 20% 로 나타남
- 연계협력에 사업의 경험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추진 동기는 ‘예산확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족한 사업역량 보완’이 35.7% , ‘연계협력 경험 및 노하우 축적’ 7.1%, ‘중복사업(예산)조정’ 7.1%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3〉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동기

문항	경험 여부	응답율	추진 동기(2개 선택)	응답율
지방이양 사업과 부처 지역개발 공모사업 연계협력 추진 경험 여부	예	20.0	예산 확보	50.0
			부족한 사업역량 보완	35.7
			새로운 사업 파트너 발굴	0.0
			연계협력 경험 및 노하우 축적	7.1
			중복사업(예산) 조정	7.1
			기타	0.0
	아니오	80.0	-	

[그림 3-2]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동기 (단위: %)



- 지방이양사업과 부처 지역개발사업 또는 부처 지역개발사업간 연계협력 경험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에서 진행한 사업을 ①지방이양사업 ②부처 공모사업 ③지자체 추진으로 연계협력 수단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조성, 콘텐츠 발굴/운영, 조직 및 인력양성, 기타(홍보 등)등의 유형을 나누어 작성함
- 작성결과를 첫째, 대부분의 연계협력의 경험이 있는 지자체들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방이양사업 및 부처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음
- 둘째, 부처 공모사업과 지자체 추진사업으로 인프라 조성, 콘텐츠 발굴/운영, 조직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유형의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 〈표3-34〉는 응답한 지역에서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함

〈표 3-34〉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사업 내용

유형	연계협력 수단	사업내용
인프라 조성	지방이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camp 조성사업(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li> <li>- 시루섬생태탐방교 건설사업(충청북도지역자원시설세)</li> <li>- 솔방죽 생태녹색길 명소화사업(관광자원개발)</li> <li>- 배론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관광자원개발)</li> <li>- 청풍호반야간경관조성사업(관광자원개발)</li> <li>- 청풍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중부내륙권관광개발)</li> <li>- 의림지수리공원 조성사업(중부내륙권관광개발)</li> <li>-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문화관광자원개발)</li> <li>- 청풍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문화관광자원개발)</li> <li>-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및 지오토레일 구축(문화관광자원개발)</li> <li>- 영상테마파크 서민촌 조성사업(문화관광자원개발)</li> </ul>
	부처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Camp 조성사업(계획공모형, 문체부 공모)</li> <li>- 시루섬생태탐방교건설사업(행안부, 특별교부세)</li> <li>- 어버케어센터 조성사업(도시재생 인정사업)</li> <li>- 열린관광지조성사업(2021년)</li> <li>- 진안무주 지오 프렌드 람사일주여행 프로젝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li> <li>- 마이산도립공원개선(열린관광지조성)</li> <li>- 지역 영화 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li> <li>-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li> <li>- 도시재생 뉴딜</li> </ul>
	지자체 자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설사업(군, 자체사업비)</li> <li>- 영상테마파크 세트장 조성</li> </ul>
콘텐츠 발굴/ 운영	지방이양사업	-
	부처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정보센터 및 관광비즈니스센터 운영 (권역별 지역관광 협업센터 조성 공모사업)</li> <li>-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li> <li>- 마이힐링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li> <li>- 리멤버 합천 영상 테마파크 사업(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li> </ul>
	지자체 자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해설사 양성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li> <li>- 홍삼축제 운영</li> <li>- 동감축제</li> <li>- 합천수려한영화제</li> <li>-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공원 조성</li> </ul>
조직 및 인력	지방이양사업	-
	부처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두레 PD 양성</li> </ul>
	지자체 자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시 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li> <li>- DMO 운영</li> <li>- 보조출연자양성교육</li> <li>- 문화재단 운영</li> </ul>
기타 (홍보)	지방이양사업	-
	부처공모사업	-
	지자체 자체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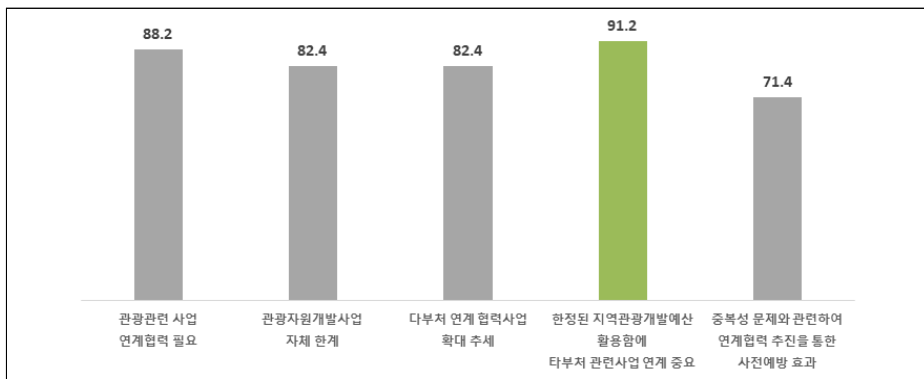
-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이양사업 또는 타 부처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협력에 대한 의견은 ‘한정된 지역관광개발예산 활용함에 있어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 중요’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91.2%로 상당수를 차지하며, ‘관광 관련 사업 내용 포함으로 연계협력 필요’ 88.2%, ‘관광자원개발사업 자체 한계’ 82.4%, ‘다부처 연계 협력사업 확대 추세’ 82.4%, ‘중복성 문제와 관련하여 연계협력 추진을 통한 사전예방 효과’ 71.4%의 순으로 나타남
- 지방이양사업 또는 부처지역 개발사업 연계협력에 대한 견해 항목의 평균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각 지자체에서는 그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35〉 지방이양사업 또는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견해

(단위: %,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비슷하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Top2	Bot2	평균
관광관련 사업 연계협력 필요	0.0	2.9	8.8	67.6	20.6	88.2	2.94	4.1
관광자원개발사업 자체 한계	0.0	2.9	14.7	50.0	32.4	82.4	2.94	4.1
다부처 연계 협력사업 확대 추세	0.0	2.9	14.7	55.9	26.5	82.4	2.94	4.1
한정된 지역관광개발예산 활용함에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 중요	0.0	0.0	8.8	50.0	41.2	91.2	0.00	4.3
중복성 문제와 관련하여 연계협력 추진을 통한 사전예방 효과	0.0	4.8	23.8	38.1	33.3	71.4	4.76	4.0

[그림 3-3]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추진 견해 (단위: %, Top2 값)



- 지방이양사업 또는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의 필요성으로 나타난 기타 의견으로 '타 부처와 중복이 되지 않아야 예산 절약 및 지자체의 경쟁력이 생김',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모사업이 되어야 함' 등의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지방이양사업 또는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기타 의견으로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지자체 재원 비율 상응으로 부담이 커짐', '관리부처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 그리고 '부처 개별 사업 추진 시 연계성이 떨어져 사업효과가 떨어짐'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음

〈표 3-36〉 지방이양사업 또는 부처 지역개발사업 연계협력 기타의견

구분	내용
필요성	타부처와 중복이 되지 않아야 예산이 절약되고 경쟁력이 생김 공모사업에도 연계협력사업의 비중을 높여 한곳만 개발하는 것보다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함
문제점	관광자원개발사업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재원 비율 상응으로 부담이 커짐 사전 절차 및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시 관리부처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 부처 개별 사업 추진 시 연계성이 떨어져 사업효과가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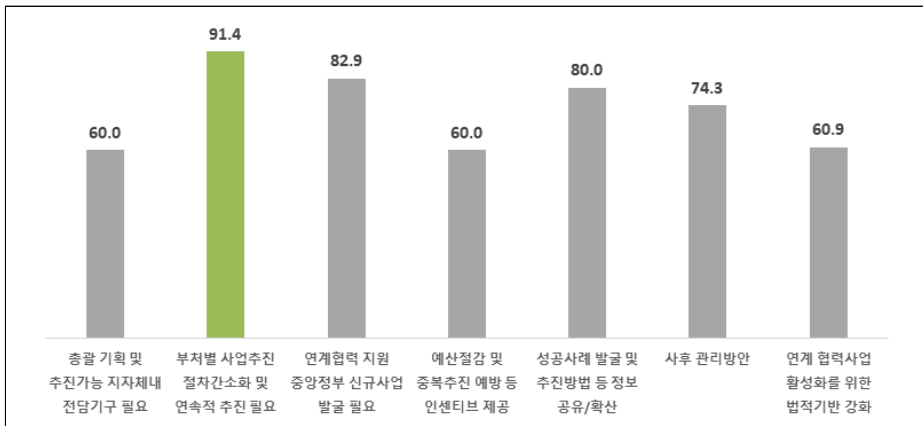
- 지방이양사업 및 부처 지역개발사업과의 효율적 연계협력을 위해 제도적 또는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별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및 연속적 추진 필요'가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연계협력 지원 중앙정부 신규 사업 발굴 필요(82.9%)', '성공사례 발굴 및 추진방법 등 정보 공유/확산(80.0%)', 사후 관리방안(7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강화(60.9%)', '총괄 기획 및 추진 가능 지자체 내 전담기구 필요(60%)'와 '예산절감 및 중복추진 예방 등 인센티브 제공(60%)'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

〈표 3-37〉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요구사항

(단위: %,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비슷하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Top2	Bot2	평균
총괄 기획 및 추진가능 지자체내 전담기구 필요	5.7	22.9	11.4	31.4	28.6	60.0	28.57	3.5
부처별 사업추진 절차간소화 및 연속적 추진 필요	0.0	2.9	5.7	48.6	42.9	91.4	2.86	4.3
연계협력 지원 중앙정부 신규사업 발굴 필요	0.0	2.9	14.3	57.1	25.7	82.9	2.86	4.1
예산절감 및 중복추진 예방 등 인센티브 제공	2.9	8.6	28.6	45.7	14.3	60.0	11.43	3.6
성공사례 발굴 및 추진방법 등 정보 공유/확산	0.0	2.9	17.1	45.7	34.3	80.0	2.86	4.1
사업의 지속적,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후 관리방안	0.0	2.9	22.9	40.0	34.3	74.3	2.86	4.1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강화	0.0	8.7	30.4	43.5	17.4	60.9	8.70	3.7

[그림 3-4]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요구사항 (단위: %, Top2 값)



- 효율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또는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의 추가 기타 의견으로는 부처별 사업분야 명확화 및 상호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일부 중복추진 등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음

- 반면에 인센티브 제공 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사업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과 지자체 재원 비율 상응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음

〈표 3-38〉 효율적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요구사항 기타의견

구분	내용
필요성	연계협력 시 부처별 사업분야 명확화 및 상호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지방이양사업과 부처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 중복 추진 등이 필요한 실정임
문제점	인센티브 제공 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목적의 변질 가능성 있음 관광자원개발사업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재원 비율 상응으로 부담이 커짐

- 현 시점에서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계협력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업영역 분야에 대해서는 ‘콘텐츠 운영사업’ 31.4% 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인프라 조성사업’ 30%, ‘조직 및 인력 양성’ 25.7%, ‘홍보’ 12.9% 순으로 나타남

〈표 3-39〉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업영역(분야) (복수응답)

(단위: %)

문항	인프라 조성사업	콘텐츠 운영사업	조직 및 인력양성	홍보 등	기타
응답율	30.0	31.4	25.7	12.9	0.0

- 부처 지역개발사업의 연계협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본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속 수행할 의향에 대해 74.2%가 긍정으로 응답하였음

〈표 3-40〉 연계협력 종료 후 자체 계속 수행 의향여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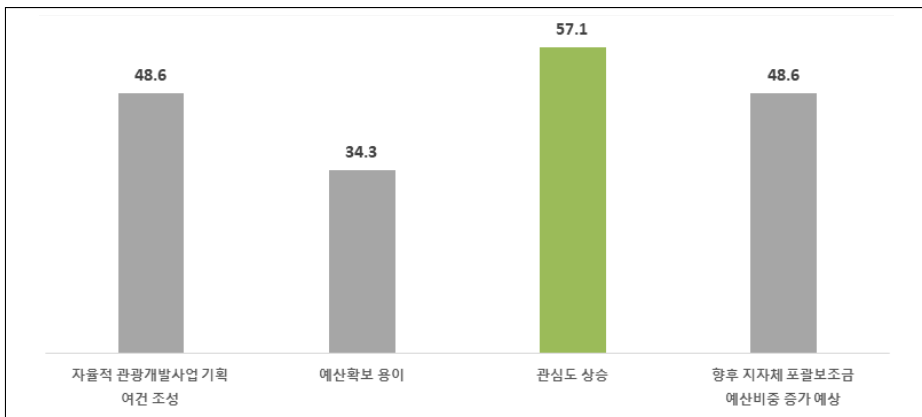
문항	매우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Top2	Bot2	평균
자체 계속 수행 의향	0.0	0.0	25.7	57.1	17.1	74.2	0.0	3.9

- 지자체에서 지방이양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이양 되기 전과 비교하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지자체는 지방이양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이전에 비해 관심도 상승’, ‘자율적 관광개발사업기획 추진 여건 조성’, ‘향후 지자체 포괄보조금 예산비중 증가 예상’, ‘예산확보에 대해 지방이양 이전에 비해 용이’ 수준으로 환경 달라졌다고 나타남

〈표 3-41〉 지방이양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비슷하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Top2	Bot2	평균
자율적 관광개발사업 기획 여건 조성	0.0	17.1	34.3	40.0	8.6	48.6	17.1	3.4
예산확보에 대해 지방이양 이전 용이	2.9	22.9	40.0	28.6	5.7	34.3	25.7	3.1
관심도 상승	2.9	17.1	22.9	34.3	22.9	57.1	20.0	3.6
향후 지자체 포괄보조금 예산비중 증가 예상	0.0	14.3	37.1	40.0	8.6	48.6	14.3	3.4

[그림 3-5] 지방이양 관광자원개발 추진 현황 (단위: %, Top2 값)



- 지방이양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환경과 관련된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 및 부정적 의견 그리고 필요 사항으로 도출됨
- 긍정적 의견으로는 필요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여 여건 변화에 효율적이며, 해당 도와 협력으로 사업비 확보가 용이,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율권이 강화 등의 추가 의견이 나타남
- 부정적 의견으로는 아직까지 지자체 자율권이 없거나, 재원비율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고,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문제 등이 나타남
- 그 외 책임소지의 명확화, 가이드라인 구축과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

〈표 3-42〉 지방이양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환경에 대한 추가 의견

구분	내용
긍정적 의견	지방이양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 추진 가능하여 여건 변화에 대하여 효율적임
	제천시의 경우 청풍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관광개발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도와 직접 협의 및 연도별 사업비의 확보가 용이해짐
	지방이양후 절차 간소화(선정, 수시보고, 정산 등)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되었음
필요성	태안에 있는 영목항과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의 개통으로 국도 77노선과 연결되어 원산도와 대천해수욕장을 잇는 해저터널개통으로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하여 보령시가 해양관광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익년도 예산 확보 전 지자체와 사전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이 필요한 지자체에 지원이 필요함
	지방이양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또한 지자체 권한으로 이양시켜 책임소지 명확화 필요, 또한 지방이양된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의 형평성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사업보조금 등 가이드라인 필요함
부정적 의견	지방이양에 대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현재 지자체 자율권이 좀 없어짐
	관광자원개발사업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재원 비율 상승으로 부담이 커짐
	지방이양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이 지자체 자율적인 기획, 집행은 아주 좋으나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음. 규모나 예산을 책정해서 지자체별로 배분하는 것도 한 방법임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지자체장의 정치적인 관계에 의하여 예산확보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함
	지사와 시장 군수의 정치색이 같으면 예산 확보가 수월하고 만약 다르면 예산확보가 힘들다. 공모 사업도 당이 다르면 본선 진출이 어려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지방이양되었으나,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가 더 용이해졌다는 인상을 받을 수 없음. 오히려 도 예산을 확보해도 실링이 작아져서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
	지자체 사업비 비중과 부담이 늘어날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부족할것으로 보임

-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으로 지연관광개발사업의 연계협력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향후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적 의견을 제안을 요청하였으며, 응답의 결과는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후 운영관리, 예산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정책 및 제도개선의 경우 연계협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의사소통 및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조성,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전문가 인력양성 및 지원조직,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남
- 사후 운영관리의 경우에는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 등으로 사업이 종료 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광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 예산지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연계협력 및 관광지 운영과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공모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남

〈표 3-43〉 연계협력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 및 보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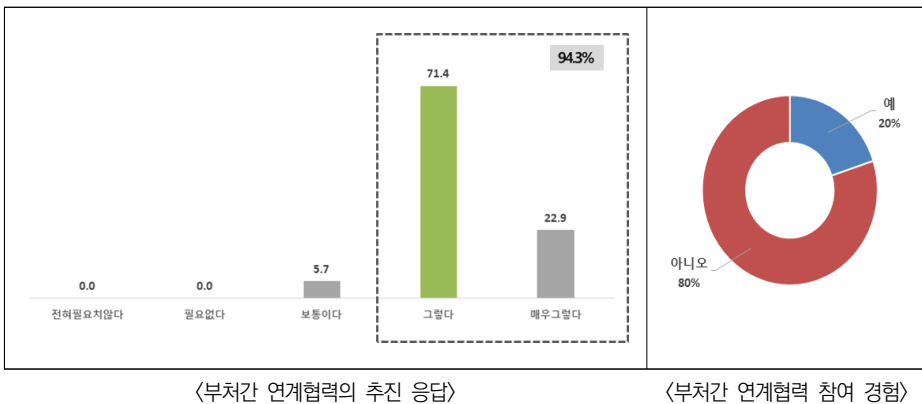
구분	내용
정책 및 제도개선	-연계협력을 위한 지자체 내 전담기구 설치 시, 실제 사업부서와 소통, 행정업무 처리 등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사업 추진 부서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자체추진 등) 마땅하다고 생각됨
	-지역마다 신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나 관광지 개발이 지방 이양되어 신규 관광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기존 관광지 개선과 신규관광지 개발을 차별성 있게 정책계획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다부처사업, 지방이양사업 연계는 꼭 필요한 사업임. 또한 관광은 민간투자 사업연계도 검토 필요함
	-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일정 부분의 자율권을 보장과 다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중간에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음(사업추진 간소화 필요)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연계협력 추진을 위하여 기존 지방이양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업에 한하여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사업의 명확한 지침 혹은 명확한 범위를 구간으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함 (해당파트는 자율화 혹은 제한 명확히 규정, 애매한 표현에 따라 소극적 추진)
	-사업추진 선진사례 등 정기적 가이드라인 갱신(전자문서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연계협력사업 추진 부처, 광역, 시군(담당부서, 담당자) 핫라인 구축(메신저) 등이 필요함 (관련사례 등 정보공유는 적시적으로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효과성 극대화)
	-부처 내, 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함 -지역연계 및 관광개발사업이 대부분 관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 전문가 양성 및 지원조직,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필요함
	-타 부처 연계협력 사업의 경우 문제부와 중복된 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경계가 애매한 분야가 많음. 실례로, 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의 경우 환경부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 한강 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청정사업 /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등의 경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문제

구분	내용
	<p>부에서 주관하는 관광사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별 별도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똑같은 사업대상지 및 사업콘텐츠 중복의 문제가 대두됨</p> <p>-사업성격을 고려한 소관부처 일관화 및 이를 해결하고 위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생각됨</p> <p>-부처 연계 협력 사업 수행 시 지자체 부처별 소통과 역할 분담이 중요한 것으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도, 정책적인 협력 방안으로 업무 밀어내기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함</p> <p>-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계 계획이 수립되고 이후 원활히 사업 추진되도록 사업의 연계협력을 전제로 한 통합적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함</p> <p>-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시 낙후지역 가점 도입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의 경우 지역활성화지역은 가점이 있음) 및 연계시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함</p> <p>-부처별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필요함</p> <p>-지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 민자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광역단체에서도 개발공사 등에서도 도움이 필요함</p> <p>-문체부 또는 중앙부처에서 도시재생 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사업 성격이 유사한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단위의 T/F팀이 구성이 필요함.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관광지 개발 등은 도시재생의 성격보다 관광지 개발의 성격이 강함. 또한 최근 관광트렌드 분석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광지 개발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함</p> <p>-지방비로 지역관광개발사업은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함. 문체부 주관으로 지역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 주도형 지역관광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함</p> <p>-지속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및 전담인력 필요</p> <p>-각 부처별로 진행 중인 사업 중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이 관련 부처에 공유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음. 일하다 보면 관광 분야가 다른 실과랑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음</p>
사후 운영관리	<p>-연계사업이 확정되고 완료된 후 유지보수에 비용이 많이 드는 등 큰 문제로 남게 됨. 건물 등 시설 부분에 대한 사업 결정은 향후 지자체 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p> <p>-지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공 관건은 예산투입이 종료된 이후의 운영문제가 가장 큼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하며, 예산지원은 한정적이므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역량교육, 심화교육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고, 관광수용태세 개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예산의 직접적인 지원도 좋지만, 교육과 자문기구가 필요함 (무엇보다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추진조직이 별도로 구성이 필요함)</p>
예산 지원	<p>-각 지자체에서 각 사업의 연계 및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기구인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구성 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 완료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p> <p>-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연계협력사업을 수년간 추진하였지만 성과가 미약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있음.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 느낀 주요 이유는 사업비 규모가 작고 사업종료 이후 지속적인 지원이 없어 자생적 운영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그런게 아닌가 생각됨</p> <p>-향후 문체부 지역관광개발사업과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H/W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 매년 5개소 미만을 선정하더라도 부처합산 사업비를 300억~500억 규모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효과가 발생할수 있도록 집중 지원이 되어야 되고, 모델화해서 매년 신규 지자체 사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결국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성공적인 지역관광 활성화도 이루어질거라고 생각됨</p> <p>-지역관광개발사업이나 부처공모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대상지 인근에 유사한 신규 사업 신청이 있더라도 기획·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연계방안이 마련되면 적극적 국도비 지원이 필요함</p>

### 3. 종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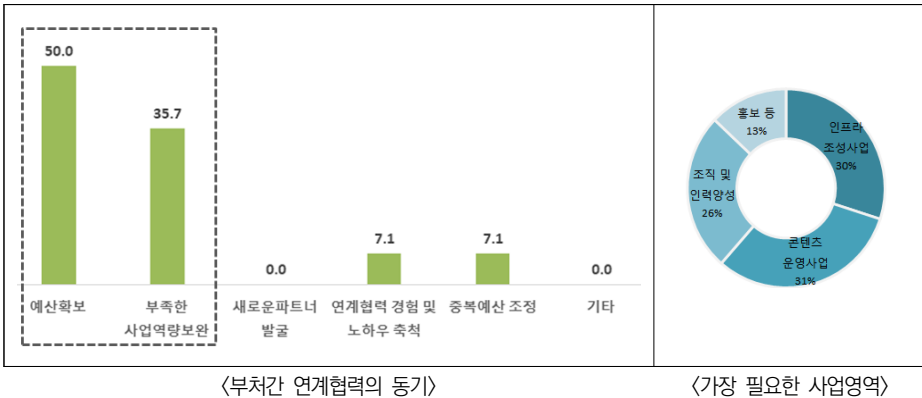
① 부처간 연계협력의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 >> 실제 참여 경험은 20%

- 부처간 연계협력 추진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94.3%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지자체는 20%로 나타남
-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내 전담기구 설치, 소통, 행정처리 등 사업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남



② 부처간 연계협력의 추진 동기 >> 다양한 사업 유형 필요

-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 참여 및 추진 동기로는 예산 확보, 부족한 사업역량 보완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처간 연계협력을 추진 시 사업영역을 살펴보면 콘텐츠, 인프라 조직 및 인력양성 등 유형별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연계협력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업영역 분야는 콘텐츠, 인프라, 조직 및 인력양성 등 큰 차이가 없었으며, 부처간 연계협력의 유형이 한 부문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부문의 유형별 연계방안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③ 한정된 지역관광개발 예산과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 >> 사업간 중복성 방지

- 연계협력의 대한 이해 >>한정된 지역관광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협력이 필요
  -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부처간 연계협력은 한정된 지역관광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서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자체 한계, 관광관련 사업에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부처간 연계협력은 인프라, 콘텐츠, 조직 및 인력 등과 연계하여 사업 중복성을 줄이고, 개별적 추진 방식보다는 사업간 내용 및 공간적 연계를 통한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④ 부처간 연계협력의 연속적 추진 >>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 효율적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요구사항으로 부처별 사업추진 절차간소화와 연속적 추진 필요, 연계협력 지원 중앙정부 신규사업 발굴 필요, 성공사례 발굴 및 추진방법 등 정보 공유 확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연속적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계협력사업 기반을 마련과 지속적 연계협력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제4장

관광자원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 제1절 기본 방향

---

-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 관광부문의 시너지를 위해 다양한 부처간의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지자체 관광자원개발에서도 타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협력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정책추진 현황 및 사례분석, 지자체 관계자 의견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처간 연계협력과 지자체가 타부처 지역개발사업을 연계협력 하는 관점에서 연계협력 방안을 제시함

### 가. 연계협력의 주체 이원화

- 관광분야의 부처간 연계협력은 공간단위 범위를 고려하여 주체의 대상을 ① 중앙정부 부처간 연계협력, ② 지자체와 중앙정부 부처간 연계협력으로 이원화하여 보고자 하였음
  - 첫째, 중앙정부 중심의 연계협력: 지역단위 협력, 입체식 사업중심
  - 둘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연계협력: 사업(프로젝트)단위 협력, 패키지 사업중심

### 나. 연계협력 방안

- 중앙부처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은 중복사업 방지와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적 측면을 고려함
  - 중앙정부 중심의 연계협력은 부처간 공동기획 및 연계협력 모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은 기존 관광자원, 관광시설 또는 관광지의

지속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추진되는 자원개발사업 유치를 통해 부족한 콘텐츠 사업 또는 기반시설 확장성을 고려함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연계협력은 관광개발 협약방식의 지속적 확대 추진 등을 제시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처간 연계협력방안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관련 사업 중심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① 중앙정부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과 ② 지방이양 사업인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포함하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에서 지자체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으로 구분하고, 사업 발굴 및 기획-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등 전주기적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함

#### 1 중앙부처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 부처간 연계협력 기반 마련
-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추진체계 구축
- 부처간 연계협력 지원체계 구축

####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 협약을 통한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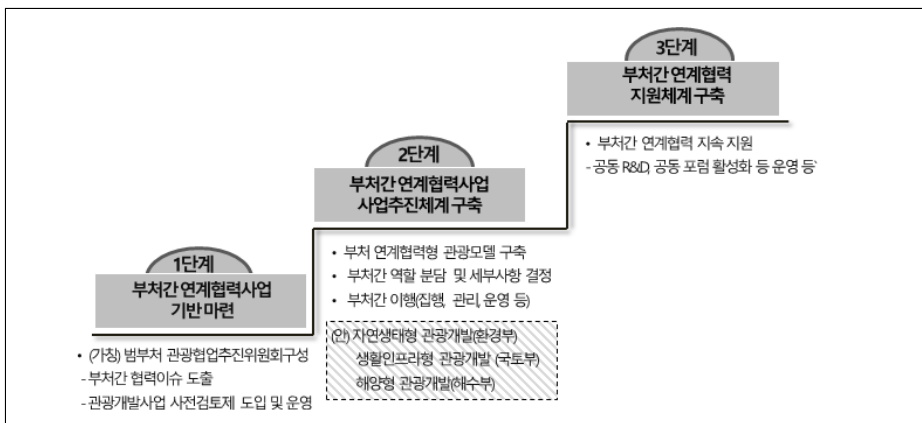
## 제2절 연계협력 추진방안

### 1. 중앙정부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 가. 추진방안

- 부처간 연계협력은 단일 부처만으로 달성하기 힘든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연계협력사업 기반마련-사업추진체계 구축 - 관리체계 구축’ 등 전주기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1단계: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범부처 관광협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처간 협력 이슈(실천과제)를 도출함
  - 2단계: 사업추진체계는 부처간 연계협력형 추진과제 모색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해 집행·관리 등 협업모델을 구축함
  - 3단계: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함(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협력분야 R&D 활성화 등)

[그림 4-1] 중앙정부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 접근



## 나. 부처간 연계협력 기반 마련

### ① (가칭)범부처 관광협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부처·지자체·기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범부처 관광협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
- 위원회 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이 의장이 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담당 국장(당연직 위원), 전문가(위촉직) 등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부처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정책 방향 설정, 관광개발 사업의 통합 및 조정, 부처협력형 관광개발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가칭)범부처 관광협업추진위원회 내 주요 관광개발 정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른 부처 간 소위원회 구성·운영함
  - 소위원회 운영은 기 구축된 부처간 협업체계 또는 신규 부처협업체계 등을 ‘관광’ 관련 소위원회로 관리·운영하고 소위원회 역할은 부처간 중복추진 정책 조정 및 협업정책 발굴, 현안 공동 대응 등임
  - 소위원회 구성은 기존의「크루즈발전협의체(문체부, 해수부)」, 「의료관광협의체(문체부, 복지부)」등과 같이 분야별로「(가칭)관광교통협의체(문체부, 국토부)」, 「(가칭)국민휴가개선협의체(문체부, 고용부, 인혁처) 등이 가능함
- (가칭)범부처 관광협업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무지원단 성격의 ‘부처협력관광개발협의체 지원단’ 설치·운영함
  - 지원단은 위원회 회의 운영 및 관리, 위원회 회의 안건 관리 및 부처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 과학기술전략회의

- (목적)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도모
- (근거)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구성) 대통령(의장), 기재부·교육부·미래부·국방부·문체부·농림부·산자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 (실무) 미래부 과학기술전략회의 지원단 설치

### ② 유사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가칭)관광개발사업 사전검토 추진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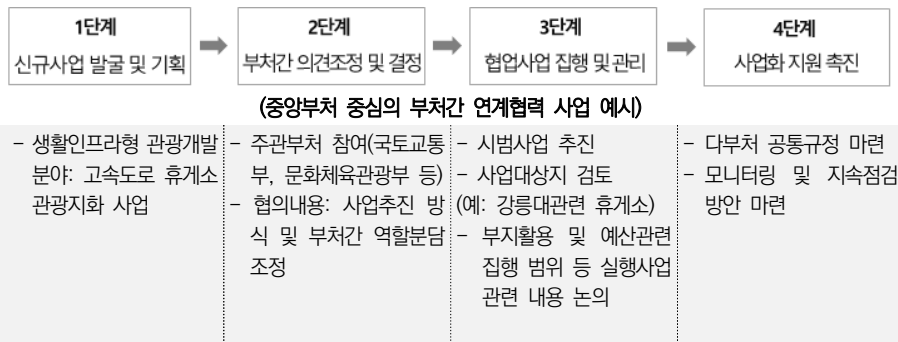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행정안전부·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규모와 사업내용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관리 기능이 부재함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관리를 위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재정투입 효과 및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다수의 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부처 간 통합·협력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유사사업의 중복성 최소화,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따라서 관광개발 사업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관광개발사업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운영함
  - 사전 검토제는 사전평가 형태로, 평가 대상은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앙·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일정 금액(투융자심사대상 등), 사업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평가를 위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의견을 통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함
- 사전검토제는 범부처 관광협업추진위원회 내 관계 부처별 산하 연구원(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개발사업 사전검토 추진단'을 구축하여 중앙·지자체 관광관련 사업 중 예산규모,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요 사업 발굴 및 선정, 사전 기획 과제와 공동 기획 과제 점검 등을 추진함
- 부처 간 협력형 사업, 공동기획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점검단계를 거쳐 부처간 갈등 및 협의사항 조정 등을 추진함

#### 다.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추진체계 구축

##### ① 사업추진 단계별 관광개발사업 협력추진 모델

- 부처별 연구기관 및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한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추진, 관리까지 연계협력 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 연계협력추진 모델을 발굴함

- (1단계)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획
  - 국민수요조사,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사업을 발굴 및 선정하고 부처 간 공동 기획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
  - 연구기관 및 전문가 평가단의 토론과 검토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사전 기획을 공동으로 실시함
- (2단계) 부처간 의견 조정을 통해 세부사항 결정
  - 사전기획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참여부처 의견을 조정·반영하고 사업 주관부처 지정, 사업추진계획, 소요재원, 부처 역할 분담 설정 등 사업 추진 세부사항을 결정함
  - 연계협력 사업의 의견조정은 공동
- (3단계) 협력사업 집행 및 관리
  - 공동 기획 사업 실시 후 주관부처가 사업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함
- (4단계) 사업성과 공동 활용 및 사업화 지원 촉진



## ② 부처간 연계협력 가능한 사업영역 검토

- 관광개발 분야는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다수의 관광개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브랜드화하여 부처의 대표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우수한 자연생태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생태관광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자원별 유형에 따라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개발한 사례가 있음

- 대표적으로 관광관련 자원과 활용도가 높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가능 함
  - 환경부(자연생태형 관광자원 개발): 환경과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국립공원 관광개발, 생태관광지 개발, 자연친화환경 관광지 개발 등의 관광개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생활인프라형 관광개발): 지역경관도로 개발사업, 생활SOC 시설을 활용한 관광개발복합화 사업, 빈 건물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 교통시설 등을 활용한 다목적 관광기능화사업,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화 사업 등의 관광개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해양형 관광개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섬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 해안경관 및 해안선을 활용한 개발 사업, 항구 등 해양인프라시설을 활용한 다기능 복합화 사업 등의 관광개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그 외에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등 다부처에 걸친 관광개발 관련 사업 및 정책수단과의 협력형으로 기존 자원을 관광으로 활용하는 재생형으로도 사업을 발굴이 가능함
  - 국토교통부(도시관광형, 해상교량형), 환경부(국립공원 배후지역형, 생태관광형), 해양수산부(어촌형, 해안·양형), 농림축산식품부(6차산업형, 산악관광형), 교육부 연계(교양·교육관광형) 등

## 라. 부처간 연계협력 지원체계 구축

### ① 부처별 산하기관 간 공동 R&D 활성화

- 부처별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요구되는 조사·연구, 통계,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두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설립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두고 있음

- 부처별 연구기관들은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관광개발사업이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관련 연구기관들간의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관광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부처별 연구기관 및 산하기관 간 공동 R&D 사업을 활성화하여 상호 연계·협력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함
- 부처별 연구기관 및 산하기관 간 관광개발 R&D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관광개발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해양형 관광개발, 웰니스형 관광개발, 산림치유형 관광개발, 자원공원 관광개발, 생태관광개발, 섬관광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형 관광개발 R&D 사업 추진이 가능함

## ② (가칭)부처협력 관광개발 포럼 정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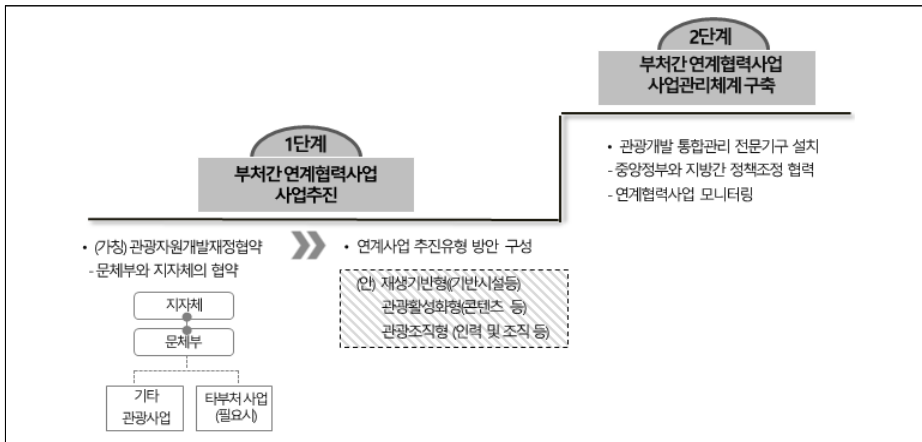
- 다양한 전문가, 공무원,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가칭)부처협력 관광개발 포럼을 정례화하여 상시적으로 모여 주요 공동 협력 정책을 논의하고 발굴하여 실제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칭)부처협력 관광개발 포럼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주제의 정책 포럼, 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공동 주최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관광-항공, 농어촌-관광, 산림휴양-관광, 해양문화-관광 등을 다양한 분야를 연계·협력하여 다양한 정책 주제로 추진할 수 있으며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DMZ 생태관광 국제세미나 등과 같은 관광개발 관련 국제회의의 공동주최 및 참가할 수 있음

##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 가. 추진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지역관광자원개발정책 추진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최근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지자체의 사업비 비중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sup>3)</sup>
-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내 관광거점공간사업의 규모와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양 사업인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관광자원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함
  - 1단계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자원개발재정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연계사업 유형방안을 검토함
  - 2단계 : 관광개발 통합관리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의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자원낭비, 상호 전략적 연계 등을 협력하며,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 접근



3) 제3장에서 추진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관광자원개발사업 지방이양이후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관심도 증가가 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나. 협약을 통한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 ① (가칭) 관광자원개발협약사업 추진

- 지자체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이양 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을 지역관광 공간개발계획으로 사전에 주도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함
-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거점형 관광지에 대한 확장(재생) 또는 활성화를 위한 공간 계획뿐만 아니라 타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가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 수립 등을 지원함
- 협약에 따라 지자체는 공간계획에 담은 내용을 추진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계획수립 지원(컨설팅 포함) 및 신규예산으로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비용 지원 등을 고려해볼수 있음
  -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성 검토를 통해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콘텐츠 및 인프라)을 지원함
- 협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협약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장·군수임
  - 시장·도지사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유연성과 민관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주체로 참여 가능함
-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시·군은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 이행임

### ② 연계사업 구성제안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다음 <표 4-1>과 같은 사업 분야 고려하여 추진 가능함
  -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구성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 가능함. 첫째 관광자원 인프라, 둘째 기반시설, 셋째 관광콘텐츠, 넷째 조직 및 인력구성 등을 포괄하여 구성함
  - 부처 연계사업은 사업대상이 되는 거점공간에 유관부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

- 중 에 있거나, 확정되었을 경우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부처사업 간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 가능함
- 또한,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운영관리측면에서 조직 및 인력은 지자체 예산사업 또는 기존조직 참여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등의 투자사업도 유치하여 사전에 계획내용에 반영함

〈표 4-1〉 관광자원개발공간계획 수립시 연계사업 구성(예시)

사업영역		대상 사업(예)
관광자원 인프라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사업 (시도군 편성사업)	• 관광자원개발사업(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국가여가캠핑장 조성 등 시설사업)
	• 유관부처 지방이양사업	•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지원 등
	• 부처 공모사업 등	• 해수부 어촌뉴딜 300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포함)
기반시설 (기초 인프라)	• 유관부처 지방이양사업 • 부처 공모사업 등	• 지역개발지원(예: 관광거점지역과의 교통연계를 고려하여 교량 및 도로시설 정비 추진)
관광콘텐츠 등	• 부처 공모사업 등	• 농림수산축산부 지역수요맞춤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포함)
	• 지자체 예산사업(시도군)	• 지자체 예산 관광사업
조직 및 인력	• 지자체 예산사업(시도군)	• 지자체 예산 관광사업
	• 부처 공모사업 등	• 국토부 도시뉴딜재생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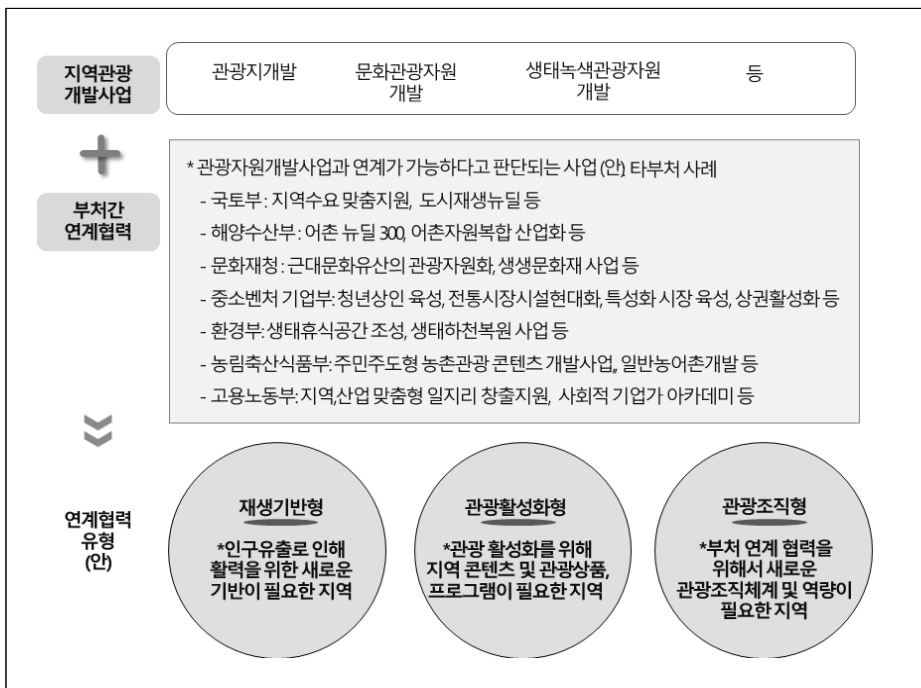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③ 사업추진 유형 제안

- 기존의 부처협력 사업들이 패키지 형태의 사업을 구성하여 제시한 수준이었다면, 협약에 근거한 계획수립은 지역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형에 맞게 구성하도록 제안 가능함
- (사업유형) 3가지 사업유형(예시)을 토대로 ① 기반시설 중심의 재생기반형 ② 관광활성화형 (콘텐츠, 프로그램, 시설 등 유형별 특화), ③ 관광 조직형 등으로 타 부처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음

- ‘기반시설 중심의 재생기반형’: 기존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가능하지 않은 규모이거나 유희공간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음
- ‘관광활성화형’(콘텐츠, 프로그램, 시설 등 유형별 특화): 지자체의 지역관광개발현황 및 진단을 통해 거점관광지 및 인프라는 잘 되어 있거나 군부지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기초지자체에서 선호함
- ‘관광조직형’(인력 및 조직 등)으로 이는 연계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며 지역내 자체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형을 제시함

[그림 4-3] 사업추진 유형 제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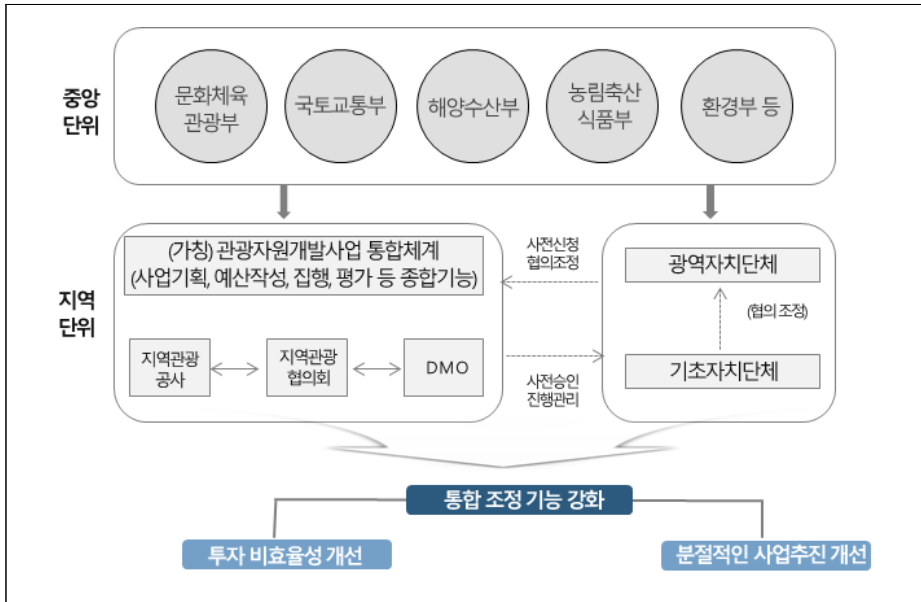
## 나.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관리체계 구축

### ① 관광개발 통합관리전문기구 설치·운영

- (1단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행조직간 협력이 중요하며, 각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는 관광관련 사업추진 실행기관인 공사·공단, 협·단체 등과 연합체를 구성, 각 기관별 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사전 연계·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함
  - 기존의 행정협의회, 지역관광협의회, 사업실행 전담조직 등을 활용하여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2단계) 중앙부처에 산재한 지역발전 관련 사무를 발굴, 통합·연계 관리하는 모형으로 향후,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통합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역협약 체결 및 예산지원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조정과 협력을 촉진함
  - 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체계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보다 중앙부처 간 단절과 분리의 문제가 심각,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해결에 선행적 요인 등 근본적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임
- 타부처 연계협력 사업을 위한 통합적 사업추진체계의 제도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 체계 단일화를 통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사업추진과 시·군 간 연계·협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투자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역시·도 단위에서의 중앙부처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능 필요함
- 관광자원개발사업과 타부처 간 연계 협력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기획능력 향상,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타부처 간 연계 협력 강화 등 정책 수용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의 구체성 및 적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예산 및 기간 확대 하는 등의 방안으로 공동기획의 질을 제고할 필요 있음
-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핵심 사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또는 우수성과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할 필요 있음

- 관광을 중심으로 주거, 고용, 지방 교통,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핵심사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함

[그림 4-4]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안)



## ② 부처간 협력사업의 지속적 관리운영 지원

- 기존의 부처 협력을 통한 관광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중간평가 이외에는 별도의 평가 또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처간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함
- 사업에서의 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는 해당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처간 협력에 신뢰를 형성하게 되며 이에, 사업 특성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과 지표를 설정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함

- 또한, 부처간 협력형 관광개발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사업 추진기간 동안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된 모니터링단 등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니터링과 환류체계를 구축함
  - 특히, 협력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유형에 맞는 측정지표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부진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
  - 또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모니터링의 순서로 피드백 등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모니터링은 전문가 모니터링 이외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체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함

〈표 4-2〉 협약에 근거한 부처간 협력사업 모니터링(안)

구분		주요 내용
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구성 방안	구성	· 위원장, 간사, 모니터링 외부 위원 등 ※ 부처협력사업 컨설팅지원단 구성인원과 연계하여 구성
	분야	· 관광자원개발 외 협력사업 관련 분야
모니터링 내용		·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진행 실적 점검 · 사업 개선 방안 지원 및 컨설팅지원단과 연계 컨설팅 지원 등
모니터링 항목		· 사업 현황: 사업 개요, 추진 경위, 사업 세부내용 · 사업 추진: 대상지 상황, 예산 집행 실적, 운영관리계획, 실행계획 현황 등 · 성과 점검: 단계별 추진목표 및 실적 성과,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광역관광개발 개선 방안 연구. 재구성



##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요약 및 결론

---

-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부처간 연계협력 등 정책 환경 변화의 시기에 관광분야의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음
  - 최근 타부처의 지역개발정책에서 지역발전 수단으로 관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관광분야의 부처간 연계협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특히 기존 관광자원, 관광시설 또는 관광지의 지속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추진되는 자원개발사업 유치를 통해 부족한 콘텐츠 사업 또는 기반시설 확장을 위해 부처간 연계협력이 제기됨
- 부처 간 연계협력은 개별부처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중복 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연계협력사업은 지역발전정책으로서 국비지원을 바탕으로 한 공모사업의 형태로 본격화되었고, 연계협력사업은 지역 및 부처간 유사·중복 투자 줄이고,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향함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유관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 소득 향상 등을 기반으로 ‘지역주도’,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함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 지원함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은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 현대화, 어촌 핵심 자원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함

- 농림수산물산부의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은 주민주도 상향식 농촌 관광 사업체계 구축으로 농촌관광 협의체 발굴 등 사업을 추진함
  - 농촌협약공모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함
-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처연계 사례는 부처 중심의 연계협력사업 사례와 지자체 중심의 연계협력사업 사례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부처 중심의 연계협력은 첫째, 협약 방식을 통한 부처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둘째, 통합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부처간 추진사업 분야와 역할을 정리하였음
  -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은 첫째, 단위 사업별 부처예산사업 중심의 퍼즐식 맞춤형 협력 사업방식, 둘째, 동일 사업부지 및 사업내용으로 부처간 예산 조달과정에 중복성 문제발생으로 성공사례에서는 사전기획 추진, 셋째,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별도전담 조직 운영, 마지막으로 부처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완성형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함
  - 이에 따라 향후 세 가지 측면에서 부처간 연계협력에 대한 접근이 요구됨. 첫째, 다양한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 수립 필요, 둘째,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지역관광개발사업 발굴, 셋째, 부처간 협력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통합운영 등 전담 조직이 요구됨
- 관광자원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부처간 연계협력의 추진에 대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응답(94.3%)을 하였으나, 실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연계협력을 추진한 경험은 20%로 낮게 나타남
  - 둘째, 부처간 연계협력을 추진 동기로 예산확보, 부족한 사업역량 보완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한 사업영역은 다양하게 조사되어 지역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연계사업이 필요함
  - 셋째, 한정된 지역관광개발예산을 고려한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협력이 요구되

며 이러한 협력은 인프라 분야, 콘텐츠 분야, 조직 및 인력 등과 연계하여 사업 간 중복성을 줄이고, 공간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함

- 넷째, 부처간 연계협력의 연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또는 통합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됨

■ 이를 통해 관광부문의 시너지를 위해 부처 간 연계협력 방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연계협력으로 구분하여 접근함

- 중앙정부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은 첫째, 부처간 연계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 둘째,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추진체계 구축임, 셋째, 부처간 연계협력 지원체계 구축임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은 첫째, 협약을 통한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통한 지원, 둘째,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제안함

구분	주요 내용
중앙정부 중심의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간 연계협력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범부처 관광협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li> <li>- (가칭)관광개발사업 사전검토 추진단 구성·운영으로 유사중복 사업 방지 추진</li> </ul> </li> <li>• 부처간 연계협력 사업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단계별 관광개발사업 협력추진 모델</li> <li>- 부처간 연계협력 가능한 사업영역 검토</li> </ul> </li> <li>• 부처간 연계협력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산하기관 간 공동 R&amp;D 활성화</li> <li>- (가칭)부처협력 관광개발 포럼 정례화</li> </ul> </li> </ul>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연계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을 통한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 관광자원개발협약사업 추진</li> <li>- 연계사업 구성제안 :관광자원 인프라, 기반시설, 관광콘텐츠, 조직 및 인력</li> <li>- 사업유형 제안 :재생기반형, 관광활성화, 관광조직형</li> </ul> </li> <li>• 부처간 연계협력사업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개발 통합관리전문기구 설치·운영</li> <li>- 부처간 협력사업의 지속적 관리운영 지원</li> </ul> </li> </ul>

## 제2절 정책제언

- 관광개발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연계·협력을 필요로 하나 부처간 협력추진을 위한 협력창구 미흡, 협업 의지 부족, 유사정책 추진 등으로 부처간 협력사업 추진은 쉽지 않음
  - 따라서 부처간 연계협력 추진 모델발굴에 앞서 정책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 등 다양한 성과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앞서 제시한 유관부처별 공동협력사업 모델 구축과 관련한 사전 연구와 기초자료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한 사례가 있는 관련부처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 심도있는 분석도 함께 진행되어야함
  - 부처간 연계협력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가 명확해야하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관련사업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가 다소 부족함
    - 앞서 제시한 협약을 통한 부처간 연계협력사업(가칭, 관광자원개발협약사업)의 경우 제도적 근거가 미비함
    - 기 추진 중인 관광개발관련 사업의 경우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근거로 두고 있으나 지속적 추진이란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계협력 사업의 경우 추진 근거법이 명확하여 지속적 사업추진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함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와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9조, 제38조 등에 근거함

- 농촌협약 공모사업,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의 사례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사업 기획 및 부처간 협력 거버넌스인 관광협업추진위원 구성을 함께 모색하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임



---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2018.3),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국회예산정책처(2010), 「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 김현호·김도형(2017),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지방행정연구원.
- 김향자(2016), 「지역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 I: 현황분석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진경·김선기(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김현호(2019), 「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2019.5),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정책브리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정민(2021.1.19.), 성큼 다가온 ‘자치분권’, 지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한국농어민신문」.
- 양진홍·이미영·정우성(2020),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국토정책브리프」 792호.
- 양연호(2019.12.11.), 예산 삭감 속 늘어난 ‘어촌뉴딜’…산책로·전망대·낚시터만 수두룩, 「매일경제」.
- 염철호·김은희(2013),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오훈성·김진영(2020),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관광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삼철·류남훈(2014),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전략 모색」, 충북발전연구원.
- 차미숙(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 지역중심의 국토발전전략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 최자은(2020), 「생활SOC의 관광활용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자은(2021),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관광협력 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03.15.), 어촌뉴딜 300.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2018.09)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2021),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보조사업(공모) 현황.
- 미래관광포럼(2017), 「관광정책의 확장과 전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수원시(2021), 수원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 서천군(2020), 서천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 정의당(2016), 「문화예술의 정의로운 전환 공약집(20대 총선 문화예술공약)」.
- 해양수산부(2021).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2018.3.22.),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18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2015.2.13.), 산단·관광·특화산업 등 투자선도 시범지구 공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2016.5.13.일자 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선도지구'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2015.5.14.), 개발+문화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2016.9.1.), 지역 맞춤형 국비지원으로 낙후지역 성장 촉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2017.8.23.), 태백·산청·영동 등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19개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2018.8.17.),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사업 18건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2019.7.3.),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국토부 4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2019.7.8.),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2020.7.9.),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2020.7.10.),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2021.8.2.),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20.2.26.),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6.17.), 2022년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정의당(2018.5.11.), 지방선거 문화 공약 발표(보도자료).
- 해양수산부(2018.12.18.), 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해양수산부(보도자료).
- 해양수산부(2019.12.12.),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해양수산부(보도자료).
- 해양수산부(2020.12.9.), 3년간 6천억 원 투입하여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해양수산부(보도자료).
- 해양수산부(2021.4.30.), 2022년도 어촌뉴딜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상생·화합’, 해양수산부(보도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2020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부 홈페이지
- 단양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홈페이지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정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 지침」



---

# ABSTRACT

## **A Study on Connected Cooperation (CC) among the Ministries Related to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Youn, Joo·Kim Jin Young

Recently, the tourism resource domains for local tourism development have expanded to daily lives, which were not considered as tourism resources in the past, as well as to tradition, history, and culture. And diversification, expansion, and convergence are becoming strong trends for tourism. To go along with the change in the policy environment, the central government has turned the direction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by the ministry toward a supportive project. As a result, the local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in the form of convergence into tourism.

While the central government-led projects implemented in local areas are various according to policy purposes, those policy projects are questioned for their effectiveness because they are promoted with a focus on a unit project in which target locations are overlapped or only facilities are developed.

Therefore,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Inter-ministry-Connected Cooperation (ICC) is addressed to set up a consistent direction for loc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prevent the overlapped investment among the ministries, strengthen ICC for effective performance and output, and create a synergic effect through the link among various departments rather than independent local tourism development.

In this respect, the author finds a way to promote ICC to enhance efficiency and create the synergic effect for the tourism sector in developing a loc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under the environment facing the demand for decentralization and locally balanced development.

First,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local development policy, analyzes the cases of local development policy projects implemented by related ministries, which could be supported through the ICC for local tourism, understands the trends of local development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and derives the project sectors and modes of cooperation by ministry, which can be connected with local tourism development.

Second, this study diagnoses the current status of local tourism development by investigating the cases on local development including local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and similar local development projects driven by other ministries, and find out the antecedents to successful CC.

Third, this study conducts a precedent study and case studies to propose a plan to promote ICC in implementing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The plan for ICC can be divided into ① the central government-led ICC ② the local government-led ICC. First, the plan for the central government-led ICC requires the full-cycle cooperation system.

In Stage 1, an interdepartmental tourism collaboration promotion committee should be organized to lay the ground for a CC project and draw up the issues for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In Stage 2, an ICC-based tourism model should be materialized to establish a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system should be operated and managed through the division of roles among the related departments. In Stage 3, a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integrate, continuously evaluate, and monitor ICC projects. Second, the local government-led ICC should be aimed to develop a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that is transferred to the local authority and a local development project promoted by related departments into a tourism resources spatial plan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In Stage 1, policy-level cooperation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financial agreement for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 types of connected business projects should be reviewed. In Stage 2, an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ourism development should be formed to prevent the overlapped

investment in a local tourism development project, promote mutually connected cooperation, and monitor CC projects.

**Keywords**

Connected Cooperation,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decentralization, locally balanced development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부록

설문지



## 【부록】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조사

###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의견조사는 정부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중인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귀 지자체 지역관광개발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지만, 귀하의 그 동안의 정책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제34조(통계작성종사자들의 의무)에 의거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KCTI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21.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의처 및 회송방법	<p>◆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p> <p>◆ 문의처/ 회송주소: 윤주 연구위원 /김진영 연구원</p>
---------------	---

■ 설문에 응해주신 분께는 답례품(온라인 상품권)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기재하여 주십시오.

성명		핸드폰 번호	
소속	(시/군/청) (과)	이메일 주소	
근무 연수	① 1년 미만    ② 2~3년 미만    ③ 4~5년 미만    ④ 5~10 미만    ⑤ 10년 이상		
주소	( - )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귀하의 연령은?	① 만 19~29세	② 만 30~39세	③ 만 40~49세	④ 만 50세 이상

## ■ 관광자원개발 사업 지방이양 현황

- 2020년부터 '관광자원개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역자율계정)' 예산 지방으로 이양

구 분	사업 내용
관광지 개발	• 관광진흥법 제 52조에 따라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 공공기반시설(도로, 주차장, 상수도, 오수처리장, 화장실 등)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조성
문화관광자원 개발	• 지역의 역사·문화·레저스포츠 지원 등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 친환경 생태 녹색관광 기반조성을 위해 생태계우수지역(갯벌, 철새, 동굴, 습지, 화석 등)의 자연과 관련 문화자원의 관찰, 체험시설 조성
국가여가캠핑장 조성	• 야영장 등의 숙박시설과 취사장, 화장실, 운동·놀이시설 등의 공공편의시설 등을 갖춘 쾌적하고 저렴한 가족단위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숙박시설 육성을 위해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조성 *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한정
관광안내체계 구축	•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정보제공을 위한 안내소,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제외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한 탐방로 노선정비, 안내체계구축, 안내체계구축, 안전 및 편의시설, 탐방로 내 관광자원 정비, 관광자원정비, 쉽게걷는 길(장애인 및 노약자용) 조성

## ■ 부처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사례 [예시]

정부부처	추진사업	사업 특징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대상 지원 사업 • 하드웨어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 산업,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적 전략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투자선도지구	•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도시재생뉴딜	•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쇠퇴한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활성화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해수부	어촌뉴딜300	•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국가어항 제외 사업)
농림부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 농업유산, 체험목장, 양조장, 농촌체험마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 농촌 고유의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농촌관광협의체 지원
	농촌협약공모사업	•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 지역관광개발사업 연계협력 의미

-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시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지방이양사업 또는 부처 지역 개발사업(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I 부처 지역개발사업(공모사업) 참여 및 연계협력 추진**

문1) 귀 지자체에서 지역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이양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이양 되기 전과 비교**하여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비슷하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	①	②	③	④	⑤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지방이양 이전 보다 용이해졌음	①	②	③	④	⑤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높아졌음	①	②	③	④	⑤
관광자원개발사업은 향후 지자체 포괄보조금 예산비중이 증가할 것임	①	②	③	④	⑤

문1-1) 지방이양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에서 응답하신 내용과 관하여 **귀하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작성:

문2) 귀 지자체에서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지역개발사업(공모사업, 지방이양사업)과 연계협력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치 않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3) 귀 지자체에서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와 내용이 유사**하여 **지방이양사업과 부처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연계협력하여 추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① 예(3-1로 이동)      ② 아니요(문4로 이동)

문 3-1) 귀지자체에서 **연계협력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된 동기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해 주세요(      ,      )

- ① 예산 확보      ② 부족한 사업역량 보완      ③ 새로운 사업 파트너 발굴  
④ 연계협력 경험 및 노하우 축적      ⑤ 중복사업(예산) 조정      ⑥기타(작성:      )

문 3-2) 귀 지자체에서 추진한 지방이양사업과 부처 지역개발사업(공모사업) 또는 부처 지역개발사업간(공모사업+공모사업) 연계협력한 내용을 아래의 표(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예시>

구성	인프라 조성	콘텐츠 발굴/운영	조직 및 인력양성	기타 (예: 홍보 등)
지방이양사업 (문체부 및 타부처)	예) OO 전시관 조성 (문화관광자원개발) 예) OO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도로 및 교량 확충(지역개발지원)			
부처 공모사업 (문체부 및 타부처)	예) 야영장 및 주차장 조성 (지역개발수요맞춤) 예) OO 관광지 탐방로 개선(열린관광지 조성)	예) OO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예) 관광두레PD 예)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 뉴딜)	
지자체 추진		예) OO 축제운영	예)행정협의회 구성	예) 문화재단 홍보사업 연계

<작성>

구성	인프라 조성	콘텐츠 발굴/운영	조직 및 인력양성	기타 (예: 홍보 등)
지방이양사업 (문체부 및 타부처)				
부처 공모사업 (문체부 및 타부처)				
지자체 추진				

문4) 귀하께서는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이양사업(문체부+타부처) 또는 부처 지역  
개발사업(공모사업)과 연계협력에 대한 아래의 의견에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타부처 지역개발사업 내용에 관광관련 사업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계협력 필요	①	②	③	④	⑤
변화하는 지역관광개발 트렌드를 고려하면 관광자원개발사업 만으로는 부족	①	②	③	④	⑤
최근 정부정책 추진 방향이 다부처 연계협력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①	②	③	④	⑤
한정된 지역관광개발예산을 활용함에 있어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는 중요	①	②	③	④	⑤
사업대상지/사업내용 등 중복성 문제와 관련하여 연계협력 추진은 사전예방 효과	①	②	③	④	⑤
기타의견:					

문5) 귀하께서는 지방이양사업(문체부+타부처) 및 부처 지역개발사업(공모사업)과의 효율적 연계  
협력을 위해 제도적 또는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에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처 지역개발사업과 관광자원개발을 연계협력하기 위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내 전담기구 필요	①	②	③	④	⑤
부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부처별 사업추진 절차간소화 및 연속적 추진 필요	①	②	③	④	⑤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신규 사업(예: 협약사업 등) 발굴 필요	①	②	③	④	⑤
연계협력 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중복추진 예방 등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①	②	③	④	⑤
지역관광개발사업 연계협력의 성공 사례발굴 및 추진방법 등 정보 공유/확산	①	②	③	④	⑤
연계협력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운영위한 사후 관리방안 필요	①	②	③	④	⑤
현행 연계협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연계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	①	②	③	④	⑤
기타의견:					



윤주.김진영(2021),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http://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35>

